

한국 시민사회의
새로운 흐름에 대한
질적 면접 연구



아름다운재단 기획연구
2022



한국 시민사회의 새로운 흐름에 대한 질적 면접 연구

아름다운재단 기획연구

2022. 10. 3

신 진 욱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목 차

I. 서론	005
II. 선행연구와 이론적 기초	009
1. 시민사회 현황에 관한 선행연구	011
2. 이론적 기초와 분석틀	013
III. 연구 설계	017
1. 연구 방법	019
2. 연구 대상과 면접 내용	022
IV. 심층면접 분석결과	031
1. 활동의 계기와 문제의식	039
2. 새로운 활동과 단체의 특성	047
3. 성장의 동력과 한계, 대외적 연대	055
4. 협치와 사회적 경제	066
5. 지역의 현실과 미래	073
6. 코로나19가 시민사회에 미친 영향	078
7. 지속가능성을 위한 과제	082
V. 초점집단면접 분석결과	089
1. 초점집단 A	092
2. 초점집단 B	101
3. 초점집단 C	111
4. 초점집단 A, B, C 비교	120
VI. 결론과 제언	123
참고문헌	129

한국 시민사회의 새로운 흐름에 대한 질적 면접 연구

아름다운재단 기획연구

I. 서론

I. 서론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 시민사회에서 2010년대 이후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운동과 시민 활동들의 현황과 특성, 발전의 원동력, 극복해야 할 문제들을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풍부하고 심도 있게 드러내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이 연구는 향후 시민사회 단체와 공익 활동들의 지속가능성과 정치사회적 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토론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시민사회에 대한 민간과 공공의 지원을 더 효과적으로 만들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연구는 2010년대 이후 지난 10여 년 동안 한국에서 시민사회 활동과 사회운동의 의제와 조직형태, 활동방식, 또는 참여와 소통방식을 혁신하는 데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평가할 만한 전·현직 활동가를 만나서 개별 심층면접을 수행했다. 그에 이어서 사회운동, 민관협력 거버넌스, 사회적 경제 부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온 활동가들을 각기 다른 집단으로 구성하여 초점집단면접을 수행했다.

아름다운재단에서 이 연구를 처음 기획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시민사회의 위기 상황을 심층적으로 이해해야 할 긴급한 필요에서였다. 코로나19는 인류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보건의료상의 위기였을 뿐 아니라, 경제, 고용, 소득, 돌봄, 교육, 공동체적 유대 등 사회의 모든 분야에 커다란 충격을 가하는 총체적인 사회적 위기 상황이었다. 따라서 코로나19 위기가 계속된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개인들의 삶의 위기가 여러 면에서 심화되었을 뿐 아니라, 특히 사회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집단이 더 큰 고통을 겪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 상황을 가장 민감하게 감지하고 사회적인 이슈, 정치적인 의제로 부각시켜 공동체의 해결책을 만들어가야 할 시민사회 단체들조차 코로나19의 방역 체제 하에서 대면적 만남과 일상 활동에 커다란 제약을 받았다. 단체들은 정기적인 공익사업과 홍보, 참여자 모집 활동을 중단하거나 크게 축소해야 했고, 단체 구성원들 간의 소통과 결속이 약화되는 경험을 해야 했으며, 단체 재정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사업과 유급 활동가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기도 했다.

더욱 중요한 점은,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에서 그동안 한국 시민사회 단체들과 지역 시민공동체들이 갖고 있었던 여러 취약점과 지속가능성의 문제들이 더욱 날카롭게 드러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코로나19는 특히 조직 규모가 작고, 설립된 지 오래되지 않았으며, 인적·재정적·사회적 자원이 충분치 않은 신생 단체들에게 강한 충격을 주었다. 뿐만 아니라 보다 넓은 정치사회적 환경을 본다면, 지난 몇 년 사이에 시민들의 공동체적 삶과 참여활동이 침체되었고 그러한 사회 전반적인 위축이 시민사회 운동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와 같은 여러 고려 끝에, 연구 대상을 코로나19 발발 이전 시기까지 확대하여 2010년대 이후에 한국 시민사회와 사회운동 부문에 일어난 새로운 흐름들의 동기와 성취, 잠재성과 문제점을 폭넓게 탐구하

한국 시민사회의 새로운 흐름에
대한 질적 면접 연구

아름다운재단 기획연구

II. 선행연구와 이론적 기초

1. 시민사회 현황에 관한 선행연구
 2. 이론적 기초와 분석틀
-

II. 선행연구와 이론적 기초

1. 시민사회 현황에 관한 선행연구

한국의 시민사회는 1987년 민주화 이후에 1990년대를 경과하면서 시민운동과 조직노동의 비약적인 발전이라는 커다란 변화를 경험했고, 이 시기에 성장한 단체들과 참여주체들은 이후 한국에서 시민사회라는 제도적 장의 지배적 가치와 담론, 규범, 행동양식을 규정하는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 특히 2010년대 이후에 한국 시민사회의 거시적 지형에 의미심장한 변화가 진행되었다. 민주화 이후 십여 년 내에 설립된 시민운동 단체들은 지금도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전체 시민사회의 장은 그 사이에 더욱 확장되고 다양화되어 과거보다 훨씬 더 복잡한 구성을 갖게 됐다. 특히 지난 십여 년 사이에 사회운동과 민관협치, 사회적 경제, 지역 주민운동 등 다양한 부문에서 일어난 새로운 흐름들은 한국 시민사회의 거시적 질서를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가 한국 시민사회의 발전을 뜻하는지, 아니면 약화를 뜻하는지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상이한 평가가 있다. 한편에서는 시민사회 단체들의 정치사회적 영향력 감소와 사회적 신뢰 약화, 사회변화를 위한 공익활동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정의 약화, 정부 지원에의 종속과 독립성 약화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임지은·김석호, 2018; 하승우, 2020; Choi, 2020).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2000년대 이후 시민사회 단체 수의 급증과 다양화, 공식적·비공식적 단체와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한 시민참여의 저변 확대, 노동·페미니즘·기후행동 등 청년 주체 사회운동의 성장, 풀뿌리 주민자치 활동의 증가 등 확장 추세를 주목하는 관점도 있다(공석기·임현진, 2016; 정상호, 2020; 주성수, 2017; Shin, 2022).

그러나 이처럼 상반된 강조점들은 근본적인 관점의 대립이라기보다는, 입체적 현실의 여러 측면을 각기 다른 각도에서 조명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2000년대 이후 한국 시민사회에서는 거시적, 미시적 수준에서 그 함의가 복합적인 변화 경향이 동시에 진행되어 왔으며, 그러한 긍정적·부정적 요소들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복합적인 양상들 중에서 어느 한 부문을 간과하지 않으면서 현실의 문제점과 미래를 위한 긍정적 잠재성을 균형 있게 인식하고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신진욱·정보영, 2022).

한국 시민사회 단체 수의 양적 규모는 2000년대 이후 크게 팽창했고, 그 안에서 조직형태와 활동부문이 분화되고 다양화되어왔다(공석기·임현진, 2016; 정상호, 2020; 주성수, 2017; Shin, 2022). 또한 2010년대 이후로 시민사회 행위자들은 정치, 행정, 기업 부문과 점점 더 활발히 교류하면서 민관 협치

현황과 특성, 문제점과 잠재력을 보다 체계적, 포괄적, 심층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긴급한 장·단기적 이유를 갖고 있다. 여기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이 연구의 중요한 토대이기도 하지만 한계를 가지고 있다. 대다수의 선행연구는 설문조사 결과나 공식 통계자료를 이용한 분석이고, 간혹 질적 면접 연구가 있지만 개방형 질문에 대한 응답을 기록한 것일 뿐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학문적인 질적 연구 방법론에 입각하여 체계적인 연구 설계, 수행, 분석을 수행한 이 연구가 기여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2. 이론적 기초와 분석틀

‘시민사회’라는 개념은 ‘비영리’, ‘제3섹터’ 등과 같은 인접한 개념들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사회적 ‘장(field)’, ‘부문(sector)’, ‘공간(spheres)’을 가리킨다(Edwards, 2011; Powell and Anheier, 2006; Salamon and Anheier, 1997; Taylor, 1990; Walzer, 1996). 시민사회라는 장 안에서 행위하는 구성원들은 예를 들어 소통·상호성·공동선·사회적 연대 등과 같은 시민사회적 규범과 가치, 행동규칙 등을 공유한다(Alexander, 1998). 비영리나 제3섹터는 공식적, 민간, 비영리, 자율성, 자발적 참여 등을 중요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고 이론화되고 있다(Salamon and Anheier, 19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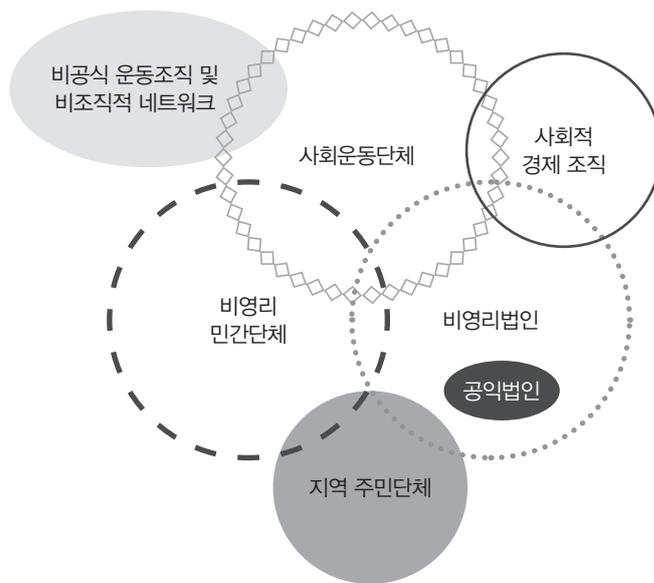
이처럼 시민사회는 정치나 시장 부문과 구분되는 고유한 행위목표와 규범, 가치를 공통적 특징으로 하는 사회적 공간이지만, 그것은 또한 다양한 행위자들이 상호작용하며 관계 맺고 공존하는 다원적 공간이기도 하다는 사실이 간과되어선 안 된다(Edwards, 2011; Jensen, 2006; Taylor, 1990; Walzer, 1992). 그러므로 우리는 한편으로 시민사회를 정부·시장 등 다른 제도적 부문과의 차이체계 속에서 이해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시민사회 내의 다양한 하위부문들 간의 차이와 관계를 세심하게 포착해야 한다.

한국의 학계에서도 그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 시민사회의 지형도를 거시적 시야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여러 시도가 지난 수 년 동안 꾸준히 이뤄져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사회운동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풀뿌리주민공동체 등과 같이, 그 의미가 동일하지 않은 별개의 개념 이면서도 현실에서는 부분적으로 중첩되는 부문들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려고 노력해왔다(박상필, 2013; 박병춘, 2015; 공석기·임현진, 2016; 공석기·유지연, 2017; 주성수, 2020; 신진욱, 2019; 신진욱·정보영, 2022).

한국 시민사회의 내적 다원성을 파악하기 위한 제도적 분류체계에는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풀뿌리 주민공동체 등 다양한 조직형태가 포함된다(공석기·유지연, 2017; 김소연 외, 2020). 이러한 개념들이 지시하는 대상들이 현실에서 서로 어떤 관계에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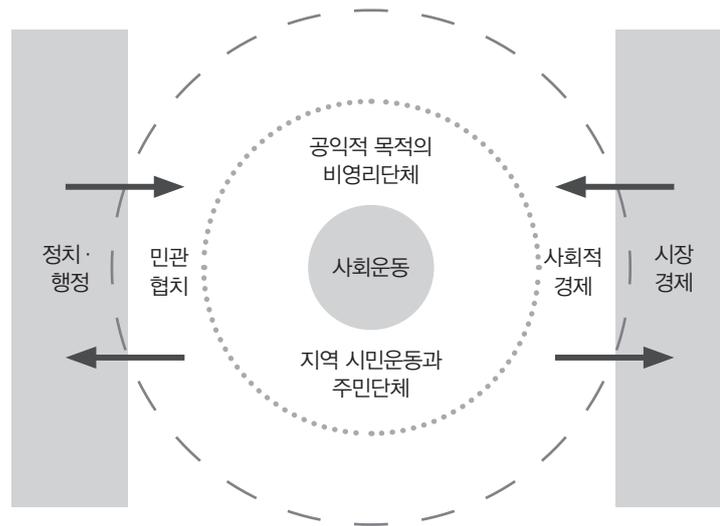
는지를 하나의 그림으로 정리하자면 아래의 <그림 1>과 같다(신진욱·정보영, 2022: 108). 여기서 우리는 한편으로 원으로 표현된 각 부문의 고유한 특성을 분별하고, 다른 한편으로 부문들이 중첩되는 영역의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회운동 단체는 명백히 시민사회에 속하는 조직이며, 사회적 경제 조직 역시 일정 정도 시민사회 구성원으로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사회운동 단체는 사회개혁이라는 목표를 본질로 하는 데 비해, 사회적 경제는 구성원의 영리 추구하고 사회적 가치 추구가 병존한다. 양자가 중첩되는 교집합 영역의 대표적 예는 사회운동적 목표를 강하게 갖고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 또는 사회운동 단체의 주체들이 운동의 재정기반으로 설립한 일반협동조합 같은 사례일 것이다.

<그림 1> 시민사회 하위부문 간의 개념관계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이 같은 다양한 조직형태들은, ‘시민사회’를 정부 및 시장과 구분하는 본질적 특징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각기 다른 구조적 의미를 갖고 있다. 시민사회를 공익성, 공동선,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개인들의 자발적 결사체들의 공간이라고 이해했을 때, 사회운동이야말로 그 원리를 가장 강도 높게 충족하는 부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와 달리 일상적인 사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기구들은 그러한 시민사회 이념을 공유하지만, 이들과 마찬가지로 공익적 목적을 가진 공공기관들과 제도적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도 많다. 또한 사회적 경제 조직이 영리적 성격이 더 강한 경우, 또는 지역 주민단체가 참여자들만의 제한된 공익성을 추구하는 경우도 시민사회 이념을 구현하는 강도가 약하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시민사회, 정부, 시장 간의 거시적 관계에서 시민사회 원리를 얼마나 높은 강도로 추구하는지를 기준으로 각 조직형태를 분류하면 아래의 <그림 2>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신진욱·정보영, 2022: 109).

〈그림 2〉 시민사회·정부·시장 간 관계 속에서 본 시민사회의 구성



2000년대 이후에 한국 시민사회의 장에 몇 가지의 중대한 구조적 변화가 일어났다. (1) 시민사회의 핵심인 사회운동 부문에서 1987년 민주화 이후 십여 년 사이에 설립되어 성장했던 시민·노동운동 단체들은 이후 급격히 확장되고 다양화된 시민사회의 새로운 구성원들의 목표, 규범, 행동에 과거와 같은 영향력을 갖지 못하게 되었다. (2) 사회운동 부문에서 2010년대에 들어서 청년 세대가 주도하는 새로운 운동과 단체들이 노동, 주거, 페미니즘, 기후 등 여러 의제 영역에서 성장하여 전국적 수준의 독자적 조직생태계와 인적 연결망을 형성하였다. (3) 정부·시장 및 시민사회 부문의 이질적 행위원리가 혼종되는 제도적 접경지대라고 할 수 있는 민관협치와 사회적 경제 부문이 확장되면서 전체 시민사회 장의 구성이 변화하였다. 여기서 (2)와 (3)의 변화가 한국 시민사회 전반에 미친 영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라는 질문과는 별개로, 이 새로운 흐름들을 이해하는 것이 전통적인 시민·노동단체들을 포함한 모든 시민사회 구성원들에게 지금 특별히 중요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 연구의 면접참여자들은 〈그림 2〉에서 원의 가장 중심에 있는 사회운동 부문의 새로운 흐름을 주도한 활동가들, 그리고 큰 원의 좌우 양쪽에 위치한 민관협력 거버넌스와 사회적 경제 조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핵심 활동가들이다. 사회운동 부문에서는 2010년대 이후로 새로운 주체, 의제, 활동방식을 개척한 단체를 설립한 인물들, 그리고 사회적 경제 부문에서는 협동조합(일반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생협 포함)과 정부·지자체의 민관협치 기구에 참여했거나 종사한 인물을 선정했다. 아래의 Ⅲ장에서는 이상과 같은 이론적 근거에 기초하여 구상한 연구 계획을 어떤 방법론적 원리와 방법적 기술에 의해 구현했는지를 설명한다.

한국 시민사회의 새로운 흐름에 대한 질적 면접 연구

아름다운재단 기획연구

III. 연구 설계

1. 연구 방법
 2. 연구 대상과 면접 내용
-

Ⅲ. 연구 설계

1. 연구 방법

이 연구는 사회과학에서 ‘질적 연구(qualitative research)’라고 부르는 방법론적 원리에 입각해 있다. 질적 연구 방법론의 흐름들은 해석학, 현상학, 구조주의, 프래그머티즘, 포스트모더니즘 등 상이한 철학적 전통의 존재론과 인식론을 각자의 방식으로 계승하면서 결합시켜왔다. 그러한 이질성에도 불구하고 질적 연구의 여러 흐름은 그들을 통계적 방법론과 구분 짓는 일련의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중 하나는 연구 목적에 비추어 특별한 중요성을 갖는 제한된 수의 대상을 심층 분석하는 것을 통해 더 넓은 사회세계에 대한 함의를 도출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이다. 그와 달리 통계적 연구는 다량의 대상들의 속성을 파악하거나, 대규모 모집단에서 무작위로 대표성 있는 표본을 추출하여 그 표본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것이 속한 모집단의 속성을 추론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그러므로 양적 연구는 ‘넓은’ 사회세계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분포와 관계를 알아내는 데에 유용하다면, 질적 연구는 사회세계 내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 대상을 ‘깊이’ 이해하는 데에 유용하다.

그러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에서 각각 연구대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 얻어낸 결론이 어떤 인식론적 위상을 갖는지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통계 연구에서는 어떤 모집단의 속성에 대해 대표성(representativeness)을 갖는 표본을 폭넓게 추출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질적 연구는 연구 목적에 이론적 적합성(relevance)이 높은 제한된 수의 특별한 대상을 선정하여 심층 분석하는 데에 관심이 있다(Flick, 2010). 또한 실증주의 전통의 학문은 모든 대상에 적용될 수 있다는 의미의 일반화 가능성(generalizability)을 중시하지만, 질적 연구에서는 그 연구의 대상과 유사한 조건에 있는 다양한 사회적 맥락들에 함의를 줄 수 있다는 의미의 확장 가능성(transferability)이 기준이 된다(Guba and Lincoln, 1989). 요약하자면, 질적 연구는 특별한 중요성을 갖는 사례를 선정하여 심층 분석을 하며, 거기서 얻은 결과의 함의는 독자들이 각자의 구체적 맥락에서 재해석해야 한다.

이 연구는 사회운동, 협동조합, 협치 기구, 지역 시민운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2010년대 이후 새로운 주체, 의제, 활동방식, 조직형태, 참여모델, 연대방식을 창안하고 확산시키는 데에 기여해온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한국 시민사회의 현황과 변화에 대한 그들의 경험과 의견을 조사한다. 이 목표를 위해서 이 연구는 심층면접(in-depth interview)과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s Interview: 이하 FGI)의 방법을 사용했다. 양자의 결합방식은 두 방법을 병렬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차적으로 심층면접을 먼저 수

이 영역을 조금이라도 아는 독자는 쉽게 이 연구의 면접참여자와 그가 속한 단체, 그동안 관계했던 단체들을 추정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단체에 어떤 내부 갈등이 있었는지, 어떤 단체의 설립 멤버들이 다른 단체들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갖고 있었는지, 어떤 단체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지 등, 많은 민감한 정보가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그런 부담을 안고 면접을 한다면 면접참여자들은 매순간 발언하는 내용이 공개되어도 좋은 내용일지 스스로 검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 한국 시민사회 활동과 사회운동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과 제언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없다.

이 연구는 그러한 장애를 분명히 제거하고 완전한 익명성을 보장하여, 그동안 공적인 공간에서 이야기하기 힘들었던 모든 경험과 생각을 솔직하게 나눌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최우선의 중요성을 부여하였다. 이런 고려 하에 이 연구는 특정한 단체와 운동, 참여자들의 서사를 하나의 총체적 사례로서 서술하는 방식의 커다란 매력을 포기하는 대신에, 주어진 질문에 대해서 여러 면접참여자들이 발언한 내용들을 개념적으로 추상화한 코드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이론을 형성하는 데에 집중하였다. 이 같은 목적과 약속에 충실하기 위해서 보고서의 서술에서도 독자가 본문에 언급되는 단체 또는 면접참여자를 추정할 수 없게끔 하기 위해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으므로, 독자들은 이 점을 감안하여 본문을 읽으면서 공연한 추측을 하지 않길 당부한다.

2) 초점집단면접의 설계와 분석

한편 초점집단면접(FGI)은 개인이 아니라 집단을 대상으로 면접을 수행한다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집단면접(group interview)의 한 형태이지만, FGI는 단순히 여러 사람을 동시에 면접하는 것과 질적으로 구분되는 특수한 목적과 방법, 그리고 효용을 갖고 있다. FGI는 연구목적에 대해 내용적 타당성을 갖는 명확한 기준에 따라서 복수(複數)의 초점집단(Focus Group)을 각각 동질적 구성원들로 구성하고, 연구목적에 관련되는 토픽들에 관해 각 집단의 대화 내용과 상호작용 과정을 비교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Krueger and Casey, 2009; Morgan, 1998; Stewart and Shamdasani, 2015). 이 연구에서는 사회개혁적 지향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으면서도 ① 사회운동 단체, ② 협치 기구, ③ 사회적 경제 부문에 각각 깊이 관여해 온 활동가들로 3개의 초점집단을 구성하여 각 집단의 특성을 비교하였다.

FGI 결과의 분석에서도 위와 같은 FGI의 특수한 목표와 효용에 상응하는 분석 목표와 기법이 요구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만약 각 집단의 구성원들의 발언 내용을 따로 떼어서 분석한다면, 개별 면접을 시간만 단축하여 여러 번 수행하는 것과 차이가 없게 된다. 그와 달리 FGI의 분석에서 중요한 것은 집단적 특성인데, 두 가지 가장 중요한 방법적 목표는 첫째, 집단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내는 것과, 둘째, 각 집단 내에서 대화가 전개되는 상호작용의 집단역학(group dynamics)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 같은 목표를 위해서는 발언내용을 코딩하고 개념적으로 추상화하는 것보다는, 순차적 분석(sequential

analysis)으로 상호작용 과정을 관통하는 잠재적 의미구조(latent meaning structures) 또는 그 내부의 모순과 균열을 발견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신진욱, 2008; Wernet, 2006).

V장에서 FGI의 인용 출처를 표시한 기호는 MAXQDA 자료의 위치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FG-C: 172)는 초점집단C의 녹취록에서 172번째 문장이라는 뜻이다. 해당 문장이 어느 참여자의 발언인지는 본문의 서술 안에 명시했다. IV장 심층면접의 경우에는 본문에 서술한 각 내용이 녹취록 원자료의 어느 부분에 대한 코딩에 해당하는지를 MAXQDA 시스템에서 쉽고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연구자의 자료 해석과 범주화 작업이 구체적으로 어느 면접 내용들에 근거한 것인지를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필요한 경우에 추가 분석을 수행하거나 발언 내용을 직접 인용하여 메시지를 보다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다.

2. 연구 대상과 면접 내용

양적 연구에서나 질적 연구에서나 연구대상의 선정은 연구결과의 질에 대단히 중요하지만,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에서 연구대상의 선정이 중요한 이유는 다르다. 양적 연구에서는 표본이 모집단에 대한 대표성(representativeness)을 갖게 만들기 위해 최대한 무작위성(randomness)을 충족시키도록 표집을 해야 한다면,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에 대한 이론적 적합성(relevance)이 높은 대상을 선정하여 정보의 풍부함(information-richness)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목적의식적 표집(purposive sampling)을 한다(Flick, 2010; Patton, 2014). 통계적 연구에서는 비일관된 표집이나 체계적 편향이 발생하는 표집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면, 질적 연구대상의 선택에서는 편의적인 표집을 최대한 극복하고 가능한 한 연구목적에 대해 특별한 중요성이 있는 참여자를 모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면접참여자 선정 과정은 다음과 같은 세 단계의 절차를 밟았다. (1) 연구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면접참여자 후보군을 최대한 많은 수로 폭넓게 선정한다. 이를 위해 주요 단체들의 목록, 각 단체의 핵심 멤버들의 목록을 작성한 다음에, 이 연구의 목표와 이론틀에 따라 부문, 연령, 성별, 지역 등을 고려하여 후보군을 선별했다. (2) 언론 보도, 인터뷰 기사, 단체 문서, 시민사회 각 부문 활동가들에게 문의 등 모든 가능한 자료와 방법을 활용하여 후보군 개개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섭외 대상을 선정했다. (3) 섭외대상에 연구자가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연구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 의사를 보였으며, 면접 주제에 관해 많은 경험과 의견을 갖고 있고, 활발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을 최종적으로 면접참여자로 선택하였다.

1) 개별 심층면접

이 연구의 심층면접에서는 아래의 몇 가지 기준을 가장 포괄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면접참여자를 모집하고 선택했다. 아래의 기준에 따라 먼저 100여 명 가량의 후보군을 선정하고, 후보자들의 그동안의 활동 경력과 개인적 특성을 조사하여 최종적으로 총 26명을 선정했다. 총 23회의 심층면접 조사를 실행했는데, 이중 3회는 2명의 면접참여자가 함께 참여했다.

- ❶ II장에서 서술한 2010년대 이후 한국 시민사회의 새로운 흐름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 단체들의 설립 멤버 또는 핵심 활동가들을 면접참여자 후보군으로 선정한다.
- ❷ 활동의 주체, 의제, 담론과 정체성, 활동방식, 조직 모델, 참여 모델, 연대 모델 등의 측면에서 혁신 사례를 창출하는 데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온 인물을 주목한다.
- ❸ 시민 노동운동 단체, 협동조합, 청년단체, 지역 기반 시민단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민관협력 거버넌스 기구 등 다양한 부문에서 활동해온 사람들을 골고루 포함한다.
- ❹ 다양한 지역의 경험과 현황을 청취하기 위하여 서울, 경기, 영남, 호남, 강원, 제주 등 여러 지역에 거점을 둔 활동가들을 균형 있게 선정하며, 대도시 쏠림도 최소화한다.

아래의 <표 1>은 개별 심층면접 참여자들의 일련번호, 활동 의제 분야, 성별, 간단한 활동 이력, 인터뷰 날짜를 정리한 것이다. 활동 이력에서 면접참여자를 추정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단체명, 세부적 의제 부문, 직위 등 구체적인 정보는 포함하지 않았다. 면접참여자의 연령대는 대부분 2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사이인데, 정확한 연령을 표기하면 표에 제시된 다른 정보들과 조합했을 때 쉽게 신상이 드러나기 때문에 표에 포함하지 않았다. 발언 내용의 맥락과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개인정보는 본문에서 간접적으로 언급했다.

〈표 1〉 개별 심층면접 참여자 목록과 면접 시행 내역

참여자 번호	의제 분야	성별	활동 이력 (과거와 현재)	면접 날짜
1	청년, 노동	여	노동운동, 지자체 청년정책 기구, 청년지원 기관	2021. 12. 16
2	주거, 청년	남	청년복지 사회운동 단체, 사회권 공익단체	2022. 2. 9
3	복지, 청년	여	지자체 청년지원 기관, 사회운동 단체	2022. 1. 20
4	복지, 청년	여	청년복지 사회운동단체, 지자체 청년지원기관	2022. 6. 21
5	노동	남	노동운동 단체, 불안정노동자 노동조합	2022. 3. 23
6	노동	남	학생운동, 사회운동 단체, 사회이슈 매체	2022. 6. 21
7	성소수자, 청소년	남	인권운동 단체, 공익활동가 지원기관	2022. 1. 5
8	페미니즘, 노동	여	비정규노조 활동가, 페미니즘 운동단체	2022. 1. 25
9	페미니즘	남	페미니즘 운동단체	2022. 2. 23
10A	기후	여	기후행동 단체, 기후위기대응 정부기구	2022. 2. 4
10B	기후	여	기후행동 단체, 기후위기대응 정부기구	2022. 2. 4
11	문화, 지역(부산)	남	문화예술운동 단체	2022. 1. 3
12	인권, 정치	남	시민운동 단체, 진보정당 활동	2022. 6. 17
13	청년, 지역(제주)	남	청년운동 단체, 청년정책 관련 정부기구	2021. 12. 17
14	청년, 지역(경기)	여	청년운동 단체, 정부·지자체 청년정책 기구	2022. 2. 23
15	청년, 지역(부산)	남	협동조합, 지자체 사회적기업·청년정책 지원기관	2021. 12. 28
16	청년, 정치	여	청소년 인권운동, 청년정치 지원단체	2021. 12. 20
17A	지역(서울), 청년	여	지자체 청년정책 기구, 지역 시민단체	2022. 1. 19
17B	지역(서울), 청년	여	지자체 청년정책 기구, 지역 시민단체	2022. 1. 19
18A	중간지원조직	여	지자체 시민사회 지원기관	2022. 1. 24
18B	중간지원조직	여	지자체 시민사회 지원기관	2022. 1. 24
19	지역(전라), 문화	남	시민운동 단체, 사회적 협동조합	2022. 2. 10
20	지역(강원), 청년, 환경	여	협동조합, 청년공동체운동, 환경운동단체	2022. 3. 3
21	지역(경기), 청년	여	지역협동조합 활동, 지역공동체 주민운동	2022. 3. 16
22	지역(전라), 청년, 문화	남	문화예술 협동조합	2022. 3. 16
23	지역(전라), 문화	남	대안문화공간 사업	2022. 2. 24

개별 심층면접은 반(半)구조화된 면접(semi-structured interview) 방식을 택하여, 모든 면접참여자에게 기본적으로 공통된 질문을 하고 면접과정에서 이에 직결되지 않는 주제에 관한 발언을 일정 시간 동안 허용하였으며, 면접참여자의 응답 내용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추가 질문을 하였다. 공통 질문은 이 연구의 목표 및 이론적 관심에 상응하는 일관된 체계를 갖추게끔 하였다. 모든 면접참여자에게 면접일 전에 질문지를 미리 보내어 생각할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질문지에 구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눌 것임을 미리 알려서 과도하게 정리된 응답의 부담을 갖지 않도록 노력했다. 공통 질문은 아래와 같다.

(1) 새로운 운동의 목적과 동기

- **신생 단체 설립 동기:** 유사한 의제의 기존 단체에 참여하거나 여러 연령대 활동가들이 함께 단체를 설립하는 대신 새로운 단체를 설립할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혁신 문제의식:** 기존 시민사회 단체들의 문제점이나 한계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습니까?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싶었고 또 해왔습니까?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 **중점 의제:** 어떤 활동 의제들을 특히 중시하고 있습니까? 단체 활동의 의제와 이슈를 선택하게 된 경로는 무엇입니까? 의제를 주도적으로 발굴, 확산한 경험이 있습니까?
- **새로운 운동의 기여:** 2010년대에 새로이 등장한 사회운동들이 시민사회와 정치 전반의 변화에 어떤 역할을 했고,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가?

(2) 새로운 운동의 활동가

- **신생 단체 활동가 특성:** 새로운 단체의 참여자들은 기존 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젊은 활동가들과 비교하여 어떤 점에서 공통점이 있고, 어떤 점에서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 **활동가/참여자 유입 경로:** 활동가들은 어떤 경로로 운동단체 또는 캠페인을 인지하고 관계를 맺게 되는 것으로 보십니까? 단체에서 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노력은 무엇입니까?
- **활동가 어려움/잠재력:** 새로운 운동 단체의 참여자들이 직면하는 특수한 어려움은 무엇이며, 반대로 특별한 장점이나 잠재력의 원천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성장/지속가능 조건:** 활동가들이 장기적으로 성장해가고 지속가능한 운동을 하기 위해서 충족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내외적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대외 협력과 소통

- **지역사회 기반:** 단체와 활동을 처음 시작해서 발전시켜 가는 데에서 지역사회와 공동체들, 과거의 시민사회 활동의 전통들에서 도움을 받은 것이 있었습니까?
- **소통과 참여:** 지역 주민, 단체 회원, 지지자나 참여자들과 어떤 방식으로 관계 맺고 소통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례, 경험들이 있습니까?
- **시민사회 협력:** 기존 시민사회 단체들과 새롭게 관계 맺게 된 경험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협력관계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 **민관협치 경험:** 정부·지자체와 협치 또는 용역사업의 경험은 어떻습니까? 활동의 창의성, 독립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의제, 사업추진에 주도성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 **지원 방향:** 앞으로 새로운 시민사회 활동들에 대한 외부의 지원은 어떤 주체, 내용, 방식이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4) 코로나19 경험

- **코로나19 상황의 영향:** 코로나19 확산 및 그에 대응하는 정부 방역 조치들로 인해 단체 운영과 시민사회 활동에 어떤 영향을 받으셨습니까? 시민사회와 운동 영역이 어느 정도 위축되었다고 보십니까?
- **코로나19 위기 대응:**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대응책이 있었습니까? 비대면 상황에서 새로운 대외활동 방식이나 단체 내 소통, 또는 일의 방식을 개발하신 면이 있습니까?
- **코로나19 이후의 영향:** 코로나19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되거나 종식되고 나서도 지난 2년 간 코로나 상황이 오랫동안 시민사회에 영향을 남길 것이라고 보십니까?

(5) 시민사회 평가

- **시민사회 변화 핵심:** 지난 십여 년 동안 한국 시민사회의 전반적인 판이 어떻게 변했다고 보십니까? 결정적인 전환점이나 변화의 요인이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시민사회 진단:** 지금 한국 시민사회 또는 사회운동이 직면해 있는 가장 큰 한계 또는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시민사회 현황과 어려움:** 지난 십여 년 동안 시민사회의 양적 팽창이 엄청났지만 많은 활동가와 참여자가 어려움과 무력감을 호소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기존 단체 평가:** 변화된 시민사회의 지형 내에서 과거에 큰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단체들, 예를 들어 참여연대나 경실련, 환경연합, YMCA, 민주노총 같은 큰 단체들의 위치와 환경이 어떻게 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2) 초점집단면접

초점집단면접은 개별 심층면접 내용에 대한 기초적인 분석을 수행한 결과에 기초하여 설계하였다. 초점집단을 구성하는 기준으로 고려했던 몇 가지는, △ 시민사회 내 제도부문에 따른 구분, △ 청년운동과 기타 사회운동의 구분, △ 전국적 범위의 단체와 지역 기반 단체의 구분, △ 노동, 주거, 페미니즘, 기후, 청년 등 의제 부문에 따른 구분, △ 학생운동 출신 활동가와 기타 경로의 활동가 구분 등이었다. 이 중에서 최종적으로 첫 번째 기준으로 결정하여, <초점집단A>는 사회운동에 집중하는 참여자, <초점집단B>는 협치 기구 또는 공공 지원사업 참여 경험자, <초점집단C>는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부문 참여경험자들로 각 초점집단을 구성하였다.

먼저 <초점집단A>는 사회운동단체 활동가들로 구성되었다. 정치, 행정 부문이나 사회적 경제 부문과 관계한 경험이 없다는 뜻은 아니지만, 공무원이나 협치 기구 종사자로 있었던 적은 없으며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활동가였던 적도 없다. 참여자들은 학생운동, 노동운동, 여성운동, 인권운동 등 다양한 사회운동 의제 영역에서 활동해왔으며, 그런 의미에서 시민사회의 다양한 부문들 가운데 사회개혁적 지향을 가장 강하게 갖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초점집단B>는 정부나 지자체의 사회적 의제 관련 기관 또는 협치 기구에서 공식적 지위를 갖고 종사하고 있거나, 협치 기구의 사업에 시민사회 행위자로서 참여하고 용역사업을 수행한 경험을 여러 차례 갖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이들도 사회운동단체에서 활동했거나 지금도 사회운동 캠페인에 참여하기 때문에 초점집단A와 배타적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 지자체의 행정 부문과 협업하는 제도적 접경지대의 경험을 많이 갖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초점집단C>의 구성원들도 사회운동 단체에 활동했거나 정부·지자체와 협업한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집단들이 구성원들과 공유하는 경험이 있지만, 일반협동조합이나 사회적 협동조합 또는 생협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경험이 있거나 현재 활동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래서 한편으로 참여자들의 사회비판적, 사회개혁적 인식과, 다른 한편으로 사회적 경제 부문에 관여하는 다양한 시민 또는 주민들 사이의 접점 또는 괴리를 경험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여기서 참여자 구성의 성격은 배타적이지 않다. 말하자면 초점집단B의 구성원 중에도 사회운동 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고, 초점집단C의 구성원 중에는 지금 사회운동 단체 활동을 겸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 그러므로 이상의 연구 설계 의도는 단순히 사회운동가, 협치 참여자, 사회적 경제 종사자를 상호배타적 집단으로 가정하고 비교하는 데 있지 않다. 중요한 것은 이 FGI의 모든 참여자가 시민사회의 중심 이념인 공익성과 공동선에 높은 가치를 두고 지향하는 가운데, 각기 다른 시민사회 제도 부문을 경험하면서 한국의 시민사회 현실과 환경을 어떻게 인지해왔느냐다. 각 집단의 참여자 목록과 활동 분야, 그리고 간단한 이력이 아래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 FGI 참여자 목록과 면접 실행 내역

초점 집단	특성	참여자 번호	의제 분야	성별	활동 이력(과거 및 현재)	면접 날짜	진행방식과 공간환경
초점 집단 A	사회운동 조직 활동가. 협치 기구 참여 또는 사회적 경제 경험 최소	A-1	인권, 노동	여	인권운동 단체	2022. 5. 29	대면 면접. 총 120분 2명의 사회자 (연구책임자 + 조교 또는 재단간사). 8명 정원의 공간. 큰 화분, 흰색 테이블, 다과와 음료. 문양 없는 베이지색 벽, 대형 창문, 투명 출입 문. 영상 촬영, 음성녹음
		A-2	노동	남	노동조합, 노동운동 단체		
		A-3	노동, 인권	여	노동인권 단체, 대학 페미니즘 운동		
		A-4	노동, 페미니즘	여	여성노동운동 단체, 학생운동 단체		
초점 집단 B	정부 또는 지자체 협치 기구에 다년 간 참여. 협치 기구 구성원 또는 용역사업 수행	B-1	문화, 청년	남	연구자 단체, 지자체 청년정책 협치 기구	2022. 6. 8	대면 면접. 총 120분 2명의 사회자 (연구책임자 + 조교 또는 재단간사). 8명 정원의 공간. 큰 화분, 흰색 테이블, 다과와 음료. 문양 없는 베이지색 벽, 대형 창문, 투명 출입 문. 영상 촬영, 음성녹음
		B-2	청년	여	지자체 청년협치 기구, 정부 청년정책 관련 기관		
		B-3	인권	남	인권단체, 정부 청년정책기구 및 인권 지원 기구		
		B-4	청년, 인권	남	청년단체 및 시민단체, 지자체 청년정책 협치 기구		
초점 집단 C	협동조합 설립·운영, 다년 간 활동. 사회운동과 협치 기구에도 관여	C-1	노동, 청년	남	사회적 협동조합, 청년 노동운동 단체	2022. 6. 6	대면 면접. 총 120분 2명의 사회자 (연구책임자 + 조교 또는 재단간사). 8명 정원의 공간. 큰 화분, 흰색 테이블, 다과와 음료. 문양 없는 베이지색 벽, 대형 창문, 투명 출입 문. 영상 촬영, 음성녹음
		C-2	문화예술	남	문화예술운동, 사회적 협동조합, 지자체 청년정책 협치 기구		
		C-3	지역, 시민	여	지역 시민협력 기구, 생활협동조합		
		C-4	청년, 문화	남	청년 협동조합, 지역 문화운동단체		

면접일 전에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보조원이 이메일, SNS, 전화 등으로 소통하면서 연구 목적과 면접 참여의 중요성을 설명하였고, 면접 전날과 당일에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면접 시간과 장소, 교통편을 안내하였다. 면접 당일에 노쇼(no-show)는 한 명도 없어서 참석률은 100%였으며, 예정된 시간에 시작하여 도입 30분, 본 주제 90분, 정리 대화 30분을 합하여 총 120분 동안 진행 후에 종료하였다. 질문은 도입 질문 1개, 개방형 질문 2개, 논쟁적 질문 3개로 구성하였다. 질문 주제는 크게 아래의 6개 영역으로 요약된다.

- (1) 시민사회 의미와 자기정체성
- (2) 시민사회 현황과 추이 평가
- (3) 시민사회 문제와 혁신 과제
- (4) 시민사회의 정치적 영향력
- (5) 민관협치와 공공 지원
- (6) 시민활동가의 정치 진출

상세한 질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심층면접과 마찬가지로 면접일 며칠 전에 사전에 면접참여자들에게 발송하였으며, 면접 당일에는 대화의 흐름과 분위기에 따라 유연하게 내용과 순서를 조율하였지만 누락되는 질문은 없도록 조절하였다.

도입 질문

- 이 연구과제의 명칭은 「시민사회 현황 연구」입니다. ‘시민사회’, ‘시민단체’라는 단어에서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인상은 어떤 것입니까? 함께 활동하시는 분들, 또는 활동하시면서 접하시는 일반 시민들은 ‘시민사회’나 ‘시민단체’라고 하면 무엇을 떠올리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운동’은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활동가’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통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요 질문

- 지난 수년 간 다양한 활동을 하시면서 우리나라 사회운동과 시민들의 사회참여 활동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고 느끼셨습니까? 조금씩 성장하고 있거나, 과거 한계를 극복하는 주체들이 커가고 있다고 느끼셨습니까? 아니면 이런저런 문제가 극복되지 않거나 심지어 더 깊어지고 있다고 느끼셨습니까? 낙관적 견해든, 비관적 견해든, 어떤 면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시게 되었습니까?

- 오늘날 우리나라의 사회운동과 시민단체,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의 영역에서 극복되어야 할 문제점이 나 한계에 관해 평소에 자주 생각하시거나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누신 점이 있습니까? 또는 지금 하고 계신 활동을 통해서 새롭게 개척하거나 확산시키고 싶은 새로운 운동의 목표나 문화, 또는 전략이나 활동방식이 있습니까?

- 시민사회 단체와 사회운동들은 민주화 이후 한동안 커다란 정치적 영향력과 사회적 신뢰를 갖고 사회개혁을 주도했으나 이제는 힘을 잃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우리나라 시민사회는 과거보다 훨씬 더 다양해졌고 단체의 수도 많아졌으며, 점점 더 많은 시민이 사회참여를 하고 있다는 진단도 있습니다. 이런 상반된 의견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 오늘날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시민사회 단체들이 정부·지자체의 정책과 재정에 과도하게 종속되어 있거나, 심지어 지원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시민사회 단체를 설립하는 경우가 많다는 등의 비판적 시선이 있습니다. 이런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 현실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의 경험, 간접적 목격, 이에 관한 지식과 정보 등 어떠한 소재든 무방합니다.

- 시민단체나 사회운동, 지역 활동 등에 참여하면서 두각을 나타낸 사람들이 이를 발판으로 정치권에 진출하거나 공직을 얻어 시민사회를 떠나는 사례가 점점 흔해지고 있어서 시민사회 단체들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현실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 시민사회의 새로운 흐름에 대한 질적 면접 연구

아름다운재단 기획연구

IV. 심층면접 분석결과

1. 활동의 계기와 문제의식
 2. 새로운 활동과 단체의 특성
 3. 성장의 동력과 한계, 대외적 연대
 4. 협치와 사회적 경제
 5. 지역의 현실과 미래
 6. 코로나19가 시민사회에 미친 영향
 7. 지속가능성을 위한 과제
-

IV. 심층면접 분석결과

Ⅲ장에 서술한 바와 같이 심층면접은 모두 23회에 걸쳐 실시했다. 다수의 면접참여자와 면접을 수행할 경우 일부 참여자의 발언이 상대적으로 너무 적어서 기본적인 정보량의 분포가 불균등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녹취록의 문단, 문장, 단어, 문자 수의 분포가 어느 정도 균등한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아래 <표 3>에 제시된 통계를 보면, 총 23회의 면접에서 면접참여자가 말한 단어와 문자의 수가 대단히 고르게 분포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통계에는 연구자의 발언도 포함되어 있지만 연구자의 소개와 질문은 거의 일정하게 구조화되어 있으므로 양적으로는 상수(常數)로 보면 된다. 아래 표에서 모든 면접참여자가 주어진 90분 동안 밀도 있는 진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3> 면접 사례별 녹취록의 문단, 문장, 단어, 문자 수 통계

Document name	Paragraphs	Sentences	Words	Characters
#1	132	638	12,097	47,299
#2	285	909	10,642	41,777
#3	252	954	10,332	40,384
#4	588	798	9,121	35,781
#5	233	790	8,610	34,448
#6	223	789	8,477	32,834
#7	107	470	8,138	31,994
#8	261	779	9,498	36,834
#9	178	824	11,003	43,071
#10	141	571	9,800	38,200
#11	206	671	8,023	31,630
#12	173	962	9,027	35,926
#13	244	869	9,922	39,462

#14	126	613	11,708	45,707
#15	135	617	9,927	38,428
#16	76	387	6,340	25,031
#17	207	946	12,298	48,200
#18	238	967	11,587	45,556
#19	161	655	10,300	40,329
#20	198	740	9,711	37,324
#21	175	613	8,980	35,015
#22	231	772	9,755	38,295
#23	155	618	8,415	33,120

심층면접은 Ⅱ장 2절 1)에 서술한 바와 같이 (1) 새로운 운동의 목적과 동기, (2) 새로운 운동의 활동가 특징, (3) 대외적 협력 및 소통, (4) 코로나19 경험, (5) 시민사회 현황 총평 등 총 5개 섹션의 기본 질문을 바탕으로 반(半)구조화된 면접(semi-structured interviews)을 실행했는데, 면접참여자들이 이에 대해 발언한 내용을 코딩하고 추상도를 높여 구성한 범주체계는 아래와 같은 10개 주제로 분류되었다. 이중 10번째 주제는 1~9의 내용과 중첩되는 부분이 적지 않아서 이 보고서에서 별도의 서술은 하지 않을 것이다.

- ❶ 활동 계기와 문제의식
- ❷ 새로운 활동과 단체의 특성
- ❸ 활동의 성장 동력과 자원
- ❹ 활동의 어려움과 문제점
- ❺ 대외적 연대와 소통
- ❻ 협치와 사회적 경제
- ❼ 지역의 현실과 미래
- ❽ 코로나19의 영향
- ❾ 지속가능성을 위한 과제
- ❿ 한국 시민사회의 진단과 전망

위의 범주체계를 애초의 질문지 구조와 비교했을 때 주목할 점은, 질문지 섹션 ② ‘새로운 운동의 활동가 특성’에 관한 발언 내용이 많아서 ② 새로운 활동과 단체의 특성, ③ 활동의 성장 동력과 자원, ④ 활동의 어려움과 문제점 등 3개의 독립적 주제 영역으로 나뉘었다는 점이다. 또한 질문지 섹션 ③ ‘대외적 연대와 소통’에 관해서도 많은 발언이 나와서 ⑤ 대외적 연대와 소통, ⑥ 협치와 사회적 경제, ⑦ 지역의 현실과 미래라는 3개의 주제 영역으로 나뉘었다. 코딩 결과의 재구성 작업으로 구축한 범주체계는 최대 4단계까지 하위코드가 내려오는 다층체계인데, 2~3단계 하위코드까지만 표시하여 전체 범주체계를 개괄하자면 아래와 같다.

〈표 4〉 심층면접 분석결과의 전체 범주체계 개괄

<p>1. 활동 계기와 문제의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대환경의 변화 인식 ● 운동단체의 환경 변화 ● 협치 기구나 사회적 경제 활동 ● 사회적 사건 계기 ● 기존 운동 내부 문제 ● 기존 운동의 발전적 혁신 ● 세대 문제 ● 주체적 삶의 욕구 ● 관계와 공동체 형성
<p>2. 새로운 활동과 단체의 특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주체 ● 새로운 의제 ● 새로운 담론과 정체성 ● 새로운 활동 방식 ● 새로운 조직 모델 ● 새로운 참여 모델 ● 단체 간 연대 방식 ● 새로운 사회개혁 방식
<p>3. 활동의 성장 동력과 자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의제 선점 효과 ● 기존 단체의 한계 지점 공략 ● 핵심 주체의 추진력과 결집력 ● 참여자들의 효능감 ● 회원들과 긴밀한 교류 ● 협치 기구의 자원 활용 ● 시민사회와 지역공동체 지원

<p>4. 활동의 어려움과 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 내적인 어려움 ● 조직화와 조직확대의 어려움 ● 느슨한 유대의 약점 ● 사회적 영향력 한계 ● 정치사회 환경으로 인한 어려움 ● 단체와 개인의 지속가능성 문제
<p>5. 대외적 연대와 소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 수준의 단체 간의 연대 ● 개인 수준의 단체 너머 연계 ● 기존 시민사회 단체들과 관계 변화
<p>6. 협치와 사회적 경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관협력 거버넌스 ● 긍정적 역할 ● 부정적 역할 ● 사회적 경제 ● 장점 ● 단점
<p>7. 지역의 현실과 미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새로운 개념과 잠재성 ● 지역 활동의 강점과 기여 ● 지역 활동의 난점과 한계 ● 비서울권의 특성
<p>8. 코로나19의 영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정적 영향, 대응의 한계 ● 혁신의 계기, 성공적 대응
<p>9. 지속가능성을 위한 과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기관의 과제 ● 사회 전반의 과제 ● 활동 주체의 과제 ● 새로운 세대 활동가들의 과제
<p>10. 한국 시민사회의 진단과 전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시민사회의 영향력 약화 ● 진보-보수 대결 구도 해소 ● 시민사회의 분화와 분산 ● 영리-비영리 구분 약화 ● 정치·행정 부문과 관계 변화 ● 새로운 운동의 성장과 한계 ● 미래 시민사회 전망과 과제

위의 체계에서 하위코드는 내용적 분류와 형식적 분류의 두 종류가 있다. 내용적 하위코드 분류의 예를 들자면 <주제 3: 활동의 성장 동력과 자원>에 부속된 하위코드는 △ 새로운 의제 선점 효과, △ 기존 단체의 한계 지점 공략, △ 핵심 주체의 추진력과 결집력, △ 참여자들의 효능감, △ 회원들과 긴밀한 교류, △ 협치 기구의 자원 활용, △ 시민사회와 지역공동체 지원 등인데, 이 각각은 이 연구의 면접참여자들이 신생 운동들의 성장 동력과 자원으로 언급한 내용들을 보여주는 분류체계다.

그와 달리 형식적으로 분류되어 있는 하위코드들이 있다. 예를 들어 <주제 2: 새로운 활동과 단체의 특성>의 아래에는 △ 새로운 주체, △ 새로운 의제, △ 새로운 담론과 정체성, △ 새로운 활동 방식, △ 새로운 조직 모델, △ 새로운 참여 모델, △ 단체 간 연대 방식, △ 새로운 사회개혁 방식 등의 하위코드가 부속되어 있는데, 이들은 새로운 활동과 단체의 특성을 살펴볼 수 있는 다양한 차원들을 형식적으로 구분한 분류체계다.

경우에 따라서는 2~3단계 하위코드까지 내려가도 형식적 분류가 계속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주제 2: 새로운 활동과 단체의 특성>의 1단계 하위코드인 △ <새로운 조직 모델> 아래에는 또 다시 형식적 하위코드인 △ 홍보와 회원 모집, △ 재정 전략, △ 조직 형태, △ 의사결정 구조가 부속되고, 그중 예를 들어 <재정 전략> 아래에 또 다시 형식적 하위코드인 △ 자체 재정 기반, △ 외부 지원이 부속된다. 4단계에 와서야 △ 조직 재정의 면밀한 관리, △ ‘로컬’ 기반 사회적자본 활용, △ 사회적 경제 병행하여 재정 조달, △ 사업비를 최소화하는 활동방식 등 내용적 하위코드가 나타난다. 보통 어떤 주제에 형식적 하위코드가 여러 단계에 걸쳐 내려온다는 것은 그 주제에 관한 발언량이 그만큼 방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래 <표 5>에 제시된 주제별 빈도 분포를 보면, 면접참여자들은 △ 활동의 계기와 문제의식, △ 새로운 단체와 활동의 특성, △ 협치와 사회적 경제, △ 지속가능성을 위한 과제에 관해 가장 많은 이야기를 했다. 총 1,756개의 코딩 중에서 면접참여자들이 속한 각 단체의 활동과 특성에 관련된 코딩을 제외하고, 여기에 제시된 10개 주제 영역에 해당하는 코딩이 총 1,574개인데 그중 위의 4개 주제에 관한 코딩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61.9%에 달한다. 이러한 높은 비중을 뒤에 본문 서술에서도 반영할 것이다.

<표 5>에서 Group 1~4는 면접참여자의 활동 부문을 구분한 것인데 Group 1은 노동·주거·복지, Group 2는 여성·기후·문화예술, Group 3은 청년, Group 4는 지역 활동에 중점을 둔 참여자들이다. △ 새로운 활동과 단체의 특성에 관해서는 Group 1, 2, 3, △ 성장 동력과 자원은 Group 1과 3, △ 협치와 사회적 경제는 Groups 3과 4에서 많은 발언이 나왔다. 그러나 이는 ‘코딩된 발언 부분의 수’이지 ‘발언한 면접참여자 수’가 아니기 때문에, 특정 면접참여자가 특정 주제에 관해 많은 이야기를 한 경우도 있다.

〈표 5〉 코드별 빈도 분포와 면접참여자별 코드 빈도의 분포

	① 활동 계기와 문제 의식	② 새로운 활동과 단체의 특성	③ 활동의 성장 동력과 자원	④ 활동의 어려움과 문제점	⑤ 대외적 연대와 소통	⑥ 협치와 사회적 경제	⑦ 지역의 현실과 미래	⑧ 코로나 19의 영향	⑨ 지속 가능성을 위한 과제	⑩ 시민 사회 진단과 전망
Group 1 #1	16	46	33	8	0	29	0	0	0	12
Group 1 #2	7	41	3	5	5	14	0	12	8	21
Group 1 #3	16	7	5	2	3	6	0	2	27	0
Group 1 #4	11	15	9	0	1	13	4	3	16	7
Group 1 #5	9	21	11	6	4	0	3	6	16	2
Group 1 #6	21	9	1	0	2	1	0	2	7	7
Group 2 #7	0	7	0	0	4	0	4	5	5	3
Group 2 #8	8	16	3	10	15	1	0	6	1	0
Group 2 #9	11	19	0	1	3	6	0	8	6	0
Group 2 #10	10	6	2	3	3	16	0	6	0	0
Group 2 #11	9	6	7	3	6	3	3	6	8	3
Group 2 #12	10	8	0	0	2	15	2	4	4	35
Group 3 #13	12	25	4	11	4	14	3	0	20	5
Group 3 #14	1	12	4	0	0	14	14	4	9	3
Group 3 #15	11	13	2	0	2	14	10	0	8	0
Group 3 #16	12	24	7	0	2	0	0	0	0	3
Group 3 #17	12	9	4	7	2	17	7	6	16	6
Group 4 #18	0	6	0	0	0	5	2	11	6	40
Group 4 #19	16	33	0	16	0	18	5	4	6	1
Group 4 #20	8	16	1	0	1	10	2	3	7	0
Group 4 #21	8	3	1	0	0	7	13	5	2	0
Group 4 #22	15	2	0	0	0	9	30	5	0	2
Group 4 #23	3	18	2	0	0	0	11	5	6	0
합계	226	362	99	72	59	212	113	103	178	150
비율	14.3%	22.9%	6.2%	4.5%	3.7%	13.4%	7.1%	6.5%	11.3%	9.5%

아래에서는 <표 4>에 제시된 10개 주제별로 면접 내용을 체계적으로 서술한다. 코드체계에 포함된 모든 내용을 서술한다면 너무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면접참여자들이 특별히 빈번하게 또는 강조하여 진술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서술한다. 각 주제의 섹션 안에 1단계 수준의 하위코드를 ■으로 표시하고, 그 중에서 선별된 하위주제를 고딕체 중간제목으로 표시한다. 그 아래 2단계 수준의 하위코드 분류를 ▲으로, 그보다 더 아래 3단계 수준의 하위코드 분류를 △으로 표시하여 범주체계의 위계를 나타낸다. 이 장에서 심층면접 분석결과를 서술할 때, 보고서 분량이 과도해지는 문제 때문에 면접 내용을 직접 인용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이다. 향후 후속 연구에서 면접참여자들의 생생한 육성을 함께 전달할 예정이다.

1. 활동의 계기와 문제의식

첫 번째 주제인 <활동의 계기와 문제의식>은 활동 주체 내부적인 요소와 외부적인 요소를 함께 포함하고 있다. 면접참여자들이 새로운 운동을 시도하거나 단체를 설립하게 된 계기 또는 배경으로 언급한 내용들은 크게 ■ 사회적 사건의 영향, ■ 시대환경의 변화 인식, ■ 운동단체의 환경 변화, ■ 기존 운동 내부의 문제, ■ 특히, 운동 진영 내의 세대 문제, ■ 기존 운동의 발전적 혁신, ■ 협치 기구나 사회적 경제 참여, ■ 주체적 삶의 욕구, ■ 관계와 공동체 형성 욕구 등의 하위주제로 분류해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언급된 점은 ‘변한 것과 변하지 않은 것’ 사이의 괴리였다. 시대적 상황, 시민사회 활동의 사회적 환경, 새로운 세대 활동가들의 의식과 욕구등 많은 것이 변했는데 기존 단체와 담론, 사고방식과 활동방식 중에 변하지 않은 것들이 불러일으키는 여러 문제에 대한 비판의식이 2010년대 이후 혁신의 시도들을 촉발시킨 가장 큰 배경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면접결과는 흥미롭게도 지금 ‘기존’ 단체들로 불리는 시민운동들이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똑같은 문제의식과 슬로건을 가지고 1980년대 민주화운동을 넘어서는 혁신을 시도했었음을 상기시킨다.

아래의 <표 6>은 각 하위주제에 관한 언급이 나온 면접의 횟수와 비율, 그리고 해당 주제가 코딩된 부분의 횟수와 비율을 보여주는 기술통계다. 두 지표의 통계를 함께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특정 하위 주제에 관해 소수의 면접참여자가 언급했지만 전체 코딩의 큰 부분을 차지했다면, 소수의 참여자들이 그 주제에 관해 많은 이야기를 했다는 뜻이 된다. 반대로 많은 면접참여자가 언급한 주제지만 전체 코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면, 여러 사람이 그 주제에 관해 짧게 이야기하고 넘어간 것으로 볼 수 있다. 특정 주제가 언급된 면접 횟수의 비율과 코딩된 부분의 비율이 비슷하다면 발언량이 비교적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다는 뜻이 된다.

〈표 6〉 활동의 계기와 문제의식에 관한 하위주제의 코딩 통계

	코딩된 면접(회)	비율(%)	코딩된 부분(개)	비율(%)
사회적 사건의 영향	12	52.17	29	12.83
시대환경의 변화 인식	5	21.74	17	7.52
운동단체의 환경 변화	4	17.39	14	6.19
기존 운동 내부 문제	14	60.87	69	30.53
세대 문제	13	56.52	45	19.91
기존 운동의 발전적 혁신	5	21.74	11	4.87
협치 기구나 사회적 경제 활동	4	17.39	9	3.98
주체적 삶의 욕구	4	17.39	7	3.10
관계, 공동체 형성	9	39.13	25	11.06
전체	23	100.00	226	100.00

위의 분석결과에서 우리는 활동을 시작한 계기와 당시의 문제의식을 묻는 질문에 대해 가장 많은 면접참여자가 언급한 주제는 〈기존 운동 내부 문제〉와 특히 운동단체 내의 〈세대 문제〉로서, 각각 전체 면접참여자의 60%와 56%가 이 문제가 새로운 운동 단체나 활동방식, 조직모델 등이 필요하다고 느낀 계기였다고 언급했다. 다음으로 〈사회적 사건의 영향〉도 전체 면접참여자의 52%가 언급했다. 한편 코딩된 부분의 횟수와 비율을 보면, 여기서도 역시 〈기존 운동 내부 문제〉, 〈세대 문제〉, 〈사회적 사건의 영향〉이 코딩된 부분의 비율이 각각 활동의 계기와 문제의식에 관련된 전체 코딩 부분의 30%, 19%, 12%로 가장 많았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위의 세 주제에 관해 가장 많은 사람이 언급했을 뿐 아니라, 언급한 면접참여자들이 많은 분량의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와 더불어 〈관계와 공동체 형성〉의 동기 역시 비교적 많은 면접참여자가, 많은 이야기를 한 하위주제에 해당한다.

기존 운동 내부의 문제

기존의 시민사회 운동단체나 인간관계 내부의 여러 문제, 그리고 특히 뒤이어 서술할 운동 진영 내부의 ‘세대 문제’는 면접참여자들이 새로운 운동을 모색하게 된 동기이자 계기로서 매우 빈번하고 열띠게 이야기한 내용이었다. 면접에서 언급된 내용들을 주제별로 분류해보면 ▲ 대중과 괴리된 활동방식, ▲ 시민

참여 없는 운동, ▲ 조직문화와 의사결정구조의 문제, ▲ 활동의 지속가능성 한계, ▲ 낡은 거대담론과 이념 논쟁 등으로 구분된다. 물론 여기에 언급된 내용은 기존 시민사회 단체들이 모두 이런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다만 이런 문제들이 심각한 곳에서 활동가들의 비판적 인식이 생겨난다는 점을 성찰하게 해주는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이다.

먼저 ▲ 〈대중과 괴리된 활동방식〉의 주요 내용으로 △ 엄숙주의와 비장한 분위기, △ 조직 운동을 통한 대중화의 한계, △ 대안 없는 반대 투쟁이라는 인상, △ 집회시위와 파업에 과도하게 집중된 활동방식, △ 강경 정치 투쟁 중심의 활동, △ 대중성 없는 전위주의 등이 언급되었다. 짐작할 수 있듯이 이런 방향의 문제제기는 주로 노동운동이나 민중운동 부문에서 활동해온 젊은 참여자들과의 면접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되었다. 그러나 ▲ 〈시민 참여 없는 운동〉에 대한 문제의식은 기존의 시민운동들을 향해 있기도 했다. △ 시민사회 명망가 중심의 운동, △ 활동가와 전문가 중심의 운동에 대한 비판뿐 아니라, △ 이른바 ‘명문대’ 출신의 인적 네트워크가 주요 단체의 핵심 주체를 장악하고 있으며, 이는 발언권 독점 구조와도 연결되어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편 ▲ 〈조직문화와 의사결정구조 문제〉는 FGI 대화에서 크게 부각된 점이기도 한 만큼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대목이다. 면접참여자들은 △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문화, △ 사회적 가치, 공공성, 공동체의 이름으로 젊은 활동가들과 자원봉사자들의 노동에 의존하는 구조, △ 자유로운 토론이 쉽지 않은 폐쇄적 논의구조, △ 지도부나 이론가의 권위주의와 패권, △ 경직되고 관료적인 조직 구조, △ 위계적인 의사결정 구조로 인해 평활동가의 의사가 반영되기 어려운 환경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으며,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기존 단체에서 활동하지 않기로 결정했거나 활동하다가 몇 년 내에 사직서를 썼다고 했다.

그와 같은 조직문화 문제는 ▲ 〈활동의 지속가능성 문제〉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꼽혔다. △ 희생과 헌신에만 의존하는 구조, △ 그렇기 때문에 공익활동가들의 개인적인 재정 사정이 불안정한 것을 당연시하는 분위기, △ 이제 막 성장을 시작한 활동가들에게 성급하게 치열한 운동가적 정체성을 요구하는 압력, △ 권위주의적인 지시와 비난, 배제의 경험, △ 활동가들의 개인적 삶과 활동의 양립 불가능성이 장기화되는 문제 등으로 인해서 젊은 활동가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없고, 이런 고충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운동단체를 만들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기존 운동의 문제점으로 빈번히 지적된 또 다른 면은 ▲ 〈낡은 거대담론과 이념 논쟁〉이었다. △ 이념 집단의 대중적 기반은 소멸한 지 오래인 데도, △ 운동단체 내에서 진영논리에 입각한 이념 대립은 여전하고, △ 공허한 사회대변혁론이나 △ NL-PD(민족민주-민중민주) 논쟁, △ 통일·반미·민족해방 담론 같은 것들이 활동가들에게 와닿지 않을 뿐 아니라 깊은 괴리감을 낳는다는 언급이 여러 곳에서 나왔다. 무엇보다 이러한 담론들에 연결된 △ 정파주의 갈등은 활동가들로 하여금 단체를 떠나거나, 심지어 ‘운동판’을 완전히 떠나게 만드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었다.

운동 진영 내부의 '세대 문제'

기존 운동 내부의 문제 중에서 특히 '세대 문제'는 많은 면접참여자가 다양한 맥락과 의미에서 언급한 점이다. '세대 문제'라는 것은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세대 문제'가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면접참여자들은 한국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세대론 프레임으로 해석하는 것을 경계했을 뿐 아니라, 언론이 끊임없이 그러한 프레임으로 자신들을 끌어들이려 해왔음을 비판했다. 청년 비정규 노동 문제를 제기할 때 이를 기업과 정부가 아닌 '기성세대'에 대한 비판으로 왜곡하는 등의 문제점을 뜻하는 것이다. 하지만 시민사회 내의 세대 문제에 대한 지적은 종종 신랄했고 격정적이었다. 이 연구에서 부각된 세대 문제는 ▲ 운동 내의 세대 간 문화 차이, ▲ 청년 활동가들의 시대 환경 변화, ▲ 선배가 없는 청년 활동가들의 어려움, ▲ 새로운 세대의 새로운 문화를 구현하고자 하는 욕구 등이었다.

이중 가장 많이 언급된 ▲ <세대 간의 문화 차이>는 다양한 측면이 있는데, 예를 들어 △ 조직적 문화 대 개인화된 문화, △ 위계적 관계 대 수평적 관계를 선호하는 문화, △ 집단주의 대 개인주의, △ 젠더 인식의 차이, △ 사회현실에 대한 인식의 차이, △ 집회 문화의 차이 등이 언급되었다. 하지만 세대 간의 '문화' 차이는 종종 운동단체 또는 활동가들의 인적 네트워크 내에서의 '권력' 불평등과도 밀접히 관련된다. 시민사회 단체들에 남아 있는 '기성세대'는 조직의 위계 피라미드에서 상층에 속하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고, 이들은 자신의 인식과 문화를 요구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지만 젊은 활동가들은 기존 단체의 문화를 변화시키기 어렵다는 의미에서 그러하다.

세대 간의 이해 부족은 ▲ <청년 활동가들의 시대환경 변화>와도 관련된다. 현재 시민사회에 남아 있는 중·노년층이 청년이었을 때와 판이하게 다른 시대환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경험을 기준으로 기대하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러한 시대환경 변화의 예로 △ 오늘날의 청년활동가들은 개인의 성장과 사회변화 열망의 조화를 추구하지만, △ 청년들의 주체적 활동을 위한 사회적 공간은 부재하고, △ 서로 만나고 공동으로 행동을 벌일 수 있는 자원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점, △ 청년들의 만연한 경제적 불안 때문에 더 큰 사회적 변화를 사모할 삶의 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등이 언급되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 이런 현실에 대한 앞세대 활동가들의 몰이해가 가장 큰 절망으로 이야기된다.

이처럼 기성세대 활동가들과의 인식 차이나 갈등이 종종 깊음에도 불구하고, 면접참여자들은 또한 ▲ <선배가 없는 청년 활동가들>의 어려움이 크다고도 이야기했다. △ 위기 시에 '기댈 구석'이 되어줄 선배, △ 성장을 '끌어줄' 선배가 없었다고 했고, △ 중년 활동가들이 이제 운동을 시작하는 젊은이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가운데, △ 선배-동년배-후배 간의 이음이 끊어져서 '허리가 없는' 연령 양극화 구조가 많은 단체에서 발견된다고 했다. 그래서 ▲ <새로운 세대의 새로운 문화>를 만개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공간을 열망하는 주체들이 △ 독립적 단체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 그 안에서 개개인들의 주체성 실현을 중시하며, △ 집단주의가 아니라 개인들의 힘을 연결하고 모아내는 방식의 새로운 활동을 모색해왔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시민사회 내의 '세대 문제'라는 형태로 존재하는 여러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면접참여자들은 앞세대 활동가들이나 기존 시민사회 단체들과 전반적으로 갈등적 관계를 맺어온 것은 아니다. 3절에서 상세히 서술하겠지만 이들 신생단체들의 성장 과정에서 앞세대 활동가들이나 지식인들과의 교류는 큰 의미가 있었다는 많은 진술이 나왔다. 말하자면 지금 한국 시민사회 내에 세대 간의 연대와 갈등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 사건의 영향

면접참여자들은 중요한 사회적 사건들을 경험하거나 목도하면서 활동을 시작하거나 본격화한 경우가 많았다. 언급된 대표적인 사건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와 IMF 구제금융,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해고와 농성, 2008년 촛불집회, 희망버스 캠페인, 미국 서브프라임 붕괴에 뒤이은 세계경제위기, 여러 대학의 청소노동자 쟁의 지원행동 참여 경험, 반값등록금 운동, '안녕들 하십니까' 캠페인, 세월호 참사와 추모 행동 참여, 페미니즘 리부트, 강남역 살인 사건과 추모 행동 참여,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추구 촛불집회와 탄핵 경험 등이었다. 이러한 진술들은 사회운동과 이슈캠페인을 통해 집합행동의 경험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새로운 참여자들을 탄생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사건들 중에 어떤 것은 특별히 '새로운' 운동 방식이나 조직형태, 의제 개척을 고무했다기보다는 '운동' 자체의 참여 동기로 작용했다. 예를 들어 2008년 촛불집회, 세월호 참사 추모 집회, 페미니즘 리부트, 대학 청소노동자 연대투쟁 등에 참여한 경험을 계기로 운동 또는 활동이라는 것을 처음 시작하게 되었다는 경우들이 그러하다. 하지만 다른 많은 사건들은 '과거와 다른 운동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결정적으로 심어줬다. 그 대표적인 예로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청년 고용불안의 장기화를 경험하면서 청년 실업, 알바, 비정규노동이라는 의제를 개척하게 되었다든가, 강남역 살인 사건 후에 대규모의 추모 행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새로운 방식의 페미니즘 운동의 시대가 왔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시대상황의 변화 인식

그처럼 어떤 결정적인 사회적 사건들은 '시대가 변했다'는 인식을 사람들에게 분명히 각인시키게 되는데, 그런 인식은 새로운 운동 의제와 방식을 탐색하거나 새로운 주체들과 새로운 단체를 설립하려는 노력의 중요한 동기로 작용했다. 이 측면에서 면접 과정에서 강조된 점은 ▲ 사회문화적 변화, ▲ 정보사회의 새로운 조건, ▲ 담론과 지식 환경의 영향이라는 세 가지 측면이다.

먼저 ▲ 〈사회문화적 변화〉의 측면에서는 △ 활동가들을 포함하여 젊은 세대의 개인주의화 추세와

그에 따른 참여 동기와 방식의 변화, △ 하나의 의제에 지속적으로 몰두하기보다는 다양한 사회문제에 동시에 관심을 갖는 경향, △ 어떤 의제의 중심성을 주장하거나 의제들 간의 우선순위를 합의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시대상황 등이 언급되었다. 특히 두 번째 내용의 역사적 함의가 큰데, 왜냐하면 그것은 민주화 이후 각기 특정 의제 부문에 집중하는 전문적 운동단체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시민사회 구조가 변하기 시작했음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이 점은 뒤에 다른 맥락에서 계속해서 다시 등장한다.

다음으로 ▲ <정보사회의 새로운 조건>이 사회운동과 여타 시민사회 활동에 미친 영향이 언급되었다. △ 트위터 등 사회연결망서비스(SNS)의 활용이 대중화되었다는 점, △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의 특성이 더욱 중시되어야 했다는 점, 그리고 △ 인터넷의 보급이 사회 전반에 미친 영향이 사회운동의 사회적 환경을 변화시켰다는 점 등이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마지막으로 ▲ <담론과 지식 환경의 영향>은 자본주의 변화, 노동과 불평등 현실 등 여러 측면의 시대상황에 관한 사회적 담론과 지식들이 활동가들의 현실인식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가리킨다. △ 언론과 여론의 관심이 어디를 향하는지가 대중사업을 하는 활동가들에게도 영향을 많이 미쳤고, △ 지식인의 강연이나 저술, 세미나 등도 새로운 운동의 탄생과 발전에 상당한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이야기되었다. 특히 노동시장의 구조 변동, 새로운 고용계약과 노동의 형태, 복지국가의 정책과 제도 등 사회경제적 의제에서 그러한 영향이 많이 언급되었다.

운동단체의 환경 변화

그 같은 거시적인 시대환경 변화는 곧 시민사회 단체의 사회적 환경 변화를 의미하기도 했다. 이에 관해 면접참여자들은 여러 측면을 이야기했는데 ▲ 단일 이슈 중심의 참여행동들이 점점 많아졌다는 점과 더불어, 그 이면의 부정적 측면으로 사회구조적 문제들에 대한 지속적이고 깊이 있는 인식과 관여가 약화되었다는 점, ▲ 의제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이던 과거 운동들과 이슈 중심의 새로운 집합행동 사이에 점점이 부재하다는 점, ▲ 참여자들 간에 수평적인 관계와 소통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시민사회 명망가들의 영향력이 종언을 고했다는 점 등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시민사회 활동의 사회적 환경 변화로 가장 많이 언급된 점은 ▲ 시민사회의 언론 환경 변화,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운동을 바라보는 ▲ 시민들의 시선 변화와 신뢰 하락이 활동가들에게 체감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 구체적인 측면들로 △ 대형 시민단체들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 △ 시민단체는 '시민 참여 없는 단체'라는 만연한 인식, △ 시민단체라고 하면 진보와 보수 양쪽의 '정치적' 색채가 강한 단체들이라는 인상이 시민들에게 각인되어 있는 점, △ 단체의 힘으로 정치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력집단이라는 인상 등이 언급되었다. 면접참여자들은 이러한 '인상'들이 모두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았고 때로는 이러한 '프레임'을 씌우는 일부 정치권과 언론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하지만 그러한 인상

이 시민들 사이에 상당히 넓게 퍼져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서, 운동에 커다란 제약이 되고 있다는 것은 대체로 공통된 인식이었다.

협치 기구와 사회적 경제 활동

앞에서 주로 기존 시민사회 활동과 단체들의 문제점들로 인한 부정적 동기를 서술했다면, 그와 달리 긍정적 계기에 의해 활동을 시작하게 된 측면에 대한 언급도 많았다. 그 하나의 예로, 민관협치 기구에 참여하거나 사회적 경제 부문에서 활동한 경험이 계기가 되어, 보다 더 적극적인 사회운동이나 사회적 가치 추구 활동으로 나아가는 경로가 2010년대에 상당히 빈번해졌다는 점이 면접 과정에서 여러 차례 언급되었다. 이 점은 시민사회 활동이라는 세계의 존재를 인지하고 거기에 참여하게 되는 새로운 ‘경로’가 생겨났음을 말해주는 것으로서 특별한 주목이 필요하다.

흔히 거버넌스 참여나 사회적 경제는 사회비판적, 개혁적 성격이 약한 체제내적 활동 부문으로 간주되고 또 실제로 그런 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보다 복잡하여 변혁적 운동 부문에서 활동하는 사람과 온건한 부문에 있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성장과 변화 과정에서 넘나들기도 하고 때로는 같은 사람이 동시에 다중멤버십을 가질 수도 있다. 이는 거꾸로 말해서 협치 기구가 약화되거나 사회적 경제 부문이 전반적으로 위축될 경우, 그 경로를 대신할 새로운 대안적 경로가 창출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시민사회 활동가의 유입이 일정한 손실을 입게 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면접참여자들은 본인 또는 주변의 활동가들이 ▲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거나 그에 참여하면서 사회적 관심을 심화시키기 시작했거나, ▲ 서울시 뉴딜일자리 또는 청년정책네트워크 등에서 혁신적 정책과 운동에 눈을 떠서, 이를 바탕으로 이후에 이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회변화를 추구하는 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적잖게 있었다고 말했다. 또는 그와 달리, 사회적 가치에 관심을 갖고 ▲ 사회적 기업에서 일을 시작했다가 이 부문의 개혁성에 한계를 느껴서 더 본격적으로 사회운동단체 활동을 하게 된 경우도 있었다. 어떤 경우든 협치 기구나 사회적 경제 부문은 공익성, 비영리성, 정치적 독립성을 핵심 가치로 하는 시민사회 부문과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다는 것이 드러난다. 이러한 경로를 통해 활동하게 된 사람들은 과거에 민주화운동이나 학생운동 네트워크 내에서 성장해왔던 운동가들과 다른 생애경험과 인식을 갖고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시민사회 전반에 문화적 변화를 가져왔을 수 있다.

2. 새로운 활동과 단체의 특성

앞서 <표 5>에서 보았듯이 <새로운 활동과 단체의 특성>은 이 연구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주제다. 그래서 이 주제에 관한 면접참여자들의 발언은 총 9개의 형식적 하위주제로 분류해야 할 만큼 그 내용이 방대하다. 하위주제를 분류하자면 ■ 새로운 주제, ■ 새로운 의제, ■ 새로운 담론과 정체성, ■ 새로운 활동 방식, ■ 새로운 조직 모델, ■ 새로운 참여 모델, ■ 새로운 방식의 단체 간 연대, ■ 사회개혁에 대한 새로운 관념, ■ 해외 모델 참조 등이 포함된다.

<표 7> 새로운 활동과 단체의 특성에 관한 하위주제의 코딩 통계

	코딩된 면접(회)	비율(%)	코딩된 부분(개)	비율(%)
새로운 주제	16	69.57	92	25.63
새로운 의제	6	26.09	24	6.69
새로운 담론과 정체성	12	52.17	43	11.98
새로운 활동 방식	16	69.57	77	21.45
새로운 조직 모델	14	60.87	66	18.38
새로운 참여 모델	12	52.17	27	7.52
단체 간 연대 방식	8	34.78	17	4.74
새로운 사회개혁 방식	2	8.70	5	1.39
해외 모델 참조	1	4.35	8	2.23
전체	23	100.00	359	100.00

위의 <표 7>에 제시된 코딩 통계를 보면, 가장 많은 면접참여자가 언급한 하위주제는 새로운 활동의 <주제>(69%), <담론과 정체성>(52%), <활동 방식>(69%), <조직 모델>(60%), <참여 모델>(52%)이었다. 전체 코딩 부분 중 해당 하위주제의 코딩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더라도 <주제>(25%), <활동 방식>(21%), <조직 모델>(18%), <담론과 정체성>(11%)이 전체의 75%를 차지하여, 위의 핵심 하위주제에 관해 언급한 면접참여자들이 발언의 양이라는 면에서도 풍부한 진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새로운 주체

새로운 활동 주체들의 ‘공통된’ 특성을 물었을 때 많은 면접참여자가 강조한 측면은 역설적이게도 바로 ‘다양성’이었다. 무엇보다 ▲ 〈인적 구성의 다양성〉이 여러 차례 언급되었다. 같은 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 학력과 직업, 미래의 희망 진로, △ 과거에 운동단체에서 활동한 경험 여부, △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입장, △ 사회 활동과 학업·생계를 조화하는 방식 등 여러 면에서 상당히 다양하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다양성의 공존이 언제나 조화로운 것은 아니다. 과거에 학생운동이나 노동운동에서 조직적인 ‘재생산’ 경로를 통해 새로운 활동가들이 유입되던 때는 없었던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관해서는 뒤에서 〈새로운 운동의 어려움〉을 논하는 자리에서 상세히 서술하기로 한다.

그 같은 다양성과 더불어, 면접에서는 지난 십여 년 동안 새로이 등장한 유형의 활동 주체들의 유사성에 관해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왔다. 우선 가장 큰 틀에서 자주 언급된 것은 ▲ 〈공통된 문화적 성향〉이었다. 그 예로 △ 평등하고 개방적인 관계, △ 개인의 자발적 동기, △ 개인을 존중하는 조직문화 등을 중시한다는 점을 들었다. 이는 앞서 시민사회 단체 내에서의 세대 간 문화 차이에 관한 대목에서도 자주 등장했던 내용들로서, 이처럼 다양한 토픽에 관한 대화에서 동일한 내용이 거듭 등장한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 면에서 그 이슈의 중요성이 크다는 뜻이다.

특히 ▲ 〈개인적 참여 동기의 중요성〉에 관해서 더 상세한 서술이 필요하다. 이는 문화적 특성과도 관련되는 내용이지만, 문화적 측면에만 국한되지 않고 단체의 참여자 확대, 참여의 강도, 활동의 지속성 등에도 영향을 미치는 문제다. 과거에 많은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어떤 이념, 가치, 역사의식을 가지고 사회현실에 대한 항의로 참여했다면, 오늘날엔 그와 더불어 또한 그러한 활동 속에서 △ 개인들이 성장할 수 있고, △ 단체의 조직문화가 개인들에게 매력적이며, △ 공통의 개인적 경험을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느냐 여부가 과거보다 중요해졌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개인적 참여 동기는 과거에도 중요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훨씬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이 면접 내용에서 두드러진 점이다.

그와 같은 개개인들의 동기부여와 밀접하게 관련된 중요하고도 논쟁적인 개념이 바로 ▲ 〈당사자성〉이다. 이 개념은 2010년대 이후 청년 사회운동과 페미니즘 운동 등 다양한 운동 영역에서 이론, 정체성 담론, 전략적 담론 등 여러 면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었다. 실제 이 연구에서도 노동, 복지, 주거, 페미니즘, 기후 등 다양한 의제 영역의 면접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이 용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여기서 ‘당사자’는 맥락에 따라 여러 의미를 가질 수 있고, 때로는 전략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논쟁거리가 되기도 한다. 연령, 성별, 계급, 지역 등 여러 면에서 특정 집단범주에 속한다는 사실이 도덕적 우월성의 근거가 되는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고, 그 집단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잠재적인 지지자와 참여자들을 배제하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피상적인 ‘당사자론’을 옹호하거나 거부하는 대신에, 이 용어의 다양한 사회적 의미론을 더 풍부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면접참여자들이 이야기한 ‘당사자성’은 △ 자기 삶과 문제의 전문가가 활동의 주체가 된다는 것, △

활동 속에서 참여자들이 자기 삶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 어떤 사회적 문제를 자기 문제로 겪고 있는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 △ 그들이 사회개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 사회변화를 위한 활동의 참여자들이 그 안에서 소외되지 않고 주체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 모든 공동의 행동은 그러한 주체성을 실현해야 할 집합적 주체가 누구인지를 정의해야 하지만, ‘사회문제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정답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소통과 협상, 갈등의 과정에서 구성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의 범주는 완전히 열려도, 완전히 닫혀도 안 되는 논쟁의 대상으로 남는다.

그래서 이러한 당사자성의 강조의 이면에 또한 ▲ 〈당사자론의 쟁점들〉이 있기도 하다. 면접참여자들은 △ 활동을 계속하는 과정에서 사회문제의 ‘당사자’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는 경험을 했다고 했고, △ 좁은 당사자성 개념에 갇혀 있을 때 연대의 어려움이 생길 뿐 아니라, △ 활동가들 사이에 높은 갈등 잠재성이 내재하게 된다는 점을 우려했다. 또한 △ 당사자 운동이 어려운 문제 당사자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중 특히 ‘당사자’ 또는 ‘우리’의 범위에 대한 인식이 다양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확대되는 경험은 FGI에서 상당한 비중을 갖고 언급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V장 2절과 3절에서 곧 상세히 서술한다.

새로운 의제와 담론 · 정체성

한편 활동 의제의 측면에서 이 면접 연구에 참여한 활동가들은 ▲ 그동안 간과되어온 의제를 개척하거나 ▲ 기존의 의제를 대중적으로 보다 체감되는 방향으로 구체화하려고 노력한 경험들, 그리고 ▲ 여러 의제 영역에서 동시에 활동하면서 이를 결합시키려 시도한 사례들을 이야기했다. 면접참여자들은 많은 경우 200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중반에 이르는 시기에 활동을 시작했는데, 이들은 오랫동안 한국사회 주류 집단은 물론이고 시민사회에서도 크게 주목 받지 못한 사회적 의제들을 지난 10여 년 동안에 개척하고 심화시켜 온 과정들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러한 ▲ 〈새로운 의제 영역〉으로 빈번히 언급된 것은 △ 비정규직과 알바 노동, △ 청년 실업과 구직, △ 주거 빈곤과 세입자 권리, △ 청소년 및 청년 복지, △ 성소수자 인권, △ 기후 위기, △ 동물권 등이다. 물론 이 모든 의제들은 한국의 시민사회운동의 역사에서 새로운 것이 아니며, 오래 전부터 이에 천착하여 활동해온 개인과 집단들은 지금도 각 부문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정치권과 정책결정권자, 언론이 이 의제들에 대해 가졌던 관심은 지금보다 훨씬 더 약하고 피상적이었던 사실은 분명하며, 그런 의미에서 현재 시점에 한국사회에서 이 의제들이 사회적 담론과 공공정책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부여받고 있는 것은 많은 부분 새로운 시민사회 활동 주체들의 노력의 결실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면접참여자들은 또한 이러한 ▲ 〈사회적 의제들을 서로 연결시켜 활동한 경험들〉을 이야기했는데, 예를 들어 △ 노동과 페미니즘 의제를 연결시켜 여성노동운동과 노동시장 성별 분절을 이슈화하거나, △ 노동과 기후 의제를 연결시켜 ‘정의로운 전환’ 문제들과 정책 대안을 심화시키거나, △ 생태주의와 페미니즘을 연결시켜 에코페미니즘의 실천 영역을 개척하거나, △ 인권과 노동 또는 성소수자 이슈를 연결시켜 대중성과 보편적 호소력을 확대하는 방식 등이다.

이와 같은 의제 간 연계는 물론 과거에도 중요했을 뿐 아니라 조직적인 연대는 오히려 과거에 더 긴밀했다. 그런데 면접 내용에 따르면 최근 추이에서 새로운 점은 각각의 의제에 집중하는 조직 간의 공식적 연대보다는, 사회참여 활동을 시작하는 단계부터 다양한 이슈에 관심을 가지면서 의제의 경계를 넘는 인적 연결망과 다중정체성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페미니즘 운동으로 잘 알려진 활동가가 과거엔 노동운동 단체에서 다년간 활동했다거나, 노동운동 단체와 기후행동 단체에 동시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활동가의 사례가 드물지 않다.

한편 새로운 활동 또는 활동가들의 〈담론과 정체성〉의 특징을 묻는 질문에서 면접참여자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묶을 수 있다. ▲ ‘시민’ 이후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 ▲ ‘활동’한다는 것 또는 ‘활동가’라는 것의 의미, ▲ ‘청년’ 담론의 세대정체성의 측면과 전략적 활용의 측면의 불안정한 공존이라는 이슈가 그것이다. 새로운 정체성이 강조된다는 것은 이 연구에 참여한 활동가들이나 이들의 동료들이 한국 시민사회와 사회운동의 역사에서 오래된 정체성들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뜻은 전혀 아니다. 그보다는 오랜 역사 과정에서 한국 시민사회의 문화적 심층구조로 자리 잡은 정체성 위에 새로운 정체성의 요소들이 중첩되면서 전반적인 변화를 겪고 있는 과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 〈‘시민’ 이후의 정체성〉이라는 범주로 묶인 발언 내용들은 △ 많은 새로운 세대 활동가들이 그동안 ‘시민운동’으로 불리었던 기존 운동들 및 선배 활동가들과 어떠한 연결점이나 접촉의 경험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 △ ‘시민’, ‘연대’, ‘실천’ 등과 같은 한국 사회운동의 익숙한 용어들이 지금 젊은 세대 참여자들에게는 공식적이고 규범적으로 들려서 낯설고 어색해졌다는 점, △ 오늘날 청장년 세대가 주축이 된 많은 운동과 집합행동들은 ‘시민운동’으로서의 자기정체성을 별로 갖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시민운동’이라는 용어 자체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 △ ‘시민운동’, ‘시민단체’라고 하면 시민들이 종종 ‘민주당 쪽 사람들’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 용어가 활동 현장에서 종종 기피되고 있는 현실 등을 포함한다.

‘시민단체’, ‘시민운동’이 일반 시민들에게 어떤 의미로 인지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은 FGI의 도입 질문이기도 한데, V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FGI의 모든 집단의 참여자가 위와 동일한 진술을 일관되게 했다. 이는 한때 민주화 이후의 새로운 정치 주체이자 참여민주주의의 주인공으로서의 정체성을 집약하는 개념이었던 ‘시민운동’이 지금은 일상적 소통에서 중대한 의미 변화를 겪을 가능성을 암시하며, 별도의 심층적인 조사연구가 필요한 대목이다.

한편 ▲ 〈‘활동’한다는 것, 또는 ‘활동가’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질문 역시 오늘날 시민사회 현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열쇠로 등장했다. 2010년대부터 젊은 세대 사

이에선 ‘시민운동’ 뿐만 아니라 ‘운동한다’, ‘운동단체에서 일한다’ 등의 표현이 과거에 비해 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많은 면접참여자들의 의견이다. 그 대신에 △〈운동〉에서 ‘활동’으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지칭하는 용어가 변해왔는데, 이는 단지 용어의 변화만이 아니라 그 지시대상의 폭과 성격, 자기정체성의 변화를 내포하는 의미심장한 추이로 해석된다.

‘활동한다’는 표현은 전통적인 사회운동 단체에 속해 있는 사람뿐 아니라,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공동체, 도시재생 사업, 주민자치 기구 등에 참여하는 민간 행위자들이 두루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면접참여자들의 공통된 경험이다. 그래서 면접과정에서 △〈같은 ‘활동가’인데 너무 다르다〉는 언급이 여러 번 나왔다. 즉 한편으로는 과거의 ‘시민운동 단체’보다 훨씬 더 넓은 스펙트럼에 걸쳐 어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활동가’로서의 공통분모를 서로 확인할 수 있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사회현실에 대한 이들의 인식과 변화의 전망, 이념적·정치적 지향은 대단히 달라서 △〈동류의식 이면에 커다란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언급할 점은, 2010년대 이후에 시민사회의 무대에 등장한 새로운 활동가들은 ‘청년’으로서의 자기정체성을 강하게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 사실 자체보다 중요한 점은, 이때 ‘청년’이라는 것이 자명한 의미를 갖는 정체성 용어가 아니라 많은 ▲〈‘청년’ 정체성의 쟁점〉들을 내포한 논쟁적 언어라는 사실이다. 2010년 청년유니온 창립 이후로 지난 10여 년 동안 무수한 단체들이 ‘청년’ 운동단체의 이름으로 탄생했지만, 여기서 ‘청년’은 △ 세대적 동류의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중요하게는 △ 새로운 시대를 가장 밀도 있게 경험하는 사람들, △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 새로운 사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는 맥락화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면접 과정에서 ‘청년’이라는 세대 언어로 표현된 집합정체성의 실질적 의미는 △ ‘청년 노동자’ 정체성, △ ‘청년 사회운동’ 정체성, △ ‘영영 페미니스트’ 정체성, △ ‘청소년 기후행동’ 정체성 등과 같이 구체적 맥락에 위치한 담론을 구성하는 것을 통해 비로소 명확해졌다. 그러한 정체성들이 이른바 ‘기성세대’와 맺는 관계는 복잡하고 양가적인데, 노동운동의 예를 들자면 한편으로 기존 거대노조나 노동단체의 중년 간부들과 구분되는 △ 청년 노동자들의 세대적 정체성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 ‘청년 비정규직 대 기성세대 정규직’ 같은 담론으로 전선을 왜곡하는 프레임에는 반발하는 두 측면이 모두 면접과정에서 나타났다.

‘기성세대’에 대한 인식의 측면에서도 한편으로 일부 면접참여자는 시민사회나 정책과정에서 △ 청년 세대가 배제되어 있다, △ 진보·보수 할 것 없이 앞세대가 독점하고 있다, △ 앞세대는 많은 것을 쉽게 쟁취했다는 등을 언급하면서 세대불공정을 비판한 데 반해, 다른 면접참여자들은 △ 청년 노동운동은 처음부터 미디어의 세대론 프레임 씌우기와 싸워왔다, △ 세대 간의 가치 연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 세대 간의 가교 역할을 하는 집단이 필요하다, 또는 △ ‘청년 세대’ 담론이 운동에 미친 해악이 크다는 등 세대론을 비판하여, 이 이슈를 둘러싼 관점 또는 강조점의 차이가 드러났다. 요약하자면 이 면접조사에서 ‘청년’은 새로운 활동가 집단을 묶어주는 공동의 정체성이라기보다는, 고도로 다의적(多義的)인 개념이자 민감한 논쟁거리로 나타났다.

새로운 활동방식

지난 십여 년 간 성장해 온 활동들이 창안하고 확장시킨 새로운 활동방식에 관해서도 면접참여자들은 상당히 많은 양의 이야기를 했다. 그 핵심 내용을 몇 가지 범주로 묶어 보자면 ▲ ‘재미’의 중요성, ▲ ‘대중화’의 대안 모색, ▲ ‘공간’의 중요성, ▲ 네트워크형 활동, ▲ 협치 기구의 적극적 활용, ▲ 이슈 중심 공동행동, ▲ 지속가능한 활동 모색, ▲ ‘비즈니스 모델’의 부분적 도입 등으로 분류된다. 여기서 서술한 순서는 코딩된 부분의 빈도순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면접참여자가 이에 관해 언급했는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즉 <재미>, <대중화>, <공간>, <네트워크> 등이 가장 많은 면접에서 언급된 내용이다.

먼저 ▲ <재미>는 면접참여자들이 특별한 ‘개념’으로서 의미를 부여하고 말한 용어는 아니지만, 발언 가운데에 반복해서 언급된 중요한 ‘텍스트 내 코드’(in-vivo code)다. 예를 들어 “일단 기본적으로 재밌어야 한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같은 발언 속에서 이 용어가 계속 등장한다. 우리가 ‘재미’가 왜 중요한지를 묻기 전에 먼저 이해해야 하는 것은 그 ‘재미’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대체 무엇이냐다. 이것을 단순히 유머, 유희, 오락 정도로 이해했을 때 젊은 세대 활동가들의 바람과 전혀 맞지 않는 엉뚱한 대책이 나오기 쉽다.

특정 단어가 포함된 앞뒤 어구(語句)의 맥락 속에서 그 단어의 의미를 분석하는 기법(Keywords in Context)으로 녹취록에서 ‘재미’의 의미를 분석해 보면 몇 가지 내용을 추출할 수 있다. △ 참여자들의 ‘즐거움’과 ‘흥’, △ 자발성, 성취감, 효능감, 일정한 경제적 인정과 보상, △ 참여자들의 욕구를 반영하고 총화하는 조직문화, △ 격한 논쟁과 비판보다 존중과 소통, △ 헌신, 희생, 의무감을 요구하는 엄숙주의 기피 등이 ‘재미’라는 단어의 의미를 채우는 내용들로 나타났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시민사회 활동에서 ‘재미’가 중요하다는 것은 가벼움, 즉흥성, 이기성과 관련된 다기보다는, 앞에서 언급한 ‘당사자’들의 주도성과 주체성의 실현에 의해 생겨나는 긍정적 감정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것처럼 ‘재미’, ‘흥’, ‘즐거움’, ‘만족감’이 있는 활동을 추구한다는 것은 ▲ <‘대중화’의 대안 모색>이라는 과제와도 연결된다. 여기서 ‘대중화’는 △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 예를 들어 스터디 소모임, 아카데미 개최, 인디 공연, 문화 기획 같은 활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의 전략적 측면도 포함되지만, △ 많은 평범한 사람들을 참여시키고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함께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조직과 사업을 구성한다는 의미다.

흥미롭게도 여러 면접참여자가 그와 같은 대중적 활동과 만남, 연결을 위해서 ▲ <‘공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공공적 성격을 갖고 또한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물리적 ‘공간’의 존재와 접근가능성은 시민들의 △ 대면 만남과 연결을 지원함으로써 △ 개방적인 관계의 흐름을 가능케 한다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 온라인 연결의 기술적 발전만큼이나 그 한계에 대한 자각도 커졌고, 개인들끼리 느슨한 관계로 만났다 흩어지는 네트워크들이 갖고 있는 △ 약한 유대의 한계를 극복하는 물리적 공간의 중요성이 크다는 점이 더 넓게 인지되고 있었다.

나아가 그 같은 물리적 공간에서의 만남, 이음, 관계 형성뿐만 아니라, ▲ <네트워크형 활동>으로서

의 특징이 이번 면접조사에서 여러 차례 언급되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 비조직적 형태의 모임과 활동이 사회운동이나 협동조합, 주민자치, 대학 내 소모임 등 다양한 공간에서 점점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사람들이 점점 더 공식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보다는 △ 개인 단위의 다중적인 네트워크로 모임과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점, 그리고 특정 시민사회 단체가 주력하는 의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 다양한 의제 영역에서 단일이슈 중심의 연계행동에 참여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 등이다.

이러한 변화는 오늘날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보편적으로 관찰되고 있다. 과거에는 견고한 조직과 잘 조율된 전략적 행동이 성공적인 사회운동을 위해 중요한 요건으로 간주되었다면, 21세기 들어서 점점 더 많은 시민활동들이 ‘네트워크형’, ‘플랫폼형’의 유동적이고 느슨한 연결을 통해서 이뤄지고 있다. 사회운동 연구에서는 이런 방향의 변화를 ‘집합행동(collective action)’으로부터 ‘연결행동(connective action)’으로의 변화라고 개념화하기도 했다(Bennett and Segerberg, 2012). 이러한 네트워크형, 이슈중심적 연대의 장점과 약점에 대해서는 3절과 7절에서 자세히 부연할 것이다.

새로운 조직 모델

다음으로 새로운 조직 모델에 관련된 면접 내용은 ▲ 홍보와 회원 구조, ▲ 조직의 재정 구조, ▲ 조직 형태, ▲ 의사결정 구조 등의 형식적 하위코드로 분류된다. 이중 먼저 ▲ <홍보와 회원 구조>의 측면에서는 △ 사업 과정에서 참여자들을 회원으로 전환시키는 조직화 방식, △ 조직 확대에서 지역 기반 캠페인 활동의 중요성, △ 언론의 주목이나 SNS를 활용한 조직 홍보 및 회원 확대 전략 등이 유효했다는 진술들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지난 십여 년 간의 ‘새로운’ 트렌드의 특징을 보다 명확하게 포착해내기 위해서는 단체 재정구조의 측면을 함께 보아야 한다.

▲ <조직의 재정 구조> 측면에서 △ 자체 재정 기반과 △ 외부 지원이 모두 중요하게 간주되었고, 이중 △ <자체 재정>의 원천으로는 회원 회비, 단체 활동을 통한 수입, 지역의 사회자본 등 전통적인 방식들과 더불어, △ 사회적 경제 활동과 병행하면서 사회운동적 활동을 위한 재정을 조달하는 방식이 2010년대 이후의 새로운 경향으로서 특별히 주목할 만하다. 한편 △ <외부 지원>의 원천은 정부·지자체의 지원 사업 공모, 공공이나 민간의 인건비 지원 프로그램 활용, 민관위탁 사업 수행 등이 거론되었는데, 이처럼 외부 지원에 의존하는 과정에서 △ 자체 재정 확충에 실패하게 될 위험이 함께 강조되었다.

이들 새로운 단체들의 ‘새로운’ 특징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 <조직 형태>의 측면이었다. 면접참여자들이 그들이 속한 단체나 그와 연결된 유사 단체들의 조직형태로 언급한 특징들은 △ ‘플랫폼 운동’ 형태, △ 단일의제 공식조직에 비해, △ 비공식 또는 임의단체가 증가하는 경향, △ 영리-비영리 구분의 약화, △ 소규모의 스터디, 독서 모임으로 시작하여 운동이 커지게 된 사례가 많다는 점 등이었다. 다

양한 사회이슈에 관여하는 개인들이 비공식적 소모임이나 임의단체, 또는 플랫폼 형태의 공간에서 서로 연결되어 소통하고 공동행동을 하는 형태가 오늘날 확대되고 있는 트렌드라는 것이다. 단체의 지속성이나 외부지원 신청을 위해서 공식적 등록이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용적 목적을 위해 단체 등록을 한다. 추이가 이러하기 때문에 정부 부처나 시·도 행정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등 공식 통계에만 의존하여 오늘날 한국 시민사회 활동들의 규모와 추이를 판단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단체 내의 ▲ 〈의사결정 구조〉의 혁신도 면접참여자들이 새로운 조직 모델의 특징으로 상당히 강조한 점이다. 기존 시민사회 단체 내에 △ 위계적이고, 관료화되고, 복잡하며, 결정권이 소수에 집중되어 있고, △ 다수의 평활동가들이 배제되는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이 새로운 단체를 설립하고 독자적인 조직생태계를 만들어가도록 만든 동인의 하나였음을 여러 면접참여자가 언급했다. 그런 맥락에서 새로운 단체들의 의사결정 구조는 △ 〈분산성〉을 지향하는 측면이 있다. 개방적인 소통 구조, 구성원들의 평등한 의사결정 참여, 의사결정 단계의 간소화 등이 그 내용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 〈집중성〉을 갖는 조직 모델이 운동의 성공과 지속을 위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면접참여자도 여럿 있었다. 위계적이고 공식화된 분업구조는 거부한다 해도 소수의 헌신적인 멤버들의 존재가 결정적이며, 참여자들의 다양성 가운데 리더십이 중요하고, 소수 리더들의 역량이 여전히 조직의 운명에 큰 영향을 미치며, 헌신도 면에서 다층적인 동심원 구조를 갖는 조직이 많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집중성은 소수 리더가 조직과 집단적 노력의 성과를 전유하는 것으로 귀결될 위험이 있으며, 실제로 많은 면접참여자가 최근의 이러한 추세에 강한 불만을 표했다. 이에 관해서는 IV장 7절과 V장 FGI 부분에서 많은 내용이 서술될 것이다. 이처럼 〈분산성〉과 〈집중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가 많은 활동단체들의 커다란 숙제가 되고 있다.

새로운 참여 모델

새로운 참여 모델에 관하여 언급된 내용들은 ▲ 참여자 모집과 확대, ▲ 단체의 회원관리 사업, ▲ 참여 경로와 성장 과정 등에 관한 것들이었다. 이중 앞의 두 가지는 조직 수준의 참여 구조에 관련되고, 셋째 주제는 개인 수준의 참여 과정에 관련된다. 먼저 조직적 수준에서 ▲ 〈참여자 모집과 확대〉를 위해서는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일상적으로 활용하며, △ 지자체 협치 기구의 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점, 그리고 관심 있는 시민들의 △ 참여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의식적으로 한다는 점 등이 언급되었다. 전반적으로 앞에서 자주 등장했던 ‘대중성’의 추구, 처음부터 높은 헌신성과 운동성을 요구하는 조직문화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 등이 새로운 참여 모델에도 반영되고 있다. ▲ 〈단체의 회원관리 사업〉에서도 마찬가지로 △ 대중적이고 양방향 소통, △ 회원들과 수평적인 소통 중시, △ 구성원들의 참여도의 균형 추구 등 일관된 지향성이 발견되었다.

활동가나 운동참여자 개인들의 ▲ 〈참여 경로와 성장 과정〉 역시 흥미로운 대목이다. 면접과정에서 이야기된 내용은 △ 기존 운동조직과 무관한 참여 경로가 점점 많아지고 있으며 참여에 이르는 경로 자체가 점점 더 다양화되고 있다는 것, △ 획일적인 틀로 사람들을 모으려 하기보다 개인들이 각자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을 다양하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 작은 실천에서 보다 큰 실천으로 나아가는 긴 과정이 존중되어야 참여가 지속된다는 것 등이다. 앞에서 새로운 활동 주체들의 문화적 특성을 서술한 대목에서 강조되었듯이, 시민사회는 결사, 조직, 공동행동, 집합정체성을 특징으로 하는 사회 부문이지만 지금은 그 안에서 '개인'을 존중하고 개인들의 자발성과 주체성을 끌어낼 수 있을 때에야 참여자를 확대하고 참여의 지속성과 밀도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이 거듭 이야기되고 있다.

3. 성장의 동력과 한계, 대외적 연대

1절과 2절에서 새로운 단체 또는 활동들의 계기와 문제의식, 특성들을 보았다면, 이번 3절에서는 1) 새로운 활동의 성장 동력과 자원과 더불어, 2) 그들이 직면했던 어려움과 문제점, 그리고 3) 다른 시민사회 단체들과의 연대에 관한 경험과 의견을 살펴본다.

1) 새로운 운동들의 성장 동력

2010년대 이후 상당한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단체들이 성장할 수 있었던 동력과 거기에 기여한 특별한 자원이 무엇이었는지를 묻는 질문에서 면접참여자들이 강조한 내용은 크게 ■ 핵심 주체의 추진력과 결집력, ■ 참여자들의 효능감, ■ 회원들과 긴밀한 교류, ■ 새로운 의제 개척과 기존 단체의 한계 공략, ■ 다른 시민사회 단체들과 지역공동체의 지원, ■ 협치 기구의 자원 활용으로 요약될 수 있다. 여기서 앞의 세 가지는 조직 내적인 요인이고, 뒤의 세 가지는 대외적으로 경쟁적 또는 협력적 관계에 관련되는 요인들이다. 먼저 <표 8>은 이상의 하위주제들에 관련된 코딩 통계를 제시한다.

을 강조하였는가 하면, 다른 면접참여자들은 단체의 평회원들이 참여 활동에서 얻는 효능감, 그리고 활동가와 평회원들 간의 긴밀한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리더십과 참여라는 이 두 측면은 물론 서로 모순되지 않고 선순환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 그런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고 정착시키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일 것이다.

면접 내용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 〈핵심 주체의 추진력과 결집력〉이라는 것은 ▲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소수의 존재, ▲ 열성적 활동가들에 의한 대외적인 관계망 확대, ▲ 핵심 주체들 간의 공감대와 응집력이 조직 전체의 활기와 확장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 등을 포함한다. 한편 〈참여자들의 효능감〉이란 ▲ 모든 참여자가 공동의 노력을 통해 거둔 구체적 성과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 변화와 승리의 경험을 나누며, ▲ 사회적인 기여의 보람을 느끼고, ▲ 참여자 개개인들의 능동적 역할을 조직 내에서 중시하고, ▲ 개인들이 집합행동 속에서 각각의 자율성과 주체성을 경험하는 것 등의 내용을 갖는다. 말하자면, 가장 열성적인 활동가들의 리더십과 참여자 개개인의 주체성이라는 두 힘이 만날 때에 단체의 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아진 것으로 해석하고 있었다.

■ 〈회원들과의 긴밀한 교류〉는 단체의 성장 동력을 묻는 질문에서 면접참여자들이 가장 많이 언급한 내용이다. 그 세부 내용을 보면 우선 ▲ 〈적극적 소통과 이해의 노력〉에 관련되는 경험담이 많이 언급되었다. 회원들의 필요와 욕구를 인지하고 반영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회원 대상의 △ 정기적 설문조사, △ 일대일 만남, △ 공부 모임 등의 방법으로 상시적인 소통을 확대한 것이 긍정적 결과를 낳았다. 더불어 ▲ 〈참여자들의 소속감〉도 활동의 성공에 중요한 요인으로 언급되었다. 그러한 소속감은 △ 개개인의 특별함을 중시하고, △ 참여자들이 조직에 헌신하길 기대하기보다 조직을 통해 참여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며, △ 조직이 참여자들을 대변해준다는 신뢰를 구축하는 것, 그리고 집합행동에의 △ 참여 과정에서 참여자들 간에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을 통해 강화되는 것으로 이야기되었다.

끝으로 회원들과의 긴밀한 교류는 ▲ 〈공동체적 관계 형성〉이라는 중요한 결과를 낳았다고 한다. 앞서 참여자들의 집단정체성 형성의 기반으로 언급되었던 여러 측면이 여기서 다시 부각된다. 무엇보다 참여자들이 이 단체에서 △ 공감의 공동체를 발견했다고 느끼고, 활동가와 회원들이 서로 간에 △ 친목과 친밀함의 관계를 형성하게 되며, △ 공동체적 결속을 확인하는 가운데, 개인들이 조직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 구성원들이 ‘함께 성장’하고 있다는 경험을 함으로써 조직 역시 성장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이상의 내용들은 1절 〈활동의 계기와 문제의식〉에서 ▲ 기존 운동 내부의 문제나 ▲ 특히 세대 간의 문화 차이를 서술한 부분, 2절 〈새로운 활동과 단체의 특성〉에서 ▲ 새로운 주체들의 문화적 지향, ▲ 새로운 활동 방식, ▲ 새로운 조직 모델, ▲ 새로운 참여 모델을 서술한 부분에서 언급된 내용들과 일관성을 갖고 있다.

대외적인 경쟁적, 협력적 관계

2010년대에 새롭게 등장한 운동들은 일차적으로 시민사회의 장 안에서, 그러나 더 넓게는 정부·지자체, 기업, 시민사회가 상호작용하는 거시사회적인 장 안에서 한편으로는 경쟁하고 도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외부의 지원과 협력에 힘입어 성장해갔다. 대외적으로 경쟁적 관계와 협력적 관계가 동일한 현실에서 공존하는 이러한 양면성을 그중 어느 한쪽으로 환원시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먼저 기존 시민사회 단체들과의 경쟁적 관계의 형성은 부상하는 신생 단체나 운동들에겐 자연스러운 것이며, 어떤 면에서는 필요한 것이다. 정치나 시장의 영역과 마찬가지로 시민사회라는 제도적 장에서도 그 안에서의 지배적 담론과 문화, 규범, 규칙을 규정하는 힘을 가진 중심부 집단들이 있다. 그런데 시민사회 내에서 ‘과거의’, ‘기존의’, ‘기성의’ 것들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을 가진 새로운 집단들이 등장하게 되면, 이들은 현존하는 중심부 집단들의 지배력을 문제시하는 도전자가 되며 따라서 향후 시민사회 질서의 변화 방향을 둘러싼 경쟁적 관계에 놓이게 된다.

실제로 몇몇 면접참여자는 새로운 활동의 성장 동력을 물었을 때 명시적으로 이러한 경쟁적 관계를 언급했다. 즉 새로운 의제를 발굴하고 선점한 것이 유효했다거나, 기존 단체들의 한계 지점을 의식적으로 공략한 것이 자신들을 위한 새로운 공간을 열어주는 효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여기서 ■ 〈새로운 의제 발굴과 선점〉이 활동의 성장에 기여했다는 것은 ▲ ‘블루오션’을 개척한 단체가 정부·정치권과 시민들의 집중적인 지원을 받게 해주었다거나, ▲ 그 의제에 관심을 갖고 함께 활동하기를 원하는 시민들의 회원 가입과 후원 등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경험 등을 의미한다.

그보다 더 적극적으로 ■ 〈기존 단체의 한계 지점을 공략〉한 것이 신생 단체의 성장에 긍정적 기여를 했다는 진술도 있었다. 그러한 비판을 통해 ▲ 기존 단체들에 불만족하고 있던 잠재적 참여 대중을 회원으로 획득할 수 있었고, ▲ 기존하는 대형 단체들과 경쟁하는 가운데 신생 단체들의 존재감을 대외적으로 각인시킬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기존 단체들과 대등한 협력관계를 형성해갈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면접참여자는 그러한 경쟁 관계보다는, 신생 단체들의 초기 단계에서 ■ 〈시민사회 단체 및 지역공동체의 협력〉이 매우 중요했다고 이야기했다. 1절에서 서술한 것처럼 이들 신생 단체들과 활동가 집단들이 기존 운동들의 여러 ‘문제점’에 대해 비판적 인식을 갖고 출발했지만, 그 ‘운동들’ 자체와 대립하는 관계를 설정한 것은 아니었음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새로운 주체들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한다는 전제가 충족된다면, 기존의 시민사회 단체들과 기꺼이 연대하고 협력할 수 있는 것이다.

먼저 노동과 복지 의제 영역에서 활동해온 여러 면접참여자의 발언에 따르면, ▲ 〈노조와 노동단체들의 지원〉은 2010년대에 빠르게 성장한 청년 노동운동 단체들이 청년들의 실업과 구직, 비정규직 문제,

열악한 노동환경, 사용자나 소비자에 의한 인권침해 등을 이슈화하는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전국 연합체, △ 사무금융노조나 공공운수노조 등 부문별 연합체의 조직적 지원뿐 아니라, △ 이러한 기존 단체들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노동운동가들이나 노동연구자들이 새로운 의제와 주체들의 성장 과정에서 수행한 구체적 역할들이 언급되었다.

한편 ▲ 〈기존 시민단체들의 지원〉도 여러 면접에서 빈번히 언급되었다. 구체적인 지원 형태는 △ 직접적인 재정 지원, △ 기존 단체 공간의 무료 제공, △ 활동가 교육, △ 지원 목적의 사업 위탁, △ 조직적인 지지, △ 후원 시민 모집과 중개 등 다양했다. 이와 같은 지원이 가능해진 계기는 대규모 이슈 캠페인에서 공동행동을 하면서 상호 신뢰관계가 형성된 경우도 있고, 그와 반대로 작은 지역 범위에서 여러 의제 부문의 기존 단체들이 협력하여 신생단체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었다. ▲ 〈지역공동체의 지원〉은 △ 지역 주민들과 주민단체, △ 전국적 시민사회 단체의 지부 조직, △ 지역의 사회적 경제 조직 등 다양한 집단을 포함하는데, 이들이 서로 연계하여 폭넓은 후원자 그룹을 형성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언급할 외부 지원 사례는 2008년 대규모 촛불집회 이후에 그 참여자 시민들이 결성한 온·오프라인상의 ▲ 〈촛불단체들 및 촛불시민들〉로부터 받은 인적, 경제적 지원들이다. 또한 면접참여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이러한 촛불단체들은 위에 언급한 다양한 노동·시민단체들과도 직간접적으로 관계 맺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2010년대의 신생 단체들과 상당히 촘촘한 연대관계망을 구성하고 있었던 것 같다. 2008년 촛불집회는 이 연구에서 만난 여러 2010년대 설립 단체들에게 가치와 담론, 참여 주체, 재정적 지원 등 여러 면에서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 의미에서 촛불집회는 대중행동의 고양기에 폭발한 일종의 ‘시발적 운동’(initiator movements)으로서, 이후 다양한 ‘파생적 운동’(spin-off movements)로 계승된 측면이 있다(McAdam, 1995). 대외적 관계에 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5절 〈대의적 연대와 소통〉에서 서술할 것이다.

2) 활동의 어려움과 문제점

새로운 시민사회 활동들은 위에 서술한 바와 같은 긍정적 동력으로 성공을 거두기만 한 것이 아니라, 또한 오래된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 채 반복하거나 과거에 없던 새로운 문제를 안게 되기도 하였다. 면접 참여자들이 언급한 그러한 어려움과 문제점은 크게 ■ 조직 내적인 어려움, ■ 조직화와 조직확대의 어려움, ■ 느슨한 유대의 한계, ■ 사회적 영향력의 한계, ■ 정치사회 환경으로 인한 어려움, ■ 단체와 개인의 지속가능성 문제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러한 어려움들 가운데 어떤 것은 오래 전부터 많은 시민사회 단체와 활동가들이 겪어왔던 보편적 문제들이기도 하지만, 면접참여자들이 이야기한 내용의 많은 부분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신생 운동과 젊은 활동가들의 특성들과 밀접히 관련된 것들이었다.

〈표 9〉 활동의 어려움과 문제점에 관한 하위주제의 코딩 통계

	코딩된 면접(회)	비율(%)	코딩된 부분(개)	비율(%)
조직 내적인 어려움	4	17.39	12	16.67
조직화와 조직확대 어려움	1	4.35	3	4.17
느슨한 유대의 약점	3	13.04	11	15.28
사회적 영향력 한계	4	17.39	15	20.83
정치사회 환경으로 인한 어려움	3	13.04	14	19.44
단체와 개인의 지속가능성 문제	5	21.74	17	23.61
전체	23	100.00	72	100.00

각 하위주제들의 코딩 통계를 보면 가장 많은 사람이 이야기했고, 또한 가장 높은 빈도로 코딩된 주제는 〈지속가능성의 문제〉였다. 7절 〈지속가능성을 위한 과제〉에서 이 주제에 집중된 면접 결과가 상세히 서술될 것이다. 그와 더불어 여러 면접참여자가 내부 요인으로 〈조직 내적인 어려움〉과 〈느슨한 유대의 약점〉, 외부 요인으로 〈사회적 영향력의 한계〉와 〈정치사회 환경으로 인한 어려움〉을 언급했고 이중 외부적 한계와 문제에 관한 발언이 다소 더 많았다.

조직 내적인 어려움

먼저 새로운 활동 부문들의 조직 내적인 문제와 한계를 보자. ■ 〈조직 내적인 어려움〉은 무엇보다 기존 운동들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하여 새로운 운동 방식을 개척하고자 했던 시도들에 내재해 있던 문제들이었다. 무엇보다 ▲ 〈정체성 혼란과 갈등이 지속되는 문제〉에 관해 여러 면접참여자가 이야기했는데, 이는 △ 공동의 가치에 대한 합의의 불안정성, △ 다양성의 추구에 뒤따르는 약한 응집성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 조직 내에서 개인들 간의 사적인 갈등과 ‘관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결국에 조직 전체가 위험에 빠지는 경우들도 빈번한데, 그런 경우에 구성원들의 이탈을 억제할 집합적 규범이나 문화적 장치가 없다고 했다.

특히 ▲ 〈사회적 경제 부문에서 내적 갈등과 이질성 문제〉가 큰 것으로 이야기되었다. 예를 들어 △ 협동조합에서는 구성원들 간의 상조를 위한 ‘조합’의 성격과 사회적 의제를 위한 ‘운동’의 성격 중에 어느 것이 우선이냐를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기도 하고, △ 사회적 경제 조직을 설립한 활동가들은 궁극적으

로 개혁 의제에의 기여를 기대하는 데 반해서 이 조직들이 안정적 궤도에 오른 뒤에 가입한 회원들은 기본적으로 사익을 우선시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 △ 2010년대에 지역 청년단체로 만들어진 조직들 가운데 적잖은 경우가 시간이 흐를수록 사회운동적 지향성이 강하지 않은 다음 세대 청년들의 공동체 공간으로 변해갔다는 경험담이 여러 면접에서 나왔다. 실제로 이상과 같은 문제들로 인해서 한때 성공적인 사례로 꼽혔던 단체들이 10년 내외의 짧은 시간 안에 위기에 놓인 사례들이 있다.

조직화의 어려움, 느슨한 유대의 약점

이상과 같은 조직 내적인 어려움들은, 활동가와 회원들을 모집하여 조직을 확대하는 데에서의 한계점들과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면접참여자들은 ■ 〈조직화의 어려움〉이 생겨나는 원인으로 ▲ 각자 본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 ▲ 개인들이 삶이 일상 속에서 파편화되어 있어 기층을 조직화하는 것이 힘들다는 점, ▲ 이슈 캠페인 위주의 활동방식이 새로운 혁신적 아이디어라기보다는 현장 조직이 없거나 약하기 때문에 선택된 면도 없지 않은데, 바로 그러한 이슈파이팅 위주의 활동방식이 상시적 조직의 건설 노력을 게을리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점 등이 언급되었다.

한편 ■ 〈느슨한 유대의 약점〉이라는 문제는 ▲ 견고한 연대 네트워크를 발전시키려는 노력의 부재, ▲ 활동가들의 개인화 경향, ▲ 이슈 중심의 간헐적 대중행동의 한계 등에 기인하거나 관련되는 것 같다는 발언들이 있었고, 이는 ▲ 구성원들 간의 높은 갈등 잠재성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하였다. 이중에서도 특히 지속적이고 안정된 연대 네트워크가 존재하지 않는 데서 오는 문제가 많이 언급되었는데, 상시적 연대체를 조직하지 않고 이슈에 따라 비상시적으로 공동행동을 하는 방식은 한때 21세기 네트워크 사회에 상응하는 새로운 대안처럼 간주되었지만 지금은 그런 방식의 연대에 내재한 한계가 점점 인식되고 있기도 하다.

사회적 영향력의 한계와 외부 환경의 문제

■ 〈사회적인 영향력 한계〉에 관한 발언 내용들은 몇 가지 층위로 나뉜다. 가장 저변에 생활세계의 수준에서 ▲ 사회적 관계의 단절 문제가 언급되는데, 이는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는커녕 전반적으로 개인과 개인 사이의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현실이 특히 젊은 세대에서 심각하며, 이런 조건에서 시민사회 활동 참여는 확장적 목적을 갖기보다는 참여자 개인의 행복과 구원이란 의미를 갖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신생 단체들과 젊은 세대 활동가들이 사회적 영향력 행사에 한계를 절감하는 큰 원인으로 많은 면접참여자가 지적한 것은 바로 ▲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의 결핍이라는 문제였다. 여기에는 인적 네

트위크, 제도 중심부로의 접근성, 문화자본 등 여러 요소가 포함된다. 사회운동 캠페인과 공익활동 단체에 대한 재정적 후원, 정부·정당·언론 등 제도권력의 시민단체에 대한 태도 등 여러 면에서 지금 상황은 1990년대 시민운동의 확장기와 너무 다르다는 것이다.

면접참여자들은 것처럼 새로운 흐름의 주체들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역량에는 큰 한계를 느끼고 있는 반면, ■ <정치사회 환경으로 인한 어려움>에는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먼저 ▲ 정치환경은 최근 십여 년 간의 신생 운동들에게 양면적이고도 역설적인 효과를 낳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청년단체들을 비롯하여 많은 신생 단체와 젊은 활동가들에게 2010년대 내내 △ 지자체의 시민사회 지원 정책과 협치 기구 확대는 긍정적인 면이 있었다. 하지만 뒤에 협치 기구와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절에서 상세히 언급하겠지만, 그러한 정치환경은 △ 시민사회 행위자들의 독립성과 사회비판 역량을 무디게 하는 효과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도 오히려 △ 보수 정부 때 진보 성향 시민들의 후원이 더 활발했고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던 반면, △ 문재인 정부 때는 정부 정책과 여당을 비판하면 비난 여론이 들끓고 회원이 대거 탈퇴하는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었다는 평가가 있었다.

한편 ▲ 언론 환경으로는 가장 먼저 △ 시민사회 단체와 사회운동에 대한 언론의 우호적 시선과 보도 자체가 1990년대에 비해 크게 약화되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시민운동의 확장기에는 보수 언론을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언론이 시민사회의 중요한 후원자거나 파트너였는데 지금은 그런 환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와 더불어 ‘세대론 프레임’의 문제점이 자주 언급되었는데, 청년들이 주체적인 사회개혁 운동을 펼치려 하면 △ 언론이 ‘세대 갈등’ 프레임으로 운동단체들의 목표와 주장을 왜곡해서 사회에 전달하는 문제가 계속 있어왔고, 그런 미디어담론의 영향으로 신생 단체들과 지원·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기존 단체들과의 관계에 실제로 종종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단체와 활동가 개인의 지속가능성 문제

시민사회의 새로운 활동 주체와 단체들이 직면했던 어려움을 물었을 때 가장 많은 면접참여자가, 가장 열띠게 이야기했던 주제는 바로 ■ <단체와 개인의 지속가능성 문제>였다. 이 주제는 지금 시민사회의 젊은 세대 활동가들과 참여자들에게 너무나 중요하여, 7절에서 다시 상세히 다루게 될 뿐만 아니라 V 장 FGI 부분에서도 대화 참여자들이 가장 중요시한 토픽 중 하나로 부각될 것이다.

지속가능성 이슈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내용은 ▲ 개인의 활동 지속 한계, ▲ 단체의 재정 문제, ▲ 시민사회 단체의 노동조건으로 압축되는데, 이 중에서 어떤 것은 신생 단체들에게 특별히 발생하는 문제이고, 다른 것은 기존 단체들의 오래된 문제를 여전히 안고 있는 것이며, 또 다른 측면에서는 심지어 기존 단체들보다 신생 단체들의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하여 젊은 활동가들이 시민사회 활동을 접고 지자체 행정직이나 정당 당직자, 또는 기업의 공익재단 직원으로 자리를 옮기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러한 진로 문제는 사회운동에서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니며, 그래서 1990년대 초반부터 이미 ‘진보적 사회진출’, ‘애국적 사회진출’ 등 정파별로 다양한 방식으로 현실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기도 했다. 그런데 지금 시기의 신생 단체들에 특수하게 나타나는 ▲ 〈개인들의 활동지속 문제〉는 무엇보다 ‘청년 당사자’라는 세대적 정체성을 중시한 운동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청년’이라는 세대 범주에 전략적으로 집중한 운동의 활동가들은 △ 다음 생애주기 단계의 비전 문제를 항시 고민해야 하며, △ 청년 의제 분야의 진로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청년단체 활동 이후 ‘다음 스텝’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7절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청년 운동에서의 이러한 ‘생애주기 문제’는 조직적 수준에서도 활동가 역량의 축적과 조직재생산 등 여러 면에서 구조적 한계를 발생시키고 있다.

▲ 〈단체의 재정 문제〉는 그와 같은 활동가 개인들의 어려움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 신생 단체들은 앞서 1절에서 서술했듯이 기존 운동들의 대중성 한계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에서 출발했지만 △ 앞 세대 운동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특히 많은 신생 단체가 정기적이고 장기적인 후원회원 구조가 취약한 상황에서 활동가들의 개별 수익이나 연구용역, 공공지원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서 △ 앞 세대 운동의 한계를 극복하긴 고사하고 오히려 더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면도 없지 않다는 평가들이 나왔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은 여러 긍정적 동력과 어려움들을 어느 한쪽으로 환원하여 이해하기보다는 다면적 현실의 각기 다른 측면들로 보아야 할 것이다. 새로운 시도들을 낭만적으로 미화하거나 온정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이들의 낙관적이지만은 않은 현실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을 은폐할 수 있다. 그와 반대로 이 운동들이 지금 직면해 있는 한계와 어려움들을 일면적으로 과장하는 것은 이들이 지난 십여 년 동안 달성한 사회개혁의 성과와 발전의 역량을 정당하게 평가하지 못하는 일이 될 것이다.

3) 대외적 연대와 소통

새로이 등장한 활동가들 또는 활동단체들과 다른 시민사회 단체들과의 관계에 관한 면접참여자들의 응답은 크게 ■ 〈조직 수준의 단체 간 연대〉, ■ 〈개인 수준의 단체 너머의 연계〉, ■ 〈기존 시민사회 단체들의 도움〉, ■ 〈새로운 운동들의 위상 변화〉에 관련된 내용들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기존 시민사회 단체들의 지원과 협력에 관해서는 앞서서도 언급이 되었지만 이 절에서 추가 내용이 서술될 것이다. 면접에서 특별히 많이 이야기된 조직 수준의 연대, 개인 수준의 연계부터 시작해보자.

조직 수준의 단체 간 연대

여기서 <조직 수준의 연대>는 시민사회 단체와 단체 간의 교류·협력과 공동행동에 관련되며, 그와 달리 <개인 수준의 연계>는 다양한 단체에서 활동하는 개인들이 서로 교류하거나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단체와 의제 부문에 관여하는 것을 뜻한다. 현실에서 이러한 조직 수준의 관계와 개인 수준의 관계는 종종 공존하면서 서로 얽혀 있지만, 둘은 엄연히 각기 다른 성격의 관계이고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도 있으므로 분석적으로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먼저 ■ <조직 수준의 단체 간 연대>에 관한 면접참여자들의 많은 진술은 ▲ <상시적인 연대체의 약화>를 언급하는 것에서 출발했다. 면접참여자들은 예를 들어 ‘시민사회 단체연대회의’ 같은 상시적 연대체가 그들이 속한 단체 또는 그들의 활동 영역에서 큰 의미가 없었다고 평가하거나, 심지어 이런 연대체의 존재 자체를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았다.

그 대신에 많은 면접참여자는 ▲ <이슈 중심 공동행동>이 일반적인 단체 간 연대방식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이해했다. 그러한 예로 △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 강남역 살인 사건 추모행동, △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행동, △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 등이 언급되었는데, 이러한 단일 이슈 공동행동을 계기로 하여 기존 시민사회 단체들을 비롯하여 단체들 간의 신뢰와 교류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이는 2절에서 <새로운 활동 방식>이나 <새로운 참여 모델>이 특정 의제에 집중하기보다는 다양한 이슈 캠페인 참여를 특징으로 한다는 내용과도 연관성이 있다.

그와 더불어 조직 대 조직의 공식적 관계보다는 ▲ <인적 관계를 매개로 한 연결>이 신생 단체들 간의 연대 형성에 특징적인 양상이라는 언급도 나왔다. 각기 다른 단체와 의제 부문에서 활동하는 개인들 간의 비공식적 관계망, 또는 복수(複數)의 단체에 관여하는 개인들의 중개를 통해서 단체들이 서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국 각지에 있는 다양한 의제 부문, 또는 다양한 조직형태의 단체 구성원들이 개인적으로 서로 연결되고, 그러한 인적 연결을 바탕으로 다른 단체들의 존재와 그 활동 내용을 인지하게 되는 경로가 많다는 것이다.

개인 수준의 단체 너머 연계

개인 수준에서도 다양한 의제와 이슈에 관심을 갖는 개인들이 서로 느슨하게 연계되는 방식이 더 일반적으로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 면접참여자들의 발언 내용을 토대로 그와 같은 연계가 이뤄지는 경로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몇 가지 유형을 구분해볼 수 있다. ▲ 개인이 다른 의제 부문의 단체로 멤버십 이동을 하는 경우, ▲ 동시에 여러 의제 부문의 단체에 다중멤버십을 갖는 경우, ▲ 특정 이슈의 공동행동에서 접촉하고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경우, ▲ 협치 기구에서 다양한 단체에 속한 개인들이 만나고 교류하는

경우 등이다.

물론 단체에서 단체로 멤버십을 이동하는 것은 과거에도 있었던 일이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활동 의제 부문의 경계를 넘어 이동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예를 들어 비정규 노동운동 단체에서 활동하던 사람이 페미니즘 운동 단체로 옮겨가거나, 페미니즘 운동 단체에서 활동하던 사람이 기후행동 영역으로 활동의 중심으로 바꾸는 등이다. 또한 한 개인이 다른 의제 영역에 속하는 복수의 단체에 동시에 관계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그러한 경우에 노동 의제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페미니즘, 성소수자, 기후, 비건 등 다른 의제에 대해서도 공감대와 유대감을 가질 수 있다.

협치 기구나 이슈별 공동행동의 자리에서 각기 다른 단체나 의제 부문에서 일하고 있는 활동가들이 서로 친분을 쌓고 교류를 시작하게 되는 경로도 여러 면접참여자가 언급한 연계 패턴이다. 과거와 같이 수십, 수백 개 단체가 이름을 올리는 공식적 연대행동 형태가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공동행동의 다양한 현장에서 알게 되거나 지자체 협치 공간에서 친분을 쌓는 등, 개인 수준의 연계가 보다 일반적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통적 방식의 연대행동 참여단체 목록을 자료로 삼아 오늘날 시민사회 연대의 현주소를 판단하는 것은 지배적 연대 방식의 변화를 반영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기존 시민사회 단체들과의 관계 변화

신생 단체들과 활동 영역들이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기존 시민사회 단체들과의 관계 역시 변화해갔으며, 그에 따라 이들 간의 연대의 성격 역시 달라졌다. 처음에는 새로운 운동을 개시하는 주체들이 ▲ 기존 단체들과 운동 사례들에 대한 <성찰과 비판>의 단계에서 시작하고, 이 운동들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 그들에게 우호적인 시민사회 단체들이나 공공 또는 민간의 지원기관들로부터 다양한 종류의 <지원>을 받는 사례들이 생겨난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 기존 단체들과 <호혜적 협력> 관계가 형성되는데, 예를 들어 청년 단체들의 존재 이유와 사회적 중요성이 과거보다 넓게 인정되기 시작하면 이제는 기존 단체들이 이 단체들을 지원하기만 하는 관계가 아니라, 기존 단체들 자신이 청년 세대 대중과 활동가, 조합원 등을 더 잘 이해하고 그들과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청년단체들에게 자문과 협조를 구하는 등의 상호 협력관계로 전환된다.

그러한 대외적 관계 변화의 과정에서 새로운 활동 주체들의 위상 변화에 어느 정도 일반적인 패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면접참여자들의 경험 기술을 종합해보면 ▲ 시민사회 내에서 이들 새로운 단체 또는 의제들의 존재이유 인정, 그 다음엔 ▲ 시민사회 내에서 그들의 고유한 역할 정립, 그리고 최종적으로 ▲ 기존 단체들과 대등한 관계 형성으로 나아갔으며 이중 마지막 단계인 <대등한 관계 형성>은 아직까지 제대로 달성되지 않은 것으로 많은 면접참여자가 평가하고 있었다.

4. 협치와 사회적 경제

이 절에서는 비정부성과 비영리성을 핵심으로 하는 시민사회 행위자들이 정부·지자체 또는 영리·시장 부문과 긴밀하게 교류하거나, 나아가 행정과 영리의 원리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게 되는 <협치와 사회적 경제>의 활동 영역에서 면접참여자들이 어떤 경험을 했으며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를 들어보기로 한다. 앞서 <표 5> 코드별 빈도표에서 본 것처럼 이 주제는 2절 <새로운 활동과 단체의 특성>, 1절 <활동 계기와 문제의식>에 이어서 세 번째로 높은 빈도의 코딩이 이뤄진 이슈다. 아래에 먼저 시민사회와 정치·행정의 제도적 접경지대라고 할 수 있는 1) 정부·지자체와의 협치, 즉 민관협력 거버넌스나 공공의 시민사회 지원·용역사업의 경험을 살펴본 뒤에, 그 다음으로는 2) 사회적 기업 부문에서 협동조합 활동이나 사회적 기업의 현황에 관련된 진술들을 서술한다.

1) 민관협력 거버넌스의 명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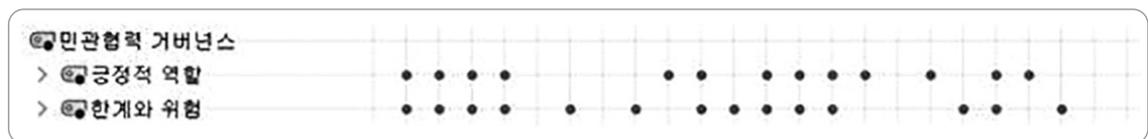
먼저 기본적인 코딩 통계를 보면 전체 면접참여자의 절반 이상이 민관협력 거버넌스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언급했고, 각 측면에 관련된 코딩 부분의 빈도 역시 큰 차이가 없이 비등했다. 미세한 차이가 있다면 양 측면에 관해 언급된 면접 횟수의 비율은 부정적 언급(60%)이 긍정적 언급(56%)보다 약간 더 많았던 데 비해, 코딩된 부분의 빈도는 긍정적 진술의 비율(56%)이 부정적 진술(43%)보다 다소 높아서 긍정적 측면을 언급한 면접참여자들이 더 많은 이야기를 했음을 볼 수 있다는 점 정도다. 하지만 이런 정도의 양적 차이가 의미를 가질 만한 것은 아니며, 오히려 시민사회 단체와 활동가들이 정부·지자체의 협치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상반된 평가들이 있는 가운데 이 연구의 면접에서도 두 측면이 상당히 균형 있게 언급되었다는 점이 더 중요해 보인다.

<표 10> 민관협력 거버넌스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발언의 코딩 통계

	코딩된 면접(회)	비율(%)	코딩된 부분(개)	비율(%)
긍정적 역할	13	56.52	89	56.33
한계와 위험	14	60.87	69	43.67
전체	23	100.00	158	100.00

다음으로 확인이 필요한 문제는 특정 면접참여자들이 협치의 긍정적 측면만을 이야기하고 다른 면접 참여자들은 부정적 측면만을 언급하는 식으로 의견이 양극화된 것인가, 아니면 다양한 면접참여자들이 협치의 긍정적·부정적 측면을 함께 언급한 것인가 하는 것이다. 협치에 관련된 여러 하위코드 가운데 <긍정적 역할>과 <한계와 위험> 코드만 활성화시켜서 총 23회 면접의 코딩 통계를 추출해보면, <그림 3>이 보여주듯이 명확히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측면이 언급된 총 18회의 면접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9회의 면접에서 긍정적·부정적 측면이 모두 언급되었고, 4회의 면접에서는 긍정적 측면만, 5회의 면접에서는 부정적 측면만 언급되어서 비교적 많은 면접에서 협치의 두 측면이 모두 언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 총 23회 면접에서 협치에 관한 긍정 및 부정 평가 분포



협치의 긍정적 측면

민관협치 기구나 공공의 시민사회 지원·용역사업에 참여하는 것의 <긍정적 측면>으로서 면접참여자들은 ▲ 시민 참여와 정책·제도 개혁의 기회라는 점, ▲ 시민들과 활동가들이 정책에 대한 지식을 획득하고 정책대안을 혁신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점, ▲ 혁신적 정책과 활동을 확산시키는 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 ▲ 시민사회 발전을 촉진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 ▲ 시민들과 활동가들의 교류 공간으로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점 등을 이야기했다. 이중 일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협력적 거버넌스’의 취지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그 밖의 많은 내용이 그보다 훨씬 더 넓고 다양한 파급효과를 시사하고 있어서 주목이 요구된다.

제일 먼저 ▲ <시민 참여와 정책·제도 개혁의 기회>라는 기능은 협치 기구를 설치하는 본연의 목적에 해당될 것이다. 면접참여자들은 △ 시민과 공공의 이해관심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 시민사회 구성원들이 의회로 진출하는 것과 달리 행정을 통해 정책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으로 협치 참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 △ 전문가 중심의 기존의 위원회형 협치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점, △ 사회적 교섭을 위한 제도적 공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이야기했다. 과거에 일부 영향력 있는 시민단체들이 대통령, 청와대, 정부 부처, 국회 등 중앙정치 권력기구에 압력을 가하거나 이들과 협력하는 방식을 취한 것과 달리, 여기서는 특히 지자체 행정 참여라는 새로운 통로가 중요시되고 있다.

하지만 면접참여자들이 이야기한 협치 참여의 효과는 그 차원을 훨씬 넘어섰다. 그중 하나가 ▲ <정책 지식 획득과 정책 혁신>이었는데, 이는 협치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협치 기구에 종사하는 시민들과 활동가들이 △ 비판을 넘어 정책과 제도 개혁의 대안을 구체화하고, △ 정책과정에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며, 그러한 실무 현장에서 △ 정책과 제도의 개혁 방법을 체득하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 문제해결의 대안을 제도화하는 역량을 높일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협치 기구는 ▲ <혁신적 정책과 활동의 확산 기제>로도 기여했는데, 예를 들어 △ 선도적인 지자체의 모델이 다른 지자체에 경쟁과 모방을 유발하고, △ 전국의 시민 활동가들에게 혁신 아이디어를 확산시키며, △ 협치 기구의 참여자들이 거기서 습득한 정책적 마인드를 가지고 다양한 사회진출을 하는 등의 다양한 방식이 거론되었다. 협치의 영역이 정확히 어떤 조건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 같은 확산 효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나아가 민관협력의 거버넌스가 ▲ <시민사회 발전을 촉진>한다는 것은 △ 활동단체들의 재정에 도움을 주는 면도 포함하지만, 더 중요하게는 △ 실제로 정책을 도입하거나 변화시키는 경험으로 정치적 효능감이 높아지고,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과 만나면서 △ 관계의 외연을 확장하는 데에 기여하는 등 폭넓은 효과를 포함한다. 특히 △ 대학 내에 조직적 학생운동의 명맥이 거의 끊어진 현재 상황에서 협치 프로그램들은 △ 젊은 참여자들에게 사회참여 활동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며, 단체들이 △ 새로운 활동을 발굴하고 쌍방향 이해를 깊게 하는 공간이 되며, △ 새로운 시민 모임이나 단체를 결성하는 데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이 연구의 면접참여자 중 여러 명이 바로 이 경로를 거쳐 성장해 온 사례들이었다.

협치 기구가 ▲ <시민 주체들 간의 교류 공간>으로서 역할을 하는 측면을 더 자세하게 보자면 이는 크게 △ 활동가 교류와 △ 단체 간 교류의 두 수준으로 나뉘볼 수 있다. 먼저 협치 기구는 개인적 수준에서 <활동가 교류>의 공간으로 기능하면서 개인 참여자들 간에 일종의 '점조직 네트워크' 같은 것이 형성되어 갔다고 한다. 특히 청년 활동가들 간의 인적 네트워크가 협치 공간을 매개로 형성되고 전국적으로 확장되어, 서울·강릉·전주·부산·제주 등 전국 각지 활동가들이 신뢰와 친분을 쌓아가는 과정이 진행되어 왔다. 나아가 그러한 개인 수준의 교류를 넘어 협치는 <단체 간 교류>의 공간으로도 기능했다. 참여자들이 정책과 제도개혁에 관심이 커질수록 협치라는 공간의 한계를 인식하게 되어, 이후 △ 새로운 독립적 단체를 설립하거나, △ 신생 단체가 의제를 확장하는 사례들이 생겨날 뿐 아니라, △ 기존 단체들 사이에 정책대안을 공유하는 인식공동체가 발전되기도 한다.

협치의 부정적 측면

하지만 이상과 같은 여러 긍정적 기능과 더불어, 현재 협치 기구들과 시민들의 협치 참여에 내재된 한계와 위험에 관한 언급도 많았다. 그러한 부정적 측면에 관한 발언 내용은 크게 ▲ 행정과 시민 간 관계

문제, ▲ 협치 참여로 인한 시민사회 단체 내부의 문제, ▲ 행정 부문이 갖고 있는 문제, ▲ 정치환경 변화에 너무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 등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그래서 ▲ 협치 참여의 명암에 대한 균형 있는 인식과 판단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먼저 ▲ 〈행정과 시민 간 관계 문제〉는 △ 참여 시민들과 단체들이 정부·지자체의 홍보수단으로 이용될 위험이 있으며, △ 행정 쪽의 ‘위탁’ 개념과 시민 측의 ‘지원’이 불일치하여 동상이몽이 빈번하고, 그래서 △ 공공과 시민 간에 잦은 갈등과 불화가 있고, 그런 가운데 공공이 자원을 쥐고 있기 때문에 △ 시민사회 단체들의 의도를 반영하기 어렵고, 심지어 △ 공공이 기존의 시민사회가 담당했던 역할까지 자기 성과로 가져가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상과 같은 행정-시민 관계의 문제는 ▲ 〈시민사회 단체 내부의 문제〉로 이어진다. 행정 주도의 지원·협력 사업을 수행하면서 △ 시민사회 단체의 관료제화가 일어나고, △ 공공지원에 대한 신청과 사업 수행 과정에서 단체의 역량이 소진되며, △ 단체 역량 이상의 사업 수행으로 과부하가 걸리는 데 비해, △ 단체의 자체 역량 발전은 종종 지체되고, △ 참여자들의 동기부여는 미약한 경우들이 드물지 않게 있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단체들과 ▲ 〈일반 시민들과의 관계 문제〉를 발생시켜서, △ 시민단체가 권력화되고 부패했다는 편견이 생겨나고, 거기까진 아니더라도 실제 △ 정치·행정 부문에의 의존과 종속, 비판적 역할의 약화 등이 △ 시민들의 신뢰와 지지 상실이라는 결과를 낳아서, 이런 여러 문제들 때문에 △ 협치 참여를 둘러싼 내부 갈등이 깊어지고 단체가 위기에 처하기도 한다.

그러한 내부 문제와 더불어 ▲ 〈행정 부문의 문제〉도 여러 면접참여자가 강조한 바다. △ 행정조직의 성과주의가 시민단체 내부에 여러 문제를 발생시킬 뿐 아니라, △ 지자체들이 지역 현실에 맞지 않는 과도한 목표를 설정하여 요구하기도 하며, △ 비판적·개혁적 성격의 시민단체는 경계하는 경향이 있어서 관(官)에 협조적인 단체들이 협치 기구에서 다수를 이루게 되기도 한다. 행정 담당자들은 종종 지역사회나 시민들의 현황에 관한 △ 이해와 문제 감지, 해결 능력에 한계가 크면서도, △ 자신들이 자원을 갖고 있으므로 행정 업무를 ‘하달’, ‘하청’한다는 개념을 갖고 있을 때가 많아서 명목상으로는 ‘협치’ 기구에서 실제로는 협력적 태도보다는 통제적 태도가 강할 때가 많다는 비판이다. V장의 FGI 부분에서 ‘민관협치’의 현장에서 실제 행정관청이 보이는 태도에 대한 여러 생생한 경험담을 서술할 것이다.

끝으로 행정과의 협치는 ▲ 〈정치환경 변화에 따른 영향〉이 너무 크다는 문제가 심각하게 인지되고 있었다. 정부·지자체의 정권 교체가 일어나면 △ 기존 협치 기구를 즉각 폐지하거나 용도를 왜곡하고, △ 과거에 협치를 통해 수립한 정책, 제도, 기관을 무력화하며, △ 시민사회 주체들에 대한 태도가 돌변하는 등 문제가 심각한데도, 시민들이 이를 저지하고 협치 전통을 지속시킬 저항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많은 부정적 측면들은 앞서 서술한 협치 참여의 긍정적 결과들과 상반되는 풍경들로서, 이러한 양면성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협치’가 매우 다른 것을 의미할 수 있음을 말해준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 〈균형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 거버넌스 참여에 따르는 기회와 위험을 함께 고려하면서, △ 참여하는 시민 주체를 확대하고, △ 시민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때 협치는 긍정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림 4〉 총 23회 면접에서 사회적 경제의 장점과 단점에 관한 언급의 분포



사회적 경제의 장점

면접참여자들은 ▲ ‘공익적’ 목적에서 사회적 경제의 장점과 더불어 ▲ ‘경제적’ 관점에서 일반 영리 경제와 비교하더라도 사회적 경제의 이점이 있다고 이야기했다. 먼저 ▲ 〈공익적 관점〉에서 사회적 경제의 여러 장점이 언급되었는데, △ ‘사회적 경제’라는 용어의 의미 그대로 경제적 권리를 행사하면서 공익을 추구할 수 있는 조직형태일 뿐만 아니라, △ 지속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는 커뮤니티 역할을 할 수 있고, △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며, △ 사회운동 목적을 가진 단체의 자매단체로서 재정 기반을 제공할 수 있고, △ 시민들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활동가로 성장해가는 입구로서 역할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점 등이다.

그와 더불어 면접참여자들은 본인이 협동조합을 설립·운영했거나 주변에서 간접적으로 경험했던 바에 근거해서 ▲ 〈경제적 관점〉에서도 사회적 경제의 장점을 언급했다. △ 영리적 관심과 비영리적 관심을 총화하는 데서 얻을 수 있는 이점, △ 구성원들이 다양한 흥미와 관심을 갖고 협동할 수 있다는 점, △ 협력적인 지역경제 부문을 개척할 수 있는 점, △ 협력의 만족도가 경제적 효율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점 등이다. 학문적으로 ‘협동의 경제학’(보울즈, 2020; 정태인·이수연, 2013)의 이론이 주장해온 바가 실제로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 경제 조직을 운영해온 주체들의 경험에서 확인되는 대목이기도 하여, 그러한 사례들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향후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사회적 경제의 단점

하지만 사회적 경제의 경우에도 여러 부정적 측면들이 면접에서 언급되었다. 그러한 문제점은 크게 ▲ 사회적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제도 환경의 문제와 ▲ 사회적 경제 조직들 자체의 문제로 구분해볼 수 있다. 그중 우선 ▲ 〈정책과 제도 환경〉의 측면에서는, △ 사업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평가보다는 사업 수행 역량이 높은 업체가 공공의 지원 프로그램을 독점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 △ 중앙 정부와 광역 지자체 단위에서 상명하달 식으로 사회적 경제 지원사업이 내려오는 문제, 그리고 그 맥락에서 △ 기초 행정단위에서는 행정기관이나 시민들이나 사업을 즉각 수행할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점, △ 정부 정책이 사회적

여러 면접에서 나왔다. 아래 <표 12>는 각 하위주제에 관한 코딩 통계다.

<표 12> 지역 기반 시민활동에 관한 코딩 통계

	코딩된 면접(회)	비율(%)	코딩된 부분(개)	비율(%)
'지역'의 새로운 개념	8	34.78	15	13.89
지역 활동의 강점과 기여	8	34.78	40	37.04
지역 활동의 난점과 한계	7	30.43	16	14.81
비서울권의 특성	10	43.48	37	34.26
전체	23	100.00	108	100.00

위의 코딩 통계에서 먼저 주목할 점은 '지역'을 서울이나 수도권이 '아닌 곳'이라는 주변부 의미로 사용하는 것을 비판하고 새로운 개념을 제안한 내용이 전체 면접의 34%에 달하는 8회의 면접에서 나왔다는 사실이다. 또한 그런 보편적 의미의 지역 기반 활동의 강점과 기여에 관한 발언이 전체 코딩 횟수의 37%를 차지하여, 부정적 측면에 관한 코딩이 차지한 14%보다 훨씬 더 높았다. 하지만 '비서울권' 지역의 시민사회 조건과 현황에 관한 이야기도 전체 면접의 43%, 총 코딩 부분의 34%에 이르는 높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여기서는 주로 비서울 지역의 열악한 환경이 여러 측면에서 부각되었다.

'지역'의 새로운 개념과 그 발전 잠재성

이 연구는 서울 중심의 사고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비서울 지역의 여러 시민활동가를 면접 참여자로 포함시켰는데, 면접 과정에서 바로 그런 의미의 '지방(province)' 개념이야말로 서울 중심 또는 대도시 중심 사고라는 지적이 여러 면접에서 '지역'에 관한 질문에 대한 즉각적 반응으로 나왔다. '지역(local)'은 서울-비서울 간의, 또는 대도시-중소도시, 도시-농촌 간의 격차에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다. 서울시 성북구, 관악구, 종로구를 기반으로 삼는 활동들도 '로컬' 활동이며,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강화, 시흥, 전주, 목포, 부산, 제주의 특정 지역에서 벌이는 활동들과 같은 의미에서 '로컬'하다. 즉 '지역'은 서울이나 대도시 등 보다 더 우월한 무엇'이 아닌' 것을 뜻하는 잔여범주가 아니라, 국가적(national) 범위보다 작은 일정한 지리적 경계 내의 구체적인 생활공간을 가리키는 적극적 개념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면접참여자들은 ▲<'지역'의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그 잠재성을 발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 서울에 기반을 둔 활동은 전국적, 세계적이고, 비서울 지역에 기반을 둔 활동은 그 지역에 국한된 시야와 대상을 갖고 있다는 식의 사고를 비판했다. 정보화되고 세계화된 오늘날

시대에는 △ 로컬 기반을 둔 시민 활동들이 전국 또는 세계를 대상으로 활동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 특정 지역 기반 활동에 전국에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 ‘지역’은 생물학적인 출생지가 아니라, 가치와 삶의 방식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문화공동체가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의 ▲ <지역 기반 시민활동>은 고유한 성장 잠재성을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 △ 한 지역의 성공 사례를 다른 여러 지역으로 전파하는 방식, △ 여러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만나고 교류하는 지역 간 교류의 허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 △ 특정 지역에서 특정 의제나 목적의 활동을 특화시켜서 이에 관심을 갖는 전국의 활동가나 시민들을 유입하는 방식 등이 실제로 그동안 몇몇 사례에서 성공을 거두었던 모델들이었다는 점이 언급되었다. 물론 이것은 모든 지역이 이러한 잠재성을 실현할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뜻은 아니지만, 만약 그런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이 존재한다면 구체적 지역에 기반을 두지 않는 단체들에게서는 기대할 수 없는 종류의 협력과 결속을 시도해볼 수 있다.

지역 기반 활동의 사회적 토양과 기여

그 같은 지역 기반 활동을 발전시킬 수 있는 ▲ <사회적인 토양>에 관해서 많은 설명이 있었다. 그 하나는 △ ‘지역’이 정보 시대에 확산되고 있는 온라인상의 약한 유대가 갖고 있는 한계를 보완할 구체적인 삶의 공간으로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 일상적인 공동체가 활동의 중요한 자원이 되어줄 수 있고, 특히 △ 즉각적이고 실체적인 상호부조를 중개하고 조직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 나아가 참여 시민들은 △ 그러한 경험을 통해 장기적이고 깊은 관계를 형성해갈 수 있는데, 뚜렷이 목적의식적인 애드보커시 단체와 달리 △ 지역 생활공간 안에서는 다양한 세대, 직업, 능력을 가진 사람들 간의 만남과 이해가 가능하며, 그러한 다양한 목적의 활동을 통해 △ 지역 시민들의 단체 또는 공동체들 간에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 등이 강조되었다.

그러한 지역적 토양 위에서 성공적으로 공동체 활동을 개척한 사례들은 ▲ 지역의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고 ▲ 사회문화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일정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면접참여자들은 평가했다. ▲ <정책적·제도적 개선>의 내용으로는 △ 지자체가 실행할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제안하여 실현하는 것, △ 지역 주민 공동체의 관심사를 정책 제안으로 구체화하는 것, △ 지역 행정과 시민사회의 협력 관계를 새로이 구축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지역 활동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 <사회문화적 변화>는 △ 주민들의 문화 활동의 공간 창출, △ 지향을 함께 하는 주민들의 가치공동체와 호혜적 관계 형성, △ 지역 공동체의 공공적 문제 해결, △ 주민들 간의 공동체 형성 또는 관계 개선 등이다.

지역 기반 활동의 난점과 한계

지역 기반 활동의 어려움 역시 면접참여자들은 빠뜨리지 않았는데, 그 어려움들은 종종 앞서 언급한 지역의 긍정적 잠재성과 동전의 양면처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우선 지역 공동체의 사회문화적 자원이 활동의 기반이 될 수도 있지만, 그와 반대로 ▲ 지역의 사회관계의 밀도가 높기 때문에 받게 되는 부담도 있고, 특히 해당 지역 현실에 대한 ▲ 비판적인 문제제기나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할 때 ‘관계의 밀도’가 큰 압박이 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 지역 이권세력이 주민공동체에 강한 지배력을 갖고 있는 곳에서는 그 질서와 갈등하는 활동을 시도하기가 대단히 힘들다. 말하자면 지역공동체가 우호적인 환경에서는 그것이 시민사회 활동의 사회자본이 될 수 있지만, 다른 조건에서는 정반대로 활동에 한계선을 긋는 장애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앞에서 서술한 바대로 지역에 기반을 두고서 전국을 대상으로 한 활동이나 다른 지역들과의 연계를 달성하는 것도 종종 현실 여건상 쉽지 않다는 지적도 많이 나왔다. 우선 지역에 기반을 둔 활동들의 잠재적 확장성과는 별개로, 현실에서는 ▲ 지역에 갇힌 지역운동의 한계를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그와 더불어 ▲ 지역들의 여건 차이로 인해 어떤 지역에서의 활동 경험과 모델이 다른 지역에서 도입되고 확산되는 데에 한계가 있을 때가 많고, 지역 시민활동을 지원하는 공공과 민간의 프로그램을 둘러싸고 ▲ 연대와 협력보다는 경쟁 관계에 놓이게 되는 상황도 흔히 있다고 한다.

끝으로 시민활동이 지역에 뿌리내리는 것이 어려운 것은 활동 주체들의 노력이나 전략의 문제 때문이라기보다는 사회구조적인 배경이 있다는 비판도 많았다. 무엇보다 한국사회의 많은 지역에 공통된 한계로 지적된 것은 ▲ 주거불안정계층의 짧은 거주기간이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평균 거주기간을 점유형태별로 비교했을 때 자가주택의 평균 거주기간은 10.6년인 데 비해 월세 가구는 3.7년, 보증부 월세 가구는 3.2년이였다(국토교통부, 2021). 그에 반해 ▲ 주거안정 계층은 사회변화에 무관심하거나 개혁적인 시민활동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삶의 문제를 공동의 노력으로 해결해야 할 긴급함이 큰 계층은 자신의 거주공간에서 지속적인 공동체를 상상하기 힘든 반면, 지역에 기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역사회 변화를 위한 공동체적 노력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는다는 모순이 있다는 것이다.

비서울 지역의 특성과 지역 지원정책의 문제

이처럼 ‘로컬’에 기반을 둔 시민활동은 특별한 의미와 발전 잠재성을 갖고 있는 동시에, 그 잠재성을 실현하는 데에서 여러 한계와 장애에 부딪치기도 한다. 그런데 ‘지역’에 관한 질문을 던졌을 때 여러 면접 참여자는 또한 그것을 ‘서울이 아닌 곳’으로 이해하고, 그런 지역들의 특수한 조건과 문제점에 관해 이야

용만 하려 한다는 것, 그리고 △ 지역에 청년이 필요하다는 것만 강조되고 청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에는 관심이 없는 정책들이 많다는 등 여러 비판이 제기됐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 정책의 당사자인 청년들의 성장을 위한 자원과 조건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정책개선을 위한 제언이었다.

물론 위와 같은 부정적 현실들은 지역사회를 개선하고 시민공동체를 발전시키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절대적 조건은 아니다. 이 연구의 면접참여자들은 각자의 지역 기반에서 새로운 의제, 주체, 조직을 세우고 정책과 제도, 공공기관을 변화시키는 데에 상당한 성공을 거둔 시민사회 리더와 활동가들이다. 하지만 그러한 성공은 우호적인 정치환경이나 사회분위기를 타고 쉽게 이룬 것이 아니라, 이상의 여러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의 결실로서 달성된 것이었다. 그런 만큼 이들이 성취한 시민사회의 결실들 역시 앞으로 저절로 지속될 것이라고 단언할 수 없으며, 주·객관적 조건이 다른 지역들에서 쉽게 반복되고 확산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 절에서 서술한 긍정적·부정적 조건과 잠재성을 다각도로 이해하고 다양한 구체적 공간에 적합한 전략들을 조율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6. 코로나19가 시민사회에 미친 영향

이 장에서는 <코로나19의 영향>이라는 당면한 관심사를 다룬다. 우리의 상식적인 사고로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강요된 비대면 상황은 시민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라고 할 수 있는 만남을 차단하고 공동체를 해체시키는 결과를 낳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실제로 면접을 통해 그 같은 부정적 영향의 구체적 실태를 파악하게 되었지만, 그와 동시에 코로나19의 영향이 그보다 훨씬 복잡하고 양면적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기도 했다. 코로나19 상황은 오래 전부터 있어왔던 시민사회의 문제점과 더불어 긍정적 잠재성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표 13〉 코로나19가 시민사회 활동에 미친 영향에 관한 코딩 통계

	코딩된 면접(회)	비율(%)	코딩된 부분(개)	비율(%)
부정적 영향, 대응의 한계	9	39.13	72	69.90
혁신의 계기, 성공한 대응	12	52.17	31	30.10
전체	23	100.00	103	100.00

면접 결과의 코딩 통계를 보면, 예상과 달리 코로나19의 영향에 관해 <부정적 영향, 대응의 한계>에 관해 언급된 면접 횟수가 전체 23회 면접의 39%, <혁신의 계기, 성공한 대응>에 관해 언급된 면접이 전체의 52%로 오히려 긍정적 영향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 면접이 상당히 더 많았다. 그와 달리 코로나19의 영향에 관해 코딩된 부분의 빈도를 봤을 때는 <부정적 영향>의 코딩 부분이 전체 코딩의 72%, <긍정적 영향>의 코딩이 전체의 31%로 부정적 코딩이 훨씬 많다. 이는 면접참여자들 중에서 더 소수가 코로나19의 부정적 경험을 언급했지만 긍정적 측면을 언급한 면접참여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발언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코로나19의 긍정적, 부정적 영향에 관한 발언의 양적 빈도와 질적 강도를 함께 봐야 한다.

1) 부정적 영향 또는 대응의 한계

먼저 코로나19 상황이 시민활동에 미친 부정적 영향에 관한 면접 결과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면접 내용을 코딩 횟수가 많은 것부터 배열해보자면 ▲ 단체 인력과 활동의 약화, ▲ 온라인 소통의 한계, ▲ 단체 재정상황 악화, ▲ 사회적 환경 악화, ▲ 정치적 환경 악화의 순서로 분류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단체 인력과 활동 약화>로 코딩된 부분의 비율이 전체 <부정적 영향> 코딩 빈도의 39.13%, <온라인 소통의 한계>로 코딩된 부분이 30.4%로 이 두 가지 토픽이 70% 가까이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크다. 그만큼 인력과 활동, 관계 자체에 미친 영향이 재정이나 정치사회적 환경 악화보다 중요하게 감지되고 있다는 뜻이다. 물론 재정이나 사회환경이 활동과 소통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반 측면을 서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는 없지만, 당사자들이 가장 크게 인지한 측면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체 활동과 참여, 소통의 문제

먼저 ▲ <단체 인력과 활동 약화>의 구체적 내용으로 언급된 것은 △ 집회, 행사, 상시사업의 중단 또는 축소가 불가피했다는 점, △ 회원과의 소통 또는 회원들의 참여가 축소되었다는 점, △ 활동가들의 결집력이 이완되고 심리적으로 위축되었다는 점, △ 새로운 활동가가 유입되지 않는 가운데 기존 활동가들의 이탈이 생겨나면서 조직의 인적 재생산 자체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 등이다. 거기에다 △ 최저임금 인상이 시민사회 단체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법정 최저임금을 모든 유급 활동가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되어서 퇴직, 비정규직화, 근무시간 단축 등의 형태로 단체 인력과 활동이 축소된 경우도 있었다.

그와 더불어 소통과 관계에도 상당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특히 비대면 상황에서 ▲ <온라인 소통의 한계>에 관해 많은 이야기가 있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온라인 소통 상황에서 △ 소수 발언자가 과대

대표되고 다수가 관객처럼 소외되는 경향이 있고, △ 발언자에 집중되어 공간 내의 풍부하고 복잡한 소통이 불가하며, △ 건강한 소통을 저해하는 소수가 있을 때 이를 제어하는 다수 의사의 결집이 어렵다는 점 등이 언급되었다.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한계로 이야기된 것은 온라인상으로는 △ 몸짓과 웃음, 다과 등 다양한 매개를 통한 입체적이고 인간적인 소통이 불가능하고 단일 목적을 위한 사무적 소통만 이뤄지기 쉽다는 점, 그래서 △ 소통 참여자들 간의 신뢰와 친밀감 형성에 한계가 너무나 크고, 궁극적으로는 △ 만남을 계기로 더 깊은 인간적 관계와 유대감을 형성하고 공동의 후속 활동으로 연결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었다.

단체 재정과 정치사회적 환경 악화

위와 같은 활동의 한계와 소통의 문제들은 ▲ 〈단체 재정〉에도 당연히 영향을 주게 된다. 많은 시민사회 활동 단체들이 재정을 상당히 확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계기인 △ 후원행사를 아예 개최할 수 없었던 경우도 많고, 설령 개최한다고 해도 비대면 행사로 개최할 경우에 후원금이 대폭 감소한다. 또한 대면 접촉이 제한된 상황에서 △ 수익사업을 벌이기가 어려웠다는 점, 수익사업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 단체 사업에서 들어오던 수입이 중단되었다는 점 등 전방위적으로 재정 압박이 가중되었다고 한다. 그러한 재정 악화에 따라 △ 사업계획을 대폭 축소해야만 해서 그것이 다시금 수입을 감소시키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어 △ 단체의 부채가 누적적으로 증가하는 열악한 상황에 많은 단체가 처하게 되었다는 것이 여러 면접참여자의 소속 단체 또는 그 주변 단체들의 경험이었다.

코로나19가 시민사회 단체와 그 활동에 미친 부정적 영향은 보다 넓은 정치사회적 환경 악화로 인한 간접적 효과도 포함한다. 시민사회 활동의 ▲ 〈사회적 환경 악화〉의 내용으로 △ 사람들의 일상의 관계 자체가 단절되고, △ 의견과 감정을 표출할 공간이 부재한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 문화 자체가 개인적이고 내향적인 방향으로 변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각기 고립된 상황에서 미디어를 통해서만 사회와 소통하다보니 △ 사회적 의제에 관한 강한 유대가 약화되어 타인들과 만나고 함께 무엇인가를 하는 적극적인 삶으로 나아가지 않는 경향이 생긴 것 같다는 언급들이 있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 새로운 참여자의 유입이 정체되는 시기가 지속되면서 앞서 서술한 단체 활동이나 인력 재생산에도 영향이 오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한 사회 환경의 악화와 더불어 ▲ 〈정치 환경〉의 측면에서 △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소통이 단절되거나 소원하게 되었고, △ 정치권이나 행정 부문이 코로나19를 이유로 시민사회의 대화 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일이 빈번했으며, △ 코로나 이전에 상시적으로 가동되던 협치 테이블이 대폭 중단되어 회의도, 행사도 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고, △ 정부의 코로나19 지원 대상에서 비영리 부문은 제외되어 재정 지원조차 받지 못하였다는 등의 여러 문제 상황이 언급되었다. 이상의 면접 내용들은 그동안 코로나19

가 시민사회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여러 설문조사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못한 질적 맥락과 경험들을 드러내는 만큼, 이러한 부정적 영향들이 ‘시민사회의 롱 코비드(long COVID)’로 고착되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일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2) 혁신의 계기 또는 성공적 대응

그러나 시민사회 활동가들은 코로나19 시기를 부정적으로만 경험한 것은 아니었다. 예상과 다르게, 많은 면접참여자가 코로나19 상황을 계기로 오래 전부터 있어왔던 문제적 관행들을 혁신하게 되었거나,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 발전의 긍정적 잠재성을 발견하고 개척하게 된 경험을 이야기하였다.

가장 많이 언급된 내용은 ▲ 온라인 소통이 활성화되면서 소통 참여자들의 지역적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다는 점이었다. 과거에는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기 어려웠고, 많은 행사가 서울·수도권 거주자 중심으로 진행될 때가 많았는데 비대면 소통의 기술적 인프라가 대중화되고 문화적 수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전국 어디에 있는 사람든 소통 파트너로 포함시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서울 중심의 논의구조가 비대면 소통으로 완화되는 경험을 많은 사람이 했다는 뜻이다.

지역의 관점에서 면접 결과의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코로나19 상황에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거나 오히려 긍정적 영향이 있었다는 발언이 비서울 지역에 기반을 둔 참여자들에게서 더 많이 나왔다는 사실이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 비서울 지역에서는 소규모의 대면 만남이 계속되었거나 심지어 과거보다 더 활성화되기도 했다고 하며, ▲ 서울과 수도권에서 특히 강도가 높았던 비대면 상황을 겪으면서 ‘꼭 서울에 거주하면서 일할 필요가 있나?’라는 질문을 던지며 귀촌하거나 중소 도시로 이주한 사례가 종종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 사회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 ‘사회적인 삶’의 가치를 재인식하게 되면서 공동체적 교류가 활발한 단체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기도 했다고 한다.

한편 서울에 거주하는 면접참여자들은 다른 측면에서 코로나19를 계기로 긍정적 변화를 이야기했다. 가장 많이 언급된 내용은 ▲ 불필요한 회의와 행사, 회식이 축소되었고, ▲ 재택근무가 확대되면서 노동의 강도가 줄어들고 보다 효과적인 업무와 삶의 균형이 가능해졌다는 것이었다. 또한 단체 사무공간에서 앞세대 간부들과 선배 활동가들의 ▲ 불필요한 간섭을 덜 받게 되어 더 평등한 관계에서 즐겁고 자발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된 것이 너무 좋았다고 하니, 이러한 반응은 그동안 젊은 활동가들에게 조직 내 위계구조와 중첩된 앞세대에 대한 부담감이 작지 않았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와 관련된 또 다른 흥미로운 진술은 비대면 소통 상황이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은 여러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 대면 소통 시의 권력관계를 희석시켜주는 효과가 있었다는 경험이다. 대면 회의에서는 조직 내 직급, 연령, 또는 연차에 따른 위계 측면에서 강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현장의 분위기를 장악하여 회의 내내 혼자 말하는 경우가 빈번했는데, 온라인 소통에서는 모두 똑같은 면적의 화면

속에 들어 있는 균등한 공간 분할이 젊은 평활동가들에게 조금 더 나은 대화 상황으로 느껴졌다는 이야기다. 우리는 앞에서 온라인 소통에서 소수의 발언자가 대화를 지배하고 다수가 관객으로 소외되는 문제를 언급한 면접참여자들을 보기도 하였는데, 이처럼 동일한 비대면 소통인데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상반된 경험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7. 지속가능성을 위한 과제

마지막으로 이 절에서는 지금까지 서술한 바와 같은 시민사회의 여러 내외적 상황과 긍정적, 부정적 조건들 위에서 시민사회 단체와 활동가 개인의 활동을 ‘지속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과제가 무엇인지를 논한다. <표 4>에서 보았듯이 이는 면접참여자들은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한 주제였을 뿐 아니라, 곧이어 V장에서 보게 될 FGI에서는 대화 과정에서 참여자들이 감정적으로 고조되고 발언의 강도가 상승작용을 일으킬 만큼 민감한 쟁점임이 드러나게 된다. 심층면접에서 <지속가능성을 위한 과제>에 관한 발언 내용은 크게 ■ 지원 기관의 과제, ■ 사회 전반의 과제, ■ 활동 주체의 과제로 분류되며, 세 번째 측면에서 특히 ■ 새로운 세대 활동가들의 과제에 관해 많은 발언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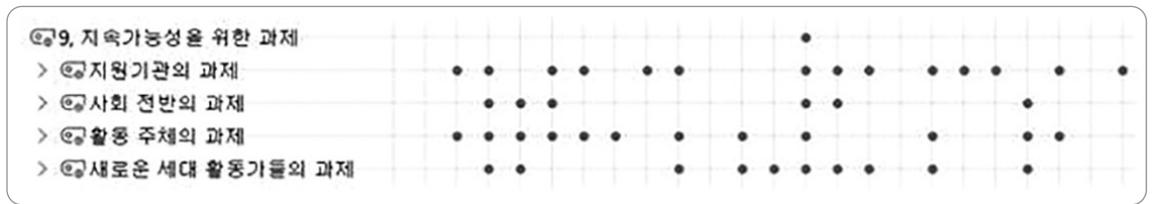
<표 14> 단체와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과제에 관련된 코딩 통계

	코딩된 면접(회)	비율(%)	코딩된 부분(개)	비율(%)
지원기관의 과제	14	60.87	56	31.64
사회 전반의 과제	6	26.09	21	11.86
활동 주체의 과제	12	52.17	48	27.12
새로운 세대 활동가들의 과제	10	43.48	52	29.38
전체	23	100.00	177	100.00

코딩 통계에서 주목하게 되는 점은 한편으로 <지원기관의 과제>와 같은 외부 환경에 대한 기대, 다른 한편으로 <활동 주체의 과제>나 <새로운 세대 활동가들의 과제>와 같은 자기성찰적 문제의식이 비슷한 빈도로 언급되었다는 사실이다. 총 23회의 면접 중에서 지원기관에 대한 바람이 언급된 면접이 60%, 활동 주체와 청년 세대 활동가들의 향후 과제가 언급된 면접이 각각 52%, 43%였고, 코딩된 부분의 비율로

보아도 이 세 하위주제가 각각 31%, 27%, 29%로 유사한 비중을 차지했다. 아래 <그림 5>는 총 23회 면접에서 각 하위주제의 언급 여부가 표시되어 있는데, 단체와 활동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이슈에 관해 거의 모든 면접참여자들이 언급을 하였을 뿐 아니라 지원기관의 과제와 주체적인 과제 등 다양한 측면을 골고루 이야기할 만큼 이 문제가 중요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 총 23회 면접에서 지속가능성 관련 각 하위주제에 관한 언급의 분포



지원 기관의 과제

이 연구의 면접참여자들이 속한 단체들은 대체로 외부 지원기관에의 의존도가 크지 않았지만 다양한 종류의 지원을 받은 경험은 많이 있었고, 면접참여자들은 다른 단체들의 긍정적, 부정적 경험들에 대해서도 상세히 인지하고 있었다. 향후 시민사회 활동을 지원하는 데에서 중점이 두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면접참여자들의 의견은 상당히 분명하고 일관됐다.

압도적으로 많았던 제안은 ▲ 활동가들과 단체들의 입장에서는 사업 자체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사업을 기획하고 수행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이었고, 그 다음으로 ▲ 공간과 네트워킹을 돕는 지원이 새로운 시대의 시민활동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이었다. 현재의 지원 현황의 문제점에 관해서는 ▲ 민간 지원기관과의 관계에서 더 긍정적인 파트너십을 경험하지만 민간의 시민사회 지원이 드물고 지원 규모가 작다는 현실, 그리고 ▲ 시민사회 단체들이 공익성을 견지하면서 재정 자립을 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이지만 외부 지원에 과도하게 의존했을 때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 등이었다.

먼저 ▲ <사업보다 사람 지원>이 필요하고 합리적이라는 의견은 가장 많이 코딩되었을 뿐 아니라, 가장 많은 면접참여자가 언급한 바이기도 하다. 기존의 대부분의 시민사회 지원 프로그램에 특징적인 △ 사업 중심 지원의 문제점이 여러 차례 지적되었는데, 실제로는 시민활동의 사업비 용도로 드는 비용보다는 그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의 노동과 시간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사업과 단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사람에 대한 지원은 △ 활동가들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조해줌으로써 공익을 위한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해주고, 특히 △ 젊은 활동가들이 시민사회 부문에서 성장의 단계를 밟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전제조건이라는 점이 강조되었다.

면접참여자들은 그와 같은 ‘사람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 개선 방안까지 제안하였는데, 이

는 활동가들이 평소에 이 문제에 대해 많은 고민과 숙고를 해왔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사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것은 △ 인건비의 대상, 기간, 규모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지원의 다양성, 지속성, 안정성을 최대한 균형 있게 충족시켜야 한다는 뜻인데, 현행 방식들 가운데 면접참여자들이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한 방식은 △ 펠로십 형태의 공익활동가 양성 프로그램들이었다. 어떤 방식이든 간에 △ 선정 절차와 지원 조건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사람 지원의 확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얻기 위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고, △ 단기적인 생계 지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원기관과 수혜자들 간의 장기적 신뢰관계를 형성하여 공익적 효과를 높여야 하며, △ 소수의 전업 활동가만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의 다양한 참여 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대상의 폭을 넓히고 현실화해야 한다는 등의 여러 제안이 나왔다.

다음으로 ▲ 〈공간과 네트워킹 지원〉은 부분적으로 △ 〈사회자본 형성 지원〉과 같은 의미이기도 하다. 앞서 3절에서 새로운 활동의 어려움을 서술할 때, 특히 지금 청년 세대가 겪고 있는 일상의 사회적 관계 단절과 사회자본의 결핍이 공익적이고 공동체적인 활동의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이 언급되었다. 이 같은 문화적 환경에서, 사람들이 만나고 교류하며 함께 무엇인가를 시작할 수 있는 △ 〈만남과 연결의 허브〉로서 공간이 공공의 자원으로 제공되어야 시민들이 고립된 삶에서 벗어나 시민사회의 본질인 결사체적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의 여러 측면에서 면접참여자들은 민간 지원기관들과의 그동안의 경험이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문제는 ▲ 민간 지원기관과 지원 프로그램, 지원액 자체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단체가 앞서 4절에 서술한 바와 같은 여러 문제를 안고 있는 공공의 지원이나 용역 사업으로 눈을 돌리게 된다는 점이다. 그런 조건에서 ▲ 외부 지원에 의존하는 공익활동의 여러 문제점이 이 대목에서 다시금 주제로 떠올랐는데, △ 단체들의 자생력과 경쟁력 신장이 지체된다는 점, △ 혁신의 동기부여가 되지 않고 사업비 사용에 급급하게 된다는 점, 그런 과정에서 생계는 생계대로 각자 고민해야 하는 활동가들은 △ 자발성과 에너지가 소진되기 쉽다는 점 등이 언급되었다.

사회 전반의 과제

시민사회 활동과 단체들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과제로서 위와 같은 지원기관의 과제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과제도 폭넓게 논의되었다. 면접 내용은 크게 ▲ 시민사회 활동의 성과들이 일부 리더들에 의해 대표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 정치, 행정, 기업 등 사회권력이 시민사회의 우수한 활동가들을 끌어가는 흡입력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문제로 모아졌다.

먼저 ▲ 〈운동 성과의 개인적 전유〉라는 문제가 ‘시민사회 지속가능성’의 주제에서 이렇게 많이 언급된 것은 예상 밖의 결과였다. 여러 면접참여자가 이 문제 때문에 단체와 활동가들이 상처를 받고 있다고

한 구체적 과제로서 새로운 세대 활동가들의 유입 경로를 발굴하는 데에 조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새로운 세대의 삶과 활동의 특성에 맞는 지원 방법을 개발하며, 이 세대의 개인주의와 느슨한 연대의 장점을 살리면서 그 한계를 극복하고 보완하는 길을 함께 모색하는 일 등이 언급되었다. <조직 내 세대 갈등 극복>이라는 과제도 이와 직결되는데, 1~3절에서 서술했듯이 위계적인 소통과 의사결정 구조 등 핵심적 문제들을 자각하고 이를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만 단체든 운동이든 지속될 수 있다는 제언이다.

세대 문제와 연관되는 시민사회 내부의 혁신 과제를 구체화하자면, ▲ <시민단체의 조직문화와 구조 개선>이 그 중심에 있다. 앞서 3절에서 상세히 서술한 여러 문제점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여기서 다시 등장했는데 △ 일반 기업보다도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할 과제, △ 평등하고 소통적인 조직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과제, △ 주로 청년 세대인 평활동가들에게 실무 역할만 부여하고 있는 현실을 변화시킬 과제, △ 이들이 중요시하는 주체적인 참여권을 조직 내에서 부여해야 할 과제 등이 그것이다. 지금 청년 세대 활동가들은 처음부터 평등하게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을 때, 그 조직에 일체감을 느끼고 자발적으로 헌신할 동력이 생긴다는 것이 이번 면접조사에서 거듭 언급된 바다.

이상의 개혁 과제들을 얼마나 달성할 수 있느냐는 ▲ <활동가들의 개인적 전망 문제에 대한 대안>을 찾을 수 있느냐라는 문제와 직결된다. 많은 면접참여자는 일견 ‘개인적’ 고민거리처럼 보이는 이 문제를 집단적·제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오늘날 시민사회 단체들의 지속가능성은 물론, 시민사회라는 사회적 공간 자체의 존속을 위해 긴급하고 절실한 숙제라는 데에 입을 모았다. 위에 서술한 조직문화, 노동조건, 생계문제 등의 심각성이 이해되고 존중되지 않는다면 활동가들은 여기에 △ 직업으로서 미래 비전이 없다고 느낄 수밖에 없고, △ ‘다음 스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 단체에서 청년 활동가들이 짧은 재직기간 후에 퇴직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그렇게 되면 △ 단체의 전망과 활동가들의 전망이 불가분의 관계로 얽혀서 동반 쇠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새로운 세대 활동가들의 과제

이와 같이 많은 면접참여자들은 젊은 활동가들과 참여자들이 시민사회 활동에서 보람과 유대감을 느끼면서 개인의 성장을 함께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지속가능성을 위한 핵심 과제라고 보고 있다. 그러한 개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자원을 갖고 있는 기존 단체들과 사회적 지위를 가진 앞 세대 리더들의 인식 변화와 역할이 요구됨은 물론이다. 하지만 이 연구의 면접참여자들은 새로운 세대 활동가들 자신의 문제와 과제에 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했다.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 청년운동 2세대 육성의 과제였고, 다음으로 ▲ 생애주기에 따른 지속가능한 활동 대안 모색, 그리고 ▲ 청년 단체들이 지금 직면해 있는 조직 재생산의 문제를 극복하고, 장기적으로는 ▲ 흩어진 힘들의 연대, 사회개혁의 비전 모색, 정치적 리더십의 형성 과제였다.

문제로 등장한다. V장 FGI에서는 청년 운동 활동가들이 정당, 행정, 기업 등으로 흩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한 우려와 실망이 강하게 표출되었는데, 그 배경에는 ‘청년 운동’의 구조적 특성이 놓여 있다.

나아가 이러한 상황은 조직적 수준의 문제로도 이어진다. 어떤 사회운동 부문에 활동가로 입문하는 연령이 빨라도 20대 초중반이라면, 그 부문에서 경험을 쌓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기까지 일정한 시간이 걸린다고 했을 때 ‘청년 당사자 운동’의 영역에서는 활동가가 리더십을 발휘하기 시작할 무렵에 그 운동을 떠나야 하는 구조적 난점이 발생한다. 청년 활동가들의 개인적인 생애주기 문제가 △〈너무 짧은 단체 수명〉이라는 조직적 문제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은 것이다. 이런 여러 문제를 논하면서 면접참여자들은 청년들이 주체가 되는 사회운동들이 △〈확장된 당사자성 개념〉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했다.

새로운 세대 활동가들이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해 해결해야 할 세 번째 과제로 ▲〈조직의 재생산 문제 극복〉을 꼽은 것도 위와 같은 청년 운동의 특수한 상황과 관련이 있다. △ 많은 청년단체가 유사한 시기에 생겼다가 그중 상당수는 해체되었고, △ 개인성과 다양성이 강조되는 분위기 속에서 조직 구조의 불안정성이 빈번히 발생하며, △ 자체적인 회원 회비 기반과 수익 구조가 취약한 가운데, △ 대중적 동력보다는 거버넌스 참여로 정책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청년 운동이 제도화된 측면 등이 모두 운동단체로서의 조직 재생산 문제를 심화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상의 여러 집단적 문제 상황을 극복해가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연대와 비전, 정치적 리더십〉의 창출이 중요할 것인데, △ 개성과 다양성을 중시하면서도 단체들 간의 연대와 △ 개인들 간의 친밀성을 강화하고, △ 청년 사회운동의 의제를 확장하면서 사회개혁의 비전을 제시할 △ 정치적 리더십의 형성이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혹은 과연 가능할까 하는 것이 그동안 새로운 운동들의 탄생과 성장 과정을 최전선에서 겪어온 면접참여자들이 던진 질문이었다. 2010년대 초반부터 지난 10여 년 동안 새로이 등장해서 확장되어 온 운동들은 분명 한국 시민사회와 사회운동의 장에 중대한 변화와 혁신을 만들어냈지만, 이 연구의 많은 참여자는 기존 운동들이 변해야 할 것들과 더불어 새로운 세대의 단체와 활동가들 역시 그 자신의 약점과 한계를 성찰하면서 스스로 혁신하고 변해야 할 때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 시민사회의 새로운 흐름에
대한 질적 면접 연구

아름다운재단 기획연구

V. 초점집단면접 분석결과

1. 초점집단 A
 2. 초점집단 B
 3. 초점집단 C
 4. 초점집단 A, B, C 비교
-

V. 초점집단면접 분석결과

연구 방법론을 서술한 Ⅲ장에서, FGI는 단순히 시간이나 비용의 이유 때문에 여러 면접참여자를 동시에 면접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집단의 특성을 규명한다는 특수한 목적을 갖고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그에 상응하여 FGI의 분석 단계에서도 관심의 초점은 개별 참여자의 경험이나 의견에 있는 것이 아니라, ① 초점집단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 분석을 통해 규명하고, ② 각 초점집단 내의 집단역학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Krueger and Casey, 2009; Morgan, 1998). 그런 관점에서 FGI의 분석이 초점을 맞춰야 할 측면을 정식화해보면 아래의 10가지 정도로 요약된다(Krueger, 1998: 31-38; Steward and Shamdasani, 2015). 이중 앞의 6개는 집단 전체의 특성이며, 뒤에 4개는 집단 내 관계 역학에 관련된다.

- 순서: 어떤 주제가 가장 먼저, 또는 뒤늦게 언급되었는가?
- 빈도: 어떤 주제에 관해 가장 많은 발언이 나왔는가?
- 범위: 모든 구성원이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한 주제는 무엇이었는가?
- 강도: 감정 격화, 고성, 다수 동시발언 등의 형태로 고조된 주제는 무엇인가?
- 구체성: 본인 경험이나 구체적 사례를 들어 상세히 설명한 주제는 무엇인가?
- 부재: 다른 집단과 비교해서, 또는 예상과 달리, 의외로 누락된 주제가 있는가?
- 합의: 각 초점집단의 구성원들이 분명히 합의한 의견은 무엇인가?
- 이견: 구성원들 간에 이견이 분명한 주제는 무엇이며 어떤 의견이 대립했는가?
- 변화: 대화 중에 의견이 수정된 경우가 있는가? 그 이유와 의미는 무엇인가?
- 모순: 논리적, 윤리적, 정치적으로 상충된 의견이 인지되지 않은 경우가 있는가?

FGI의 분석결과를 보고하는 방식은 매체, 분량, 목적 등 여러 측면에서 구분해볼 수 있다. 매체를 기준으로 문서 보고, 구두 보고, 영상 보고 등이 있으며, 분량 면에서 상세 보고, 간단 보고, 메모 보고 등으로 나뉜다. 목적에 따른 구분이 특히 중요한데, ① 원자료(原資料) 모형(raw data model), ② 기술적(記述的) 모형(descriptive model), ③ 해석적 모형(interpretative model)의 세 가지 방식으로 구분된다(Krueger, 1989: 109-120). 원자료 모형은 면접조사의 각 질문에 대하여 면접참여자들의 주요 발언만 직접 인용하는 형식으로서, 그 맥락을 이해하고 의미를 해석하는 것은 전적으로 독자의 몫이다. 기술적 모형은 조사 상황과 대화의 전개과정 등을 서사적 형식으로 서술하면서 면접참여자들의 발언 인용을 삽입하는 방식인데, 여기서도 발언 내용의 의미에 대한 해석은 독자에게 남겨진다. 끝으로 해석적 모형은 연구자가 원자료 제시와 상황 기술 뿐 아니라 조사 결과의 의미 해석까지 독자에게 제시하는 서술이다.

〈표 15〉 초점집단A의 발언자별 발언 횟수 및 단어 수 통계

발언자	발언 횟수	발언 횟수 비율(%)	단어 수	단어 수 비율(%)
A-1	53	15.14	1,181	10.47
A-2	36	10.29	2,154	19.10
A-3	80	22.86	2,725	24.16
A-4	92	26.29	2,836	25.15
사회자-1	71	20.29	1,964	17.42
사회자-2	18	5.14	417	3.70

1) 시민사회 의미와 자기정체성

시민과 괴리된 ‘시민사회’, ‘시민단체’

초점집단면접의 진행은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전체 토론을 여는 성격을 가진 느슨한 도입 질문(introducing questions)을 거쳐, 핵심적인 세부 주제들에 관한 본격적인 질문(main questions)으로 들어가는 절차를 밟는다. 이 연구에서는 면접의 도입부에 『한국 시민사회 현황에 관한 질적 연구』라는 연구 과제명을 상기시키면서 자연스럽게 ‘시민사회’, ‘시민단체’, ‘시민운동’, 또는 ‘운동’, ‘활동’, ‘활동가’ 등의 용어에서 즉각적으로 어떤 의미 내지는 이미지가 떠오르는지, 혹은 평소에 동료들이나 접촉하는 시민들이 이런 용어들을 어떤 뜻으로 이해하는 것 같은지를 물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세 집단 모두 바로 이 도입 질문에서 곧바로 첨예한 실질적 쟁점들이 쏟아져 나왔으며, 어떤 경우에는 뒤에 이어질 주요 질문들이 사회자의 개입 없이 면접참여자들에 의해 서둘러 소환되었다.

‘시민사회’라는 용어에 대한 공통된 반응은 우선 단체 공식자료 외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다음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은 시민들과 동떨어진 어떤 것을 연상시킨다는 것이었다. 단체들이 빈번히 사용하는 자기정체성의 용어가 시민들과 활동가들에게 낯선 것일 뿐 아니라, 시민들과 괴리된 조직이나 집단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된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시민단체’는 그러한 시민과의 괴리를 더욱 분명하게 함축하는 용어로 이해되고 있었다. 이 맥락에서 시민사회 단체들의 현황에 관련된 많은 실질적 쟁점들이 토론되었다.

첫 번째로 발언한 A-4는 ‘시민사회’라는 단어에서 ‘시민사회연대’와 큰 시민단체들이 즉각 떠올랐다고 말했는데, 이후 토론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시민사회연대’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를 가리킨다(FG-A: 19). A-1은 ‘시민사회’가 “그냥 언론에서 쓰는 말”로 생각되며, “활동가 아닌 친구들”한테 ‘시민사회’가 무슨 의미인지 잘 알 수 없는 단어인 것 같다고 말하면서(FG-A: 23), 특히 ‘시민단체’라는 용어는 시민들로부터 “뭔가 분리되는 느낌”이고 “우리끼리만 이려고 있나” 하는 느낌을 준다고 했다. 이에 A-3이 “대중과 분리되는”이라고 부연하고,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 세계는 “사실 활동가들만 있는 세.. 세계”라면서 비밀을 말하듯이 작은 목소리로 말하여 참여자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FG-A: 34, 39-40). 시민사회 단체들 사이에 통용되는 자기정체성의 개념들이 일반 시민들에게는 생소하거나 오해 받는 언어적 계통을 형성하고 있을 수 있다는 함의가 담긴 대화다.

이처럼 모든 참여자가 ‘시민사회’, ‘시민단체’ 등의 용어가 시민들의 일상용어에서 괴리되어 있고 특정 단체를 연상시킨다고 하면서도, 참여자들 역시 무의식 중에 본인이 속한 조직 또는 조직생태계를 지칭하는 말로 이 용어들을 사용했다.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에 자기소개를 할 때 참여자 A-3은 “노동인권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했고(FG-A: 9), 다른 참여자들도 토론 과정에서 본인이 속한 운동단체나 긍정적 맥락에서 다른 단체들을 지칭할 때 ‘시민단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러한 용어들이 시민사회 단체 내부의 맥락을 벗어나면 편견에 의한 오해나 악의적인 왜곡의 위험에 직면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체하여 다양한 의제 부문을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정체성 언어를 아직 갖고 있지 못함을 보게 된다.

2) 시민사회 현황과 추이 평가

오늘날의 사회운동, 약화인가 변화인가?

‘시민사회’, ‘시민단체’의 의미를 물은 뒤에 ‘활동’, ‘활동가’라는 용어에 관한 토론으로 들어갈 계획이었으나 초점집단A의 참여자들은 ‘시민사회’ 개념과 시민들 간의 괴리를 이야기하던 중에 다음 질문으로 다룰 예정이었던 시민사회 현황에 관한 논쟁적인 토론으로 곧장 들어갔다. 참여자 A-2는 ‘시민사회’, ‘시민사회 단체’ 등의 용어를 일반 시민들이 잘 사용하지 않을 뿐더러 이 용어가 지칭하는 대상이 실제로 “특정한 소수의 집단”이라고 하면서, 그 소수 집단과 “대중 사이의 연결고리라고 하는 게 많이 약해진 것”이 사실이고 이 단체들이 “시민사회의 어떤 운동을 조직하는 역할로서 리더 집단의 이런 지위를 많이 상실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단어가 왜소해진 거”라고 진단했다(FG-A: 47).

하지만 시민사회 단체와 대중의 연결이 전반적으로 약화되었다는 이러한 평가에 대해, 여성노동운동 단체에서 활동하는 A-4는 자신의 활동 부문에서는 학생운동의 소멸 등을 말하던 2000년대 후반에 비해

최근 오히려 조직재생산과 대중과의 연결이 더 활발하다고 느낀다고 했다(FG-A: 55). A-3도 ① 과거의 대학 내 학생운동에 비해 오늘날 대학 밖 노동단체들의 대중과의 접점은 넓어졌고, ② 박근혜 정권을 겪으면서 행동의 효능감을 갖게 되었으며, ③ 페미니즘 운동의 참여는 일반 회사 다니는 젊은 여성들도 활발하다는 점을 언급했다(FG-A: 77-80). 특정 단체들이 대중과 접점이 약해진 것이지, 다른 부문에서는 운동과 대중의 접촉면이 과거보다 넓어지고 대중적 참여가 확대된 면도 있다는 것이다.

A-4는 의제 부문별 차이뿐 아니라, ‘운동’의 개념 자체를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예를 들어 학생운동의 경우, 과거 방식으로 ‘운동권’이 “학생회 잡고 정파조직 운동하고” 하는 의미의 운동은 죽었지만 대학 내에 페미니즘 모임이나 생태운동 같은 흐름은 과거보다 더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그런 건 학생운동이 아닌가? 우리가 다르게 생각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반문이다. 운동-시민 간의 연결 자체가 약화되었다기보다, 과거 방식의 연결이 약해지고 새로운 방식의 연결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FG-A: 81, 85-88).

활동가인가 노동자인가?

우리나라 사회운동의 현주소에 관해 추가적인 의견을 요구하자 흥미롭게도 인권단체에 있는 참여자 A-1은 활동가 인권이라는 주제를 꺼냈는데, 다른 모든 참여자가 이에 걱정적으로 반응하면서 대화가 깊어졌다. 참여자 A-1에 따르면 요즘엔 사회운동 단체의 구성원들이 스스로를 ‘노동자’로 인식하고 다른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노동인권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요구가 많은 경우 조직 내에서 제대로 수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다. “좀 앞세대들은 운동가, 사회 운동을 한다는, 그런 주체성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노동자로 자기를 인식한다는 거예요.”(FG-A: 101)

이에 대해 참여자 A-3이 즉각 “엄청 중요한 문제”라고 강하게 공감을 표했고 곧이어 A-4까지 개입하여 의견을 적극 개진하여, ‘활동가란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첨예한 쟁점들을 담고 있음이 드러났다. A-1은 한편으로 힘든 “노동강도”와, 다른 한편으로 “딴 데 가서는 분노할 일을 여기서 어쨌든 활동으로 풀어가”는 “보람”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런 고민 속에서 “개인 활동가가 버틸 수 있는 가를” 자문했다(FG-A: 101-104).

이 대화는 오늘날 ‘활동가’ 정체성의 내적 모순과 긴장을 계속해서 드러냈다. 대화를 다시 이어받은 A-3과 A-4는 오늘날 많은 운동단체에서 “월급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직도 약간 ‘활동비’, 이렇게 얘기를 한다”(A-4), “임금이 아니라”(A-3) 공익활동에 대한 최소한의 사례를 받는다라는 관념만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자들은 ‘노동으로서의 활동’, ‘직업으로서의 활동가’라는 새로운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이처럼 변화한 젊은 세대 활동가들의 의식과 변화하지 않은 관행 사이의 괴리를 매우 문제적으로 보았다.

한편 참여자 A-2는 요즘 젊은 활동가들에게 운동단체 활동은 경험과 역량, 전문성을 쌓아가는 과정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는 무엇보다 활동가로서 ‘지속가능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에 관해 추가 질문을 하자, 참여자들이 “와씨!”(A-4), “술, 술을 갖고 …”(A-3)라고 격한 감정을 실어 농담을 했고, 다른 참여자들이 이에 고개를 끄덕이고 크게 웃으면서 적극적으로 호응했다(FG-A: 116-118). 개별 심층면접 때와 마찬가지로, 활동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주제는 젊은 활동가들의 깊은 실존적 고민과 현실에 대한 불만이 응축되어 있는 뜨거운 쟁점이며, 시민사회 단체들과 지원기관들이 한국 시민사회 전반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자원을 쏟아야 할 문제임을 거듭 확인하게 된다.

3) 시민사회 문제와 혁신 과제

조직문화와 지속가능성 문제

그러면 한국 시민사회와 사회운동의 문제와 혁신 과제가 무엇이나는 질문에 대해 초점집단A의 참여자들의 대화는 계속해서 활동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주제에 집중되었다. 이어진 발언들은 젊은 활동가들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1차적 원인 또는 해결과제로서 무엇보다 운동단체의 조직문화, 세대갈등, 그리고 직장 내 인권 존중 등을 꼽았다(FG-A: 119).

참여자 A-3은 운동단체 내의 조직문화 문제가 종종 상당히 심각한 상태라고 보고 있었다. “진짜로 느끼는 게,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게 사실 어떤 회사에서 세대 간 갈등이라는 게 제일 불거지는 지점이거든요. 그니까 되게 앞세대들은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랫세대는 ‘왜 나한테 이렇게 대해?’가 되는, 충돌하는 지점이 직장 내 괴롭힘이고, 시민단체 영역에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점점 많이 터지고 있어요.”(FG-A: 119) 단순히 세대 간 문화 차이가 아니라, 앞세대 간부와 젊은 평활동가 간의 위계에서 발생하는 권력 문제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A-4 역시 지난 몇 년 사이에 직장 내 성희롱이나 상사의 ‘갑질’에 대한 청년들의 의식이 빠르게 성장해서 많은 회사가 대응책을 마련했는데 “그 의식 수준을 운동사회가 오히려 못 따라”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FG-A: 134).

이 지점에서 ‘활동가란 누구인가?’라는 문제가 다시 등장했다. A-3은 노조나 운동단체에서 선배 세대는 젊은 활동가들에게 헌신과 도덕적 책임감을 요구해서 젊은 활동가들은 그로 인해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고 하면서, “최근 몇 년 사이에 진짜 많이 그만뒀어요. 진짜 많이 그만뒀어요.” 라고 두 번 반복해서 강조했다(FG-A: 126). 이에 A-4는 “그냥 활동가 들어가면 다 잡아먹히고 활동 그만 둔다고. 아예 지금 그냥 블랙홀이라고”라고 말해 참여자들이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FG-A: 129). 뒤의 대화에서

A-3은 이 문제를 다시 꺼내어 과도한 노동강도, 주말 근무, 상시적인 호출 등의 문제에 대해 젊은 평활동가들과 “합의하지 않고” “희생만을 요구하는” 조직문화, 그리고 구체적인 문제를 제기하면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방어적 태도를 지적했다(FG-A: 273).

여기서 대화는 또 다시 ‘지속가능성’ 이슈로 돌아왔다. 참여자 A-4는 ‘월급’ 이야기를 조심스레 꺼냈다. “그냥 월급이 작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지금 받는 월급으로 지금 살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어찌다 한번 아프면 골로 가. (모두 웃음) 그런 어떤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야 한다는 거.”(FG-A: 173) 참여자들은 시민활동에 전념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넉넉한 생활을 바라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활동의 지속불가능성에 큰 원인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상황이 열악한지를 말해주는 것이라는 데에 서로 강한 공감을 표했다.

참여자 A-2는 노동운동의 사례를 들어, 노조 현장활동가들과 달리 중앙 조직에서 “앞세대들이 남아 있는” 사람들은 “생계를 위한 직장”으로 자리를 잡아서 “관료화”되었다고 말하면서, 많은 노동조합이 다수 대중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대안이 되기보다는 대기업 노동자들의 “특권”이 되고 있는 현실이 문제라고 평가했다(FG-A: 182). 요약하자면, 초점집단A에서는 한국 시민사회와 사회운동의 전반적인 현황과 추이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지만은 않았고 과거 조직운동과 다른 방식의 새로운 대중운동의 에너지를 높이 평가하고 있었지만, 사회운동 단체들의 조직문화나 활동가들의 현실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 인식을 보였다.

운동단체의 침체, 시민들의 사회참여 활발

참여자들이 20~30대 젊은 연령대이다 보니 특히 청년 세대가 주도하는 사회운동의 현황에 대해서도 많은 대화가 이뤄졌다. 참여자 A-2는 사회운동 전반의 상황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앞서 보였는데, 청년운동도 그것이 한창 확장기였던 2010년대 전반기와 매우 다른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예를 들어 청년노동운동들은 애초에 실업자 운동, 아르바이트 노동자 운동으로 출발하면서 “사회에서 청년이라는 단어가 ... 호소할 수 있는 서사”를 “이용해서 확산시켰는데 이제는 반대로 ... 차별, 혐오, 투기, 이런 것들을 주도하는 집단도 청년”이 된 상황이 되어서 “청년이라고만 호명해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한계를 마주하고 있”다는 것이다(FG-A: 191-192).

이후의 대화에서 참여자 A-2는 다른 각도에서 청년단체의 현재 상황을 비판적으로 진단했다. 청년들이 만든 단체들은 기존 단체들이 간과했던 “사람들의 피부로 와닿는 문제를 건드리는” 운동을 통해서 “대중 접점이 늘었”던 성과를 올렸지만, “저희 자체적 평가를 한 거는 ‘2018년에 끝났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거버넌스가 확산되고 나서, 이거 자체가 주류 제도화로 흡수되고 이러는 과정에서” 설립 초기의 대중적 접점을 잃어갔다는 평가다(FG-A: 277-278).

이렇게 청년 의제의 변질과 너무 이른 제도화, 대중적 동력 약화 등 비관적 진단이 이어진 후에, 참여자 A-1는 세대를 불문하고 시민들이 다른 많은 이슈에서는 침체되어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그 예로 페미니즘 운동, 퀴어 운동, 인권(차별금지법 캠페인), 미얀마 쿠데타, 우크라이나 전쟁 등 민주주의, 평화 관련 국제연대 행동 등 많은 면에서 시민들의 참여가 활발하다는 점을 들었다(FG-A: 197). 이어서 참여자 A-3, A-4가 다시 여성단체의 예를 들어, 대중적으로 알려진 단체들의 경우 활동가 모집 공고를 내면 때론 경쟁률이 10:1이 되기도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침체된 노동운동 부문의 상황을 일반화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FG-A: 217-223).

하지만 A-3, A-4도 새로운 활동가들이 많이 들어오는 여성단체나 여성노동운동 단체의 경우에도 신입들이 “들어와 보니까 오래 있을 곳이 못 된다”고 느끼게 되면 머지않아 빠져나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A-3은 것처럼 운동을 그만 두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으로 조직 내의 정파주의(또는 노선갈등)와 관료주의 및 권위주의를 들었는데, A-2 역시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라며 적극 동의했다(FG-A: 231-237). 운동단체 내에 해묵은 정파갈등, 그에 관련된 인간관계의 어려움, 위계적이고 경직된 분위기가 젊은 활동가들의 조기 이탈에 큰 원인이 되고 있다는 데에 참여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이어서 A-3과 A-4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의지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 단체들의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몇 가지 이유를 연달아 언급했다. 그 내용을 요약해보면, ① 시민사회 단체들이 정당보다 매력적이고 신뢰할 만한 지원 대상으로 간주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 ② 가장 규모가 크고 여러 면에서 조건이 좋은 일부 단체로 지원이 몰린다는 점, ③ 단체들이 경제적으로나 노동조건 면에서 좋은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면서 높은 수준의 결과물을 기대한다는 점, ④ 시민들이 단일 이슈에 일시적으로 참여하거나 후원하는 것 이상으로 지속적, 일상적으로 단체에 연결될 수 있는 효과적 통로가 없다는 점 등이다(FG-A: 244-251).

4) 시민사회의 정치적 영향력과 정치 진출

약화된 정치적 영향력, 늘어나는 정당 취업

다음으로 시민사회의 제도정치에 대한 영향력, 또는 시민활동가들의 정치 진출에 관해서 초점집단A 참여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는데, 앞의 운동단체 내 문제에 관한 대화와 달리 분명한 쟁점과 의견이 형성되지 않았다. 초점집단A의 경우 전반적으로 운동 내부 이슈에 비해 발언의 빈도와 강도가 모두 약한 편이었기 때문에 (4) 시민사회의 정치적 영향력과 (6) 시민활동가의 정치 진출이라는 두 주제를 여기서 함께 다룬다.

시민단체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민주화 이후 일정 시기에 비해 지금은 약해졌다는 평가에 대한 의견

을 물었을 때, 첫 번째 발언자인 A-4가 즉각적으로 보인 태도는 “힘은 가져야 되나요?”라는 반문이었다. 또 다른 맥락에서 촛불집회나 강남역 추모 등 사건에서 운동단체들의 주도성이 약해졌는데, 꼭 ‘단체’들이 “민주화운동 세대처럼 힘을 가져야 되나”라고 질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A-3은 “그래서 민주당 [당선] 됐잖아. 민주화세력이 힘을 얻어서”라고 말해서, 기존 시민단체의 정치적 영향력을 주로 민주당과의 연계로 이해하는 시선을 보였다(FG-A: 280-285).

하지만 참여자 A-1은 비조직적 방식의 대중 참여가 갖는 한계와 시민사회 단체들이 해야 하는, 그리고 하지 못하고 있는 적극적 역할에 강조점을 뒀다. “다 흩어져 있으면 그걸 모아서 힘으로 만드는 게” 단체들의 역할인데 “그러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평가였다. 그래서 “시민사회 단체들이 좀 힘을 모아내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있[는데] 이 힘이 과연 정치적 권력 이런 건지는 잘 모르겠”다는 고민을 이야기했다(FG-A: 287-295).

참여자 A-2는 이제는 시민사회와 정치의 영향력 관계가 아예 전도되었다고 진단했다. 시민사회 단체들이 조직적으로 정치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은 약화된 데 반해, 젊은 활동가들이 시민사회 조직을 그만 두고 정당으로 가는 경우는 늘고 있다는 것이다. 활동가들이 운동단체에서 활동하다가 몇 년이 지나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정당들의 당직자로 가거나 선출직 정치인을 지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이야기다. 시민사회 내에서 다른 부문이나 단체로 이동하지 않고 정당이나 행정으로 많이 진출하는 이유를 물었을 때, 운동 부문은 “전망이 안 보여서”, “갈 곳이 마땅히 없어”서, “소통되지 않는다는 답답함”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했고, 이에 대해 다른 참여자들이 공감하는 반응을 보였다(FG-A: 152-156). 이처럼 시민사회와 정치와의 관계에 관해서 초점집단A의 구성원들은 제도정치에 대한 영향력 행사 자체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거나, 제도정치가 시민사회 인력을 끌어당기는 힘에 관해 많은 대화를 나눴다. 이는 2절에서 살펴볼 거버넌스 그룹인 초점집단B의 다수 구성원이 시민사회의 정치적 영향력이 지난 몇 년 사이에 더 강화된 것으로 느끼고 있었던 것과 대조된다.

5) 민관협치와 공공 지원

재정자립 당위론보다 공공 지원 확립이 시급

정부·지자체의 협치 기구 참여와 공공의 시민사회 지원에 관련된 주제에서 흥미로운 점은, 사회운동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초점집단A의 구성원들이 전반적으로 공공의 시민사회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는 점이다. 뒤에서 상술하겠지만, 협치 기구의 내부 구성원으로 깊이 관여했고 공공 지원을 받거나 협력사업을 오랫동안 수행한 초점집단B와 초점집단C의 구성원들은 이 주제에 관련된 구

체적인 경험과 사례를 기술하며 강한 불만과 불신을 표했다.

초점집단A와의 면접에서 사회자가 정부·지자체의 용역 사업 등 주제를 언급한 뒤에 “한편에서는 이걸로 [시민사회가] 종속됐고 이 사업 하느라 실제 활동을 못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라고 말문을 열자 참여자 A-4가 즉각 “그건 말이 안 되는”이라고 반발했고, A-3은 “윤석열의 생각이죠”라고 그에 호응했다. 이어서 사회자가 “반대편에서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이런 프로그램들이 생긴 것도 운동의 결실이다, 이런 얘기도 있”다는 점을 부연하고 참여자들의 의견을 물었다(FG-A: 305-307). 질문을 마치기도 전에 분명한 입장이 표명될 만큼 이 주제에 대한 두 참여자의 의견의 강도가 섰다.

참여자 A-3은 정부 지자체 지원이 정권변화에 영향 받을 수 있는 취약성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조례로 잡아놓거나, 복지로 박아놓거나, 그래서 어떤 정부에게 흔들리지 않는 방식으로 독립성을 갖출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어떤 단체들은 점점 종속적으로 되어가고, 그걸 거부하는 단체들은 아예 끊기고 이런 식으로 양극화”되는 것이 문제이며, 그러므로 “힘을 합해서 흔들리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 지원을 받으면 안 되는 건가? 그럼 정부는 왜 있지? 정부가 사실 해줘야 되는 건데? 왜 그걸 다들 그렇게만 생각하지? 이게 저는 사실은 마음이 답답합니다.”(FG-A: 311)

그러나 이에 A-2는 외부 지원에 의존하는 것이 문제가 작지 않음을 언급했다. 예를 들어 공공부문이 사회서비스나 커뮤니티 조직 등을 지원했을 때, “단체가 자생 전략을 그렇게 해서 찾지 못하면 없어지게 많은” 것이 현실이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조직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단체가 그런 방식으로 [지원을 받으면] 시민 참여를 유도하지 않아도 생존할 수 있으니까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FG-A: 315). 그러나 곧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단체들이 독립적인 재정을 갖추기 힘든 현실이 이야기되면서 논박이 이어졌다.

A-4는 특히 서울 이외 지역에서 시민들의 후원에 기초해서 단체를 운영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현실에서 “사회운동 단체들 정부 지원 받고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그냥 진짜 염불 외듯이 읊는 분들이 진짜 많다”고 하면서, 대안 없이 자립성만 요구하는 주장이 현실에 대한 이해를 결여하고 있음을 비판했다(FG-A: 316). A-3은 시민 후원을 기반으로 공공에 대해 독립성을 갖는다 해도 또 다른 성격의 종속성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후원회원이 많은 단체들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후원자가 많아서, 단체가 민주당을 비판하면 비난 전화를 하고 후원을 끊는 등 단체의 정치적 독립성에 압박이 들어온다는 것이다(FG-A: 317-319). 단순히 공공에 대한 의존이나 독립이냐가 아니라, 공공재정에 의존하느냐 아니면 민주당 지지층의 후원에 의존하느냐라는 어려운 딜레마가 발생하기도 한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A-3은 자신이 속한 단체는 기업을 비판해야 하는 단체로서 기업의 지원을 받을 수도 없고, 정부 지원을 받으면 “정부가 바뀌는 순간 이제 망한다는 것과” 정부·지자체 용역사업 같은 것을 하면 “그거에만 매달려 다른 사업들을 못하게 된다는 거”를 경계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래서 “이러나저러나 후원 회원들로만 하는 식으로 자립을 하는 구조를 지금 만들고 있다”고 했다(FG-A: 320). 말하자면 초점집단 A의 구성원들이 속한 단체들은 공공이나 기업의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회원들의 후원에 기초한 독립 재

정을 지향하고 있지만, 그렇게 운영할 수 없는 많은 단체들의 현실을 생각할 때 공공의 바람직한 지원 방향을 논하지 않고 재정독립만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 초점집단 B

초점집단B의 구성원들도 초점집단A와 마찬가지로 사회운동적 지향을 갖고 있거나 일부는 사회운동 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을 갖고 있지만, 초점집단B 참여자는 모두 각기 다양한 방식으로 정부·지자체의 협치 기구나 공공의 용역사업에 참여한 경험을 갖고 있다. B-1은 지자체의 청년정책 관련 협치 기구에 참여했으며 여러 용역사업을 수행한 바 있다. 참여자 B-2, B-3, B-4는 오랫동안 사회운동 단체와 협치 기구에 모두 관여하고 있다. B-2는 지자체 청년정책 협치 기구의 임원으로 다년 간 종사했고, B-3은 정부 및 지자체의 협치 기구에 참여하거나 임원 역할을 맡고 있으며, B-4는 지자체 협치 기구에 참여하다가 이후에 사회적 의제를 다루는 정부 위원회에서 종사했다.

초점집단B의 참여자 연령은 30~40대이며 여성 1명, 남성 3명이다. 발언 점유도의 분포를 보면 참여자 B-2, B-3, B-4가 각각 전체 단어 중에서 21.57%, 21.97%, 23.43%를 차지하여 거의 비슷한 양의 발언을 한 데 비해, 참여자 B-1은 전체의 11.06% 밖에 차지하지 않아서 초점집단A의 경우처럼 참여의 불균형이 여기서도 나타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발언의 횟수로 보면 오히려 참여자 B-1이 12.70%로 두 번째로 많고 참여자 B-2, B-3, B-4가 각각 11.11%, 11.90%, 14.29%를 차지했다. 참여자 B-1은 사회자의 요청 없이 모든 주제에서 대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압축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정리해서 개진했다.

〈표 16〉 초점집단B의 발언자별 발언 횟수 및 단어 수 통계

발언자	발언 횟수	발언 횟수 비율(%)	단어 수	단어 수 비율(%)
B-1	16	12.70	1,343	11.06
B-2	14	11.11	2,620	21.57
B-3	15	11.90	2,669	21.97
B-4	18	14.29	2,846	23.43
사회자-1	47	37.30	2,315	19.06
사회자-2	16	12.70	354	2.91

1) 시민사회 의미와 자기정체성

‘시민사회’는 공공 의제 참여하는 모든 시민

초점집단B와의 인터뷰에서도 가장 먼저 이 연구과제의 제목을 상기시키면서 ‘시민사회’, ‘시민단체’라는 용어에 관해 물었다. 앞에서 초점집단A의 많은 참여자가 주로 기존 대형 시민단체들이나 그런 단체들이 주도하는 연합조직을 일차적으로 떠올렸고 그런 단체들이 시민들과 괴리되어 있는 측면을 주로 이야기한 데 반해, 초점집단B의 구성원들은 그와 상당히 다른 경험과 관점을 보였다.

참여자 B-2는 지자체의 청년정책 협치 기구에 참여한 것이 활동가로서 정체성을 갖기 시작한 첫 경험이었다고 했는데, 그 이전에는 ‘시민사회’라고 하면 ‘시민단체’라고 불리는 특정 단체들과 동일한 의미로 생각했으나 협치 기구에서 다양한 시민들을 접하면서 ‘시민사회’가 특정 단체들만이 아니라 “시민의 어떤 주체성에 관심을 가지고” “어쨌거나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 전반을 의미하는 용어로 많이 확대”되었다고 했다. B-2에게 그러면 ‘시민단체’로 떠오르는 예를 묻자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국제엠네스티를 언급했고, ‘시민사회’는 이보다 훨씬 넓은 의미에서 시민들이 사회적 관심 활동을 하는 영역으로 이해했다(FG-B: 27-30).

참여자 B-3도 ‘시민사회’란 “특정한 연상을 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어떤 것”이라고 느끼고 있고 “되게 다양한 참여자들이 있고, 어떤 공공의 일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공적인 지위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닌” 무엇이라고 정의를 시도했다. B-3도 “일하기 전에는 시민단체가 시민사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라고 하여, 협치 기구 참여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시민단체’의 회원이 아니지만 앞에 정의한 “공공의 일”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다양한 시민들을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생각하게 되었다고 회고했다(FG-B: 32).

하지만 앞서 살펴본 초점집단A 구성원들과 거의 일치하는 용어 이해가 초점집단B에서도 마찬가지로 발견되었다. 대형 시민단체에서 일하기도 했던 참여자 B-4는 사람들이 보통 ‘시민사회’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 것 같고, ‘시민단체’라고 하면 “순수해야 되는데 순수하지 않은 그런 단체로 인지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견을 말한 후에, 그런 시각이 “옳다고 볼 수는 없고”, “약간 매도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이 그런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고 했다(FG-B: 34).

마지막 발언자인 B-1은 앞의 논의들을 정리하면서 ‘시민단체’에는 “이익집단처럼 묘사되는”, “지금 오세훈 시장이 프레이밍하고 있는 그 느낌이 저한테도 여전히 있는 것 같고”, 그에 반해 ‘시민사회’에는 “시민단체라는 테두리나 아니면 거버넌스라는 테두리가 아니더라도 온오프라인에서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FG-B: 35). B-3은 이처럼 ‘시민단체’라는 용어에 부정적인 프레임이 씌워져 있어서 회원 모집을 할 때 ‘시민단체’라고 소개하면 시민들이 의혹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인권단체’라고 활동 의제를 구체적으로 말하면 소통하기가 좋다고 부연했다(FG-B: 37).

‘활동하다’ - 확장된 정체성의 언어

주목할 점은 위의 대화의 맥락에서 사회자가 “시민단체입니다, 시민운동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대안으로] 부를 수 있는 말이?”라고 묻자 곧바로 ‘활동가’라는 대답이 나왔다는 것이다. B-2의 대답은 다음과 같았다. “그래서 저희가 서로 ‘활동가’라고도 하고, ‘연구활동가’ 이런 표현도 쓰고, 되게 다양하게 쓰려고 하는데 계속 그래서 설명이 길어지는 것 같아요.” 즉 ‘시민단체’, ‘시민운동’ 같은 용어는 이제 많은 시민이 “정치적 편향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문제가 있다면, 그와 달리 ‘활동가’는 운동단체, 협동조합, 연구공동체 등 무척 다양한 영역에서 어떤 사회적 가치를 위해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지칭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 맥락의 다양성만큼이나 의미의 모호성이 있고, 그래서 부연설명을 해야 명확한 소통이 된다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FG-B: 38-39).

이 점에서 참여자 B-2, B-3, B-4는 거의 동시에 발언하며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합의된 의견을 형성해갔다. B-4는 가족, 친지, 시민들에게 ‘운동단체’, ‘시민단체’에서 일한다고 말하면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고 특히 시민단체에서 일한다고 하면 곧바로 “문제인 지지자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단체 성격을 설명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B-2도 “정치적 편향 들어가고, 바로.” 라고 덧붙였고, B-3도 “그거 돈 받고 하는 일이나, 뭐 이런” 편견이 발생한다고 부연했다(FG-B: 40). 이 용어의 사용이 많은 오해와 왜곡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B-4의 발언에서 ‘시민단체’ 뿐 아니라, ‘운동단체’라는 용어도 부정적인 시선을 유발한다는 견해가 등장해서 추가 설명을 요청했다. 그 맥락은 ‘시민단체’라는 용어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달랐다. ‘시민단체’가 주로 권력과의 연계를 연상하게 만든다면, ‘운동’이라는 말은 사람들에게 사회비판적 이미지가 강하게 인식되기 때문에 젊은 활동가들 사이에선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가 되었다고 한다(FG-B: 41-42). 참여자 B-3은 활동 경력이 10년 이상 되었는데 10년 전에는 ‘운동한다’, ‘무슨 운동한다’, 이런 표현을 쓰기는 했지만 당시에도 ‘운동’ 한다고 하면 “데모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런 이미지가 강했기 때문에 “그게 주는 어감이 딱히 좋지는 않았던 거 같았던 걸로 회고했다”(FG-B: 43). 청년운동들이 탄생하고 있던 2010년대 초에 ‘운동’의 과격한 이미지가 이미 대중성에 장애가 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오늘날 청장년 세대 참여자들 사이에서는 ‘활동한다’는 표현이 더 많이 사용된다고 하는데, 참여자 B-1은 그렇게 말할 때 “뭔가 되게 동종(同種)이라는 생각이 일단 들어”서 “나랑 정치적 의견이 너무 다르진 않겠구나, 라는 안심”이 든다고 했고, B-2도 ‘활동가’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같이 기자회견 가자고 말해볼 수 있는 사람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FG-B: 44-47). B-3은 과거엔 ‘활동가’라고 하면 단체에서 전업으로 일하는 사람을 보통 생각했는데, 오늘날엔 “이게 직업적인 특성이라기보다는 내가 하는 일을 무엇으로 규정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다는 점을 부각시켰다(FG-B: 51). 이 용어가 시민사회의 다양한 부문에서, 다양한 깊이로 관여하고 있는 많은 사람의 ‘우리 의식’을 형성·유지하는 정체성 언어의 하나로 기능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한편 앞의 토론들은 과거 방식의 단체운동이 큰 틀에서 약화되고 새로운 참여 방식들이 늘어나는 점을 주로 말했다면, B-4는 과거 시민단체들이 지금보다 더 넓은 지지층을 가질 수 있었다는 의미에서 새로 생겨난 운동들이 기존 단체들의 한계를 “극복”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 그 예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평가되는 신생단체인 청년유니온, 닷페이스 등도 과거의 대표적 단체들보다는 규모도 많이 작고 재생산도 안정적이지 않아서 운동 전반이 “그런 의미에서 좀 가라앉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FG-B: 65). 요약하면 시민사회 현황에 대한 평가에서 초점집단A와 공통점이 많이 나타났는데, 전반적으로 약화 추이라는 진단과 강화-약화의 두 측면을 균형 있게 보아야 한다는 입장으로 나뉘어진다는 점이 그러하다.

3) 시민사회 문제와 혁신 과제

‘재정’ - 시민사회 단체의 핵심 문제

시민사회의 가장 큰 문제와 극복 과제를 물었을 때 초점집단A에서는 단체 내 노동강도, 조직문화, 세대갈등, 정파갈등, 활동가들의 경제적 불안정 등이 집중적으로 토론되었던 것과 달리, 초점집단B의 구성원들은 이 질문을 받고 단체의 재정 문제를 가장 먼저 논의했다. 첫 번째로 발언한 B-1은 정식으로 법인을 설립해서 회원 구조를 만들고 사업을 하는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협치 기구가 많이 생기는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조직과 재정의 운영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거기서 습득하기도 한다고 이야기했다(FG-B: 72). 이에 대해 B-4는 공공의 지원과제나 보조금을 신청해서 1~2년씩 지원 받는 방식이 “그게 좋은 부분도 있으면서, 이게 지속 가능하냐? 라고 하면 좀 의문이 생기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다”고 유보 의견을 덧붙였다(FG-B: 73-77).

단체 재정 문제에 토론이 집중된 것은 우연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참여자 B-3은 재정 이슈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서도 계속할 만큼 이 문제에 큰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었다. “돈, 돈 얘기로 자꾸 수렴이 되는 것 같은데. 돈이, 사실 저는 단체 살림을 보는 입장에서 돈이 진짜 A부터 Z인데 돈이 없으면 활동가도 없고.” B-3이 특히 강조한 점은 요즘은 특정 단체에 장기·정기 후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이슈에 후원하며, 그렇게 후원하는 사람의 수나 후원 액수가 적지 않다는 점이었다. “단체에 가서 정기는 안 하고, 단체 입장에서는 좀 속 터지는 일이지. 근데 어쨌든 사람들이 이슈를 대하는 방식, 단체를 대하는 방식은 되게 변화하고 있다...”(FG-B: 79)

이에 참여자 B-2는 B-1과 B-4의 논의 주제로 다시 돌아가서, 시민사회 단체의 자체적인 재정 기반 확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용역 사업이나 보조금 등 적극적인 재정 확보 노력이 불가피하지만, 그것이 ‘재정 종속’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원기관에 관련된 이슈 제기가 어려워지는 등 “악순환처럼 되는

구조가 있는 것 같”다는 점을 지적했다. 즉 재정 독립성과 재정 안정성을 동시에 충족시키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딜레마 상황이 장기화된다는 것이다(FG-B: 82). 이러한 재정 상황은 점점 많은 사람이 특정 의제 부문의 공식단체에 가입하거나 후원하기보다는 다양한 의제에 걸쳐 단일이슈 캠페인에 참여하는 경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조직문화 – ‘인권’과 ‘권력’ 문제

시민사회의 핵심 문제로 재정 논의가 계속 이어져서 사회자가 초점집단A에서 활발히 논의되었던 조직문화 이야기를 꺼내자 참여자 B-4가 즉각 강한 불만을 토로했고 이에 관한 추가 토론이 이어졌다. 재정 이슈가 먼저 토론되었지만 이 문제가 중요하지 않았던 것은 아님을 확인하게 된다. B-4는 조직문화나 조직 내 인간관계로 인한 “안 좋은 경험이 많아”서 “30대 중반 활동가 치고 안 아픈 사람을 별로 못 본 것 같다”고까지 말했다. 구체적인 사례로 특히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 “언더처럼 뒤에서 조종하고 하는 문화”를 들고, 조직 내 의사소통이 불투명하고 부조리한 문제를 비판했다. 이 지점에서 대화는 초점집단A와 마찬가지로 앞세대 상급자들과의 관계 문제로 이어졌다. 선배 활동가가 후배 활동가를 “규정짓고” “평가질을 하는 게 되게 자연스럽게 너무 많이 되는” 현실 때문에 “그런 걸로 고통 받았던 친구들을 많이 봤던 것 같다”고 했다(FG-B: 84).

B-4는 시민사회와 운동 영역에서 ‘평판’, ‘명망’, ‘이름’ “이런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은 권력을 갖고 안 좋은 행동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런 권력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박할 기회가 많이 없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고 말했다(FG-B: 89-90). 이에 대해 참여자 B-1은 민주적이고 평등한 소통과정이 아니라 소수에 의해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는 조직문화가 결국 “권력의 문제”인 것 같다는 해석을 덧붙였다. 초점집단A와 B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된 이 문제는, 시민사회 영역에서 정치나 기업 등 다른 사회부문과 마찬가지로 권력과 위계에 관련된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정치·기업 부문과는 다른 권력의 원천과 기제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내용이다.

위의 대화의 연장선상에서 참여자 B-2는 사기업에서 일했던 자신의 경험과 비교하여, 조직 내 인간관계나 상급자의 괴롭힘 등의 문제는 사기업에도 마찬가지로 있지만, 사기업에서는 종사자들이 노동법 적용이 되고 사내 복지체계를 활용할 수도 있는 데 비해 많은 시민사회 단체에서는 그런 것이 어렵다는 차이를 지적했다. 또한 시민사회에는 상근자가 몇 명 안 되는 단체가 다수이기 때문에, 그 내부에 문제가 발생하면 부서 이동을 통한 분리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덧붙였다(FG-B: 86). 이로부터 참여자들은 시민사회 단체 내의 조직문화, 소통과 인권 문제가 기업이나 정부조직과 마찬가지로 진지하고 엄격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다.

4) 시민사회의 정치적 영향력

‘대중’과 ‘협치’ - 시민사회 정치적 영향력의 두 원천

시민사회의 정치적 영향력이라는 주제에서 초점집단A는 제도정치에 영향을 미치려는 욕구 자체에 내재된 위험을 경계하거나 제도정치가 시민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대화가 이뤄졌고, 시민사회가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경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그와 대조적으로 초점집단B는 시민사회의 행위자들이 지금도 제도정치의 정책과 입법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어떤 면에서 과거보다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앞으로도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참여자 B-2는 일단 현 상황에 대한 평가에서 “의제별로 다르다”는 신중한 입장에서 출발했다. 그 예로 최근 기후 의제에서는 많은 시민이 관심 갖고 있어서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데 반해, 주거 의제의 경우 대중적인 동력이 붙기 힘들어서 정치 영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결국 돌고 돌아서 시민들한테 이 이슈가 소구성이 있어야지 결국은 그것을 보고 정치 의사결정자들도 움직인다고 보는” 입장이다(FG-B: 91-92). 이에 B-3도 “기업도 물건을 잘 팔다가 꺾이기도 하고 새로운 걸 또 개발해서 잘 팔아서 매출을 올리고 하는” 것처럼 “활동도 비슷한 사이클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고 말하면서, 최근에도 사회적으로 주목 받는 이슈들을 제기하는 데에서 대중운동의 역할이 계속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라고 전망했다(FG-B: 94).

흥미로운 점은 초점집단B에서는 시민사회의 정치적 영향력에 관한 대화가 곧바로 협치 기구를 통한 영향력 행사에 관한 토론으로 이어졌고, 이 지점에서 강조점의 차이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B-1은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시민단체의 정치적 대표성이나 영향력이 되게 크다”고 평가하면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자리에 시민단체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았음을 상기시켰다. “아젠다가 정당발(發)보다는 사회운동발이 좀 더 많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런 부분이 영향력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발언했다(FG-B: 96). 과거에 시민사회의 정치적 영향력이 정치권과의 개혁동맹으로 실현되었다면, 지금은 주로 협치 참여를 통해서 이뤄진다는 변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B-4는 협치 참여의 이중적 측면을 강조하면서, “법이나 조례 같은 것들이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더 설계가 많이 되고 있고 ... 그런 차원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는 강해지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그런 협치 기구에 초대 받는 “단체 수가 되게 한정적”이어서 다른 단체들은 제외되고 해당 단체에게는 과부하가 된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그런 참여에 대해서 “시민단체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도 좋지 않은, 부정적인 부분이 생겨났기 때문에 정치적 영향력은 확실히 좀 힘을 잃어가는 느낌”이라는 의견을 냈다(FG-B: 106).

6) 시민활동가의 정치 진출

개인화된 정치 진출의 문제점

끝으로,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정치나 행정 부문으로 이동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었을 때 B-1은 활동가들이 시민사회 영역 내에서 계속 생계를 유지하고 성장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시기의 연령 주기를 지났을 때 사람들이 분화되어 나가”서 국회 보좌관, 지자체 의원, 행정직 등 다양한 부문으로 진출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의견을 내면서, 그런 가운데 정치권으로 나아가 부정적 사례를 만드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을 아쉬워했다(FG-B: 126).

뒤이어 발언한 B-4도 마찬가지로 긍정적 가능성과 구조적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실망과 우려를 갖게 되는 양가적 감정을 표했다. 시민사회 활동가가 정치에 진출해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고 시민사회에서 계속 활동하기 어려워 구조적으로 불가피한 면도 있지만, 현실에서 정치권이 활동가 출신 젊은 정치인들을 흡수해서 소모하는 문제가 크다는 것이다. 그는 일례로 2022년 지방선거에서 청년 정치인 출마를 보면서, 정치 부문의 자력(磁力)에 의해 시민사회가 공동화(空洞化) 될 위험을 우려하게 됐다고 했다. “뭔가 좀 허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 영역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가 버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 의원이라도 한번 당선되고 돌아와야 활동을 더 편하게 하지 않냐”라는 당선자 동료의 “그 말을 부정하기는 좀 어렵더라”면서 정치가 활동가들을 끌어당기는 현실적 힘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FG-B: 127).

참여자 B-3은 더 강한 톤으로 정치 진출의 현실에 대한 불만을 표했다. 그동안 단체 활동 후에 정치권에 가서 성공한 인물들은 “우리가 같이 만든 성과를 자원으로 정치인이 된 것까지 오케이, 너무 좋아, 근데 갔는데 더 이상 우리의 동료가 아니고 딴 사람 되더라는” 것이다. “이런 단체들이 더 크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고 이런 일을 하는 정치인을 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론적으로는 “정치에 가는 건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단체에서 얻어낸 명망으로 정치를 하러 간다는 표현이, 이게 통용되게 된 데에는 이런 경험적인 요소들이 좀 작용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말했다(FG-B: 128).

오래된 대형 시민단체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B-4는 세대에 따른 차이도 언급했다. 앞세대가 설립한 기존 단체들과 달리 지금 청년 단체들 내에서는 “정치에 대해서 크게 거부감이 없다, 그리고 민주당에 가는 것에 대해서도 크게 문제의식을 못 느꼈다, 그런 차이를 되게 많이 느꼈고.” 특히 지역에서는 정치 쪽에 있다가 시민활동 영역으로 돌아와서 단체 설립하는 청년들을 종종 봤다고 했다(FG-B: 129-130). 이러한 청년 활동가 세대의 변화는, 활동 후 정치 진출이라는 주제가 더 이상 과거처럼 정치인, 고위공직자, 공공기관장이 된 일부 시민사회 간부들에만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정당으로 갔거나, 고려 중에 있거나, 또는 정치 진출을 전망에 두고 운동단체에서 터를 닦고 있는 많은 청년 활동가들 사이에 ‘정치 진출’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넓게 퍼질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3. 초점집단 C

초점집단C의 참여자들은 초점집단A와 초점집단B처럼 사회운동 단체나 협치 기구에 참여한 경험도 있지만, 사회적 경제 부문에서 활동한 경험을 갖고 있다는 특성이 있다. 참여자 C-1은 과거 노동운동 단체에서 활발히 활동했는데 현재는 사회적 협동조합 조직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참여자 C-2는 대학 학생운동 활동 경험을 갖고 있으며, 현재 사회운동 단체와 청년 협동조합 조직에서 활동하고 있다. 참여자 C-3은 생협 활동을 오랫동안 했으며, 지자체 및 지역주민들과 관계하는 다양한 시민활동에 관여하고 있다. 참여자 C-4는 지역 청년협동조합과 시민사회 네트워크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초점집단C의 참여자들의 연령대는 20대 후반에서 40대까지며, 성별은 여성 1명, 남성 3명이다. 발언의 점유도를 보면 참여자 C-1이 발언한 단어가 전체 말해진 단어의 25.96%, C-2가 24.41%, C-3이 15.74%, C-4가 17.69%를 차지했다. 최대빈도 참여자와 최소빈도 참여자의 차이가 약 7%로서, 그 차이가 각각 14%, 10%였던 초점집단A, 초점집단B에 비해서 균등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발언 횟수는 참여자 C-1, C-2, C-3, C-4가 각각 전체의 16.41%, 15.63%, 13.28%, 11.71%로서 참여자 간 차이가 크지 않다. 초점집단C는 가장 연령이 높은 참여자 C-3과 C-4의 차이가 10년 이상 나서, 참여자 간의 연령 차이가 가장 큰 집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균등한 참여도를 보였다.

〈표 17〉 초점집단C의 발언자별 발언 횟수 및 단어 수 통계

발언자	발언 횟수	발언 횟수 비율(%)	단어 수	단어 수 비율(%)
C-1	21	16.41	3,904	25.96
C-2	20	15.63	3,672	24.41
C-3	17	13.28	2,368	15.74
C-4	15	11.72	2,660	17.69
사회자-1	52	40.63	2,366	15.73
사회자-2	3	2.34	70	0.47

1) 시민사회 의미와 자기정체성

시민사회의 외연 확대와 내적 다양화

초점집단C의 참여자들도 초점집단B와 유사하게, 한편으로 ‘시민사회’가 다양한 공익적·비영리 활동을 하는 시민들을 포괄하는 넓은 개념이라는 점과 더불어,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들이 ‘시민단체’에 대해 종종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이중적 측면을 집중적으로 토론했다.

대화를 연 참여자 C-4는 “이 시민사회라는 게 영리와 비영리가 같이 뭔가 결합이 돼서 나아가야 되는 어떤 그런, 결과적으로는 비영리적인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 그런 어떤” 영역으로 생각된다면서 입을 열었다. 그에 이어서 C-4는 시민사회가 “비영리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시민 집단”이지만, 영리적인 방법으로 자원을 끌어와야 지속가능한 영역이라는 점을 덧붙였다(FG-C: 11-12). 실제로 법적 규정으로도 ‘비영리단체’의 영리활동이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해서 단체회원들의 이익으로 배분하지 않으면 된다. 그런데 시민사회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대해 곧바로 C-4가 이 같은 영리-비영리 관계에 초점을 맞춰 답한 것은 사회적 경제 종사자들로 구성된 초점집단C의 특성이 첫 번째 발언부터 드러난 대목이다.

하지만 뒤이어 발언한 C-1은 현재 사회적 협동조합에 종사하고 있지만 과거에 노동운동 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데, 흥미롭게도 사회운동 그룹인 초점집단A와 유사하게 ‘시민사회’는 정치나 기업과 구별되는 큰 영역이지만 ‘시민단체’ 하면 민주화 이후 설립된 대형 단체들을 연상시키고 “사실은 시민과 구별되는 무언가”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이야기했다. 여기서 “시민과 구별되는”이라는 말의 의미를 사회자가 물었다. “이런 거죠. 소위 ‘시민 없는 시민운동’,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나오는데, 그런 이야기할 때 뭔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있잖아요. 맨날 알 만한 사람들만 다 모여 있고, 시민들과 함께 한다는데 그분들은 대체 누구인가? 정말 우리를 지지하고 있는가? 함께 하고 있는가? 시민사회 단체가 신뢰도가 높을 때는 하나라고 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FG-C: 18)

여기서 초점집단C의 대화는 초점집단B와 매우 유사한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즉 ‘시민사회’는 시민들의 비영리 활동 영역이라는 넓은 의미를 갖지만 ‘시민단체’는 특정한 정치적 의미를 갖는 단체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이해되는 면도 있다는 대전제에 합의한 뒤에, 전반적인 대화 방향은 전자(前者)의 측면에 집중되었다. 대화의 주요 관심사는 넓은 의미의 ‘시민사회’에 포함되는 구성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집단들인가 하는 것이다.

참여자 C-2는 ‘시민사회’라고 하면 “처음에는 사회운동 이런 것들을 생각했는데, 활동하면서 사회운동 뿐 아니라 비영리 영역 전체를 포괄하는 활동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회고했는데(FG-C: 20), 이는 초점집단B에서 참여자 B-2가 말한 경험과 일치한다(FG-B: 27-30). 다양한 시민들을 만나는 활동을 하면서 ‘우리’ 정체성에 포함되는 대상이 넓어지고 다양화되는 경험이다. 초점집단B와 중첩되는 또 하나의

년단체들에서 활동하면서 단체 설립이나 협치 참여 등이 “되게 빠르게 성장”하긴 했지만 여러 한계점을 많이 느꼈다고 했다. 참여자들은 커뮤니티에서 모임 이상의 공동의 활동을 할 동력이 없는데,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하는 데도 한계선이 있고, 공무원들은 비협조적 태도여서 여러 방면에서 적극적 행동이 어렵다고 했다(FG-C: 48).

서울시에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오랫동안 활동해온 C-3은 현재 시민사회 영역의 변화 방향에 관해 “개인적으로 굉장히 비관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그동안 서울시에 많은 혁신 정책이 도입되었지만 “과거보다 운동성이 많이 퇴화”했다는 점을 짚었다. “모임이라든가 뭔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활동을 시작하신” 다양한 ‘주민’은 늘었지만 더 넓은 사회적 문제들에 관심을 갖는 “시민”이 보이지 않는 모습들을 저는 많이 보았”다는 것이다. 더구나 정부·지자체가 “종합적인 전망과 비전도 없는 상황에서 계속 사업비만 지역에다 내리꽂는” 식이어서, “그저 지역에서 받아 안다 보니 지역은 오히려 더 사업비 받는 경쟁 구도로 가게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FG-C: 50).

그처럼 지역 시민단체들이 확장된 공익적 기여에 대한 관심이 약하다 보니 ‘시민 없는 시민단체’라는 시선이 자꾸 생기는 것 같다고 C-3은 설명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시민 없는 시민단체’라는 말이 애초엔 뉴라이트 등 보수 세력이 진보 성향의 대형 시민단체들을 비난하는 담론으로 생겨났다면, 지금은 공공의 지원사업으로 유지되면서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없는 소규모 단체들을 가리키는 용어로 그 의미가 변화 또는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결과로 다양한 맥락에서 생겨난 비난 담론이 ‘시민단체’라는 하나의 기호에 뒤섞여 악마화하는 이미지가 형성되고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보게 된다.

참여자 C-1 역시 시민활동이 다양해진 것은 긍정적인 변화지만 “사회를 좀 더 낮게 만들고자 하는 집합적이고 조직적인 힘”이 너무 약해졌다고 평가했는데, C-1은 비개혁적 단체들이 늘어나는 문제보다 운동단체들 자신의 내적 약화, 특히 운동단체들의 독립적 기반이 약화되어 “활동가들도 파편화된 개인들이 되는” 경향을 우려했다. “그래도 이 공동체랑 같이 가면 미래에 굳이 고민할 필요 있겠어, 친구들이 있고 동료들이 있는데,” 그런 문화가 없고 그 대신에 “여기서 생존해야 하는 거죠. 내가 더 잘 나가야 되고 최소한의 어떤 먹고 살 것을 마련해야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정부 사업 나오면 경쟁하고 서로 헐뜯게 되고 막 그렇게 되는” 경향이 생긴다는 것이다(FG-C: 52).

이어서 참여자 C-2는 자신의 활동 경험에서도 “사회적인 활동 자체는 되게 늘어났고 다양화” 되었지만 “우리가 사회적인 활동을 꼭 해야 되냐?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왜 지원사업 안 주냐, 나 지원서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얘기들만 좀 많이 나오는 거 보면서 기초 인식 자체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고 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 바로 세우기’를 모토로 박원순 서울시의 마을 정책들을 없애고 있는데도 시민들의 저항이 없는 현실을 언급하며, “그만큼 우리의 삶에서 멀어져 있었던 시민운동을 했었던 건가?”라는 질문을 던졌다(FG-C: 57).

전반적으로 시민사회 현황에 대한 초점집단C 구성원들의 인식은 ‘넓어지고 약해졌다’는 진단으로 모아졌고, 이는 초점집단A의 여러 구성원이 최근 수년 간 페미니즘, 기후, 차별, 평화 등 여러 이슈에서 새

로운 대중행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측면을 강조했던 것과 비교된다. 초점집단A의 구성원들은 그에 비해 시민사회의 온전한 저변이 넓어진 측면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었다.

3) 시민사회의 문제와 혁신 과제

지역 시민운동의 동력과 영향력 한계

초점집단C의 참여자들은 시민사회 현실의 제반 문제에 관해 토론을 이어가다 '지역'이라는 주제로 심화시켰다. 이 주제를 제일 먼저 꺼낸 C-3은 이른바 “공중전과 현장이 결합되어야 이게 지역사회 문제로 해결되고 시민들의 효능감도 맞고 시민들이 직접 후원하는 회원으로 참여를 할 텐데” 지금 운동들이 그런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지적을 했다. C-3은 단체들이 “지역사회에 발 딛고 사는 시민들의 다양한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해주지 못하는 그런 한계”를 극복하여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이상 지역운동에서 뭔가 희망을 내다볼 수 있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이런 문제의 배경으로 단체들의 재정 상황이 너무 열악한 나머지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더 나은 방식의 운동이나 활동을 고민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보았다(FG-C: 59).

이 대화의 연장선상에서 C-4는 “이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희생을 감수해야 될 수밖에 없는 구조”(FG-C: 61)를 언급했다. 활동가들이 생계를 접고 지역사회 공익을 위한 활동을 할 수는 없는 것인데 그 활동에 대한 “보상체계”를 제도화하는 것도 어렵다는 것이다. C-4는 구성원들이 취업 준비나 직장 일을 하면서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을 병행하는 것이 너무 힘든 상황에서, 협동조합 같은 단체도 단순 모임 이상의 수준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이제 점점 더 흩어지고, 커뮤니티로서는 남아 있지만, 우리가 뭔가 그 이상의 활동은 할 수 있는 동력이 아예 없는 거죠.”(FG-C: 61)

비관적인 발언이 계속되자 C-2가 긍정적인 면을 함께 보자고 제안했다. 과거 운동은 조직적인 ‘동원’이 있었다면 지금은 다양한 협치 기구에서 “당사자들의 직접 참여를 통한 해결”이 시도되고 있는 만큼, “내가 문제해결의 주체가 되는 경험들”, “그런 것들이 계속 됐을 때 가능성이 있다”고 낙관했다. 그러나 여기서 곧바로 다시 그 한계에 대한 발언이 뒤따랐다. “근데 이게 또 한편으로 그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들을 사실 시민사회가 같이 만든 건데 그게 행정의 성과가 된단 말이죠.” 여기서 C-4가 개입했다. “공무원들이 상을 받아요. 그게 너무 어이없는. 청년정책에 청년들이 이렇게 했는데 상은 공무원들이 받는.” C-2가 다시 말을 이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듣는 얘기들은 너네들 세금 먹는 단체, 사회적 인식이 그렇잖아요.”(FG-C: 63)

C-4는 지역 청년 공동체에서 많은 활동을 해왔는데, 청년단체 활동가들이 오랜 세월 노력하여 ‘청년’이라는 의제를 일궈 놓았더니 지자체가 청년단체를 배제하고 관에 부담을 주지 않을 청년들로 판을 채

우더라는 얘기를 했다. 지자체에서 청년들을 부르는 자리에 청년 활동을 해보지 않은 청년들만 초대하면서, 강성이고 불만을 얘기할 것 같은 활동가 청년들은 ‘청년’을 위한 공적 무대에서 배제당하는 경험이 있다는 것이다(FG-C: 63-64). 이렇게 초점집단C의 참여자들은 지역운동의 참여 시민들이 자신의 생계나 구직을 위한 본업과 병행하면서 힘들게 지역사회 개선을 위해 활동하면, 그 결실이 지자체의 성과가 되거나 이익추구 집단들의 몫으로 변질되는 현실을 공통되게 이야기했다.

4) 시민사회의 정치적 영향력

시민단체와 정치권의 공생과 갈등

시민단체들의 정치적 영향력에 관한 대화 주제에서 초점집단C의 토론은 시민단체 인사들과 정치권의 연계에 관한 비판적 발언이 중심이 되었다. C-3은 지역 시민활동을 하면서 기존 시민단체들이 내부적으로 타락하고 정치·행정 권력과 결탁해 있는 모습을 본 부정적 경험들을 토론했다. 예를 들어 시민운동 단체에 “운영위원회 멤버십을 가지고 자기 네이밍을 가지려면 그걸 유지하는 회비를 내고 있고 도의회 의원들이 그걸 획득하기 위해서 운영위원으로 참여”하는데 이 단체가 “실제 지역에서 운동에 별로 앞장서서 하시는 게 아무 것도 없는” 단체라는 것이다. 그 대신에 “구청 가서 휘두르고 의회 가서 휘두르고 행정 직원들 만나서 휘두르면서 개인 정치력으로 그렇게 발휘하시는 모습들”에 불만을 표했다(FG-C: 85).

하지만 이와 달리 C-1은 시민단체와 정치권 간의 공생 관계가 또한 불편한 긴장 관계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덧붙였다. 예를 들어 시민단체 인사들과 정치권 인사들이 “대학교 선후배로 다 엮여 있고 자기 들끼리 만나서 친하게 지내고” 하는 측면이 있지만, “그것은 꼭 그렇게만 볼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도 맞는 게, ... 우리의 목소리를 독자적으로 낼 수 있어야 되는데 하면서 고민하시는 것도 많이 봤고, 그 안에서 힘겨운 싸움들도 눈에 보이고, 그렇게 좀 혼란스러운 것 같다”는 것이다(FG-C: 87). 시민단체와 정치권 간에 인적 연결망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가운데 또한 시민사회의 독립성을 추구하고 고민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다.

참여자 C-4는 것처럼 시민단체의 독립성이 중시됨에도 불구하고 정치권과의 불편한 공생이 형성되는 배경에 대한 의견을 이야기했다. C-4는 그것이 개인의 영달을 위한 것도 아니고, 순전히 공익적 목적을 위한 협력도 아니며, 무엇보다 단체의 ‘생존’을 위한 것이라고 보았다. “특정 시민단체들이 정치인들과 되게 가깝게 호흡하면서” 정치인들이 “사업을 몰아다 준다든지 그런 거 되게 많이 봤어요.” 그렇게 “정치인들이 그들을 보조해주면 또 그들은 정치인들이 선거 나갈 때 보조를 해주고 이런 일종의 ...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는 걸로 보인다는 것이다. 거기에 “아예 공익적인 목적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 결국에는

여 예산 1위 달성' 같은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거기에 참여하는 시민활동가들을 강하게 압박하고 “정말 나를 갈아 넣듯이” 일하게끔 만드는 구조가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거쳐 왔던 게 의미는 있고 어떤 발전적인 것들은 보이긴 하지만, 결국 그것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잘 정착하는 것은 다 실패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FG-C: 98)

한때 공무원이기도 했던 C-4는 “공무원 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봤고, 현재 협치 부서에서 일하는 많은 공무원은 “시민들을 위해서 활동하기보다는 어떤 규정, 감사, 이런 것들에 매몰”되어 있고 “순환보직을 계속하다 보니까 ... 그냥 편하게 있다 가자, 이런 것들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협치에 관련되는 “그 분야에 대해서 감수성이 있거나 그 의제를 정말 관심 있고 잘 아는 사람들이 그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FG-C: 102). 이에 C-3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거 같아요. 누구를 만나느냐.”라고 했고, C-1은 심지어 “그해 사업의 성공 유무는 담당 공무원에게 달려 있다”고까지 했다(FG-C: 103-105). 이상과 같은 경험들은 오늘날 ‘협치’의 현실이 동등한 협력 관계의 제도적 시스템으로 가동되기보다는, 자원을 가진 행정기관 행위자의 자의성에 시민사회 행위자들이 종속되는 측면이 있음을 시사한다.

참여자들은 궁극적으로 이와 같은 행정기관의 성과압력의 배후에 의회가 있다고 보고 있었다. 참여자 C-1, C-2, C-3은 지방의회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같은 자리에서 “완전히 정량평가에만 매몰”되어 있고(C-3), “의원들이 그냥 그런 자리가 다 호통 쳐야 되는” 자리로 알고 있는(C-2), 그리고 “숫자가 호통 치기 위한 객관적 근거”(C-1)로 활용되고 있는 현실을 연이어 성토했다. 이런 대화 끝에 결론적으로 C-3은 “의회가 바뀌지 않으면 행정에서 민간을 쪼는 방식이 계속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면서, 이러한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한 시민들의 “정치적 힘”, “시민력”이 없이는 현재의 ‘협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표했다(FG-C: 112-117).

6) 시민활동가의 정치 진출

‘청년 정치’의 구조적 딜레마

초점집단C에서는 세 번째 주제인 시민사회의 문제를 물었을 때 일찌감치 마지막 주제인 시민활동가의 정치 진출 문제가 길게 토론되었다. 그만큼 참여자들이 이 주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다. 참여자 C-1은 시민사회의 극복되어야 할 문제를 질문 받았을 때 제일 먼저 말한 것이 ‘정치와의 관계’였다. 실은 시민사회의 단체들은 제도정치에 의해 무시되고 배제되는데, 일부가 “개인의 입신양명으로 가는, 그러니까 점점 더 그게 눈에 많이 보이게 되니까” 전체가 신뢰를 잃게 되는 현실이라는 것이다. 그런

못하는 상황에서 정치 쪽으로 나아갈 기회가 생기면 “그런 유혹은 쉽게 뿌리칠 수 있을까?”라고 물었다. 하지만 오늘날 청년정치의 현실은, “우리가 분명 같이, 함께 해놓은 건데 그것들을 자기가 무슨 분과장, 위원장 [같은 걸] 정치적인 기회로 삼아서 나아가고, 그런 것들을 볼 때 회의감이 드는” 상황이라고 했다 (FG-C: 81). 요약하면, 활동가들이 정치로 진출하는 여러 배경 맥락이 있고 정치 진출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 현실에서 그러한 정치 진출이 바람직한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다.

4. 초점집단 A, B, C 비교

1) 세 초점집단의 공통점

사회운동, 민관협치, 사회적 경제에 무게중심을 둔 세 집단을 관통하는 공통된 인식이 몇 가지 점에서 발견되었다.

- (1) 참여자들은 ‘시민단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많은 시민에게 각인되어 있는 현실을 이야기했다. 그 내용은 권력화, 정치권과 결탁, 정부 지원에 의존, 정부 비판에 치중 등 다양하며 상호 모순되기도 하다. 이런 이미지가 생겨난 원인과 배경에 대해선 각기 다른 설명이 있었지만, 그것이 시민과의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에는 모두 동의했다.
- (2) 시민사회 현황과 추이를 단면적으로 비판하거나 낙관하지 않고, 상반된 경향이 공존하는 현실을 균형 있게 보아야 한다고 모든 집단이 강조했다. 특정 운동 부문이 침체되지만 다른 부문은 과거 어느 때보다 활발할 수 있고, 운동단체는 어려움을 겪더라도 비조직적 형태의 시민참여는 고조될 수 있다. 시민사회의 참여자 외연이 확대되는 동시에 그 개혁성과 결집력은 약화될 수 있다.
- (3) 시민사회와 정치·행정과의 관계에서 시민사회 단체가 정부·정당·행정기관과 협력하는 것, 공공의 지원을 받는 것, 시민활동가가 정치에 진출하는 것에 대해 원칙적인 동의가 있었다. 그러나 민관협치 참여, 정부 용역사업 수행, 정당 취업이나 정치인 지망이 현실에서 부정적 사례를 많이 남기고 있다는 데 대한 우려와 실망, 비판 역시 모든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2) 세 초점집단의 차이점

세 집단은 몇 가지 점에서 주목할 만한 차이를 나타내기도 했다.

- (1) 시민사회의 의미와 시민사회 구성원으로서 집합정체성을 이해하는 방식에서, 초점집단A의 참여자들은 시민과 괴리된 시민단체들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데에 집중했고, 그에 반해서 최근 활발해진 새로운 사회운동의 흐름을 적극적으로 평가했다. 그와 달리 초점집단B와 초점집단C는 시민단체들이 시민과 괴리되는 것을 마찬가지로 비판했지만, 지난 십여 년 간 시민사회 구성원의 외연이 확대되고 다양화된 구조적 변화의 긍정적·부정적 함의를 활발히 토론했다.
- (2) 오늘날 한국 시민사회의 문제와 향후 극복할 과제를 논하는 데에서, 초점집단A와 초점집단B는 시민사회 단체 내부의 조직문화, 위계에 의한 인권 침해, 과도한 노동 강도와 경제적 보상의 부족,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을 보는 세대 간 차이를 심각하게 우려했다. 한편 초점집단B와 초점집단C는 시민사회 구성원의 확장과 다양화라는 긍정적 변화의 이면에, 참여의 지속성과 결집력, 개혁적 역량이 약화되는 문제를 중요시했다.
- (3) 민관협치 참여와 공공의 지원에 대하여, 초점집단A는 모든 단체가 재정 자립을 하는 것은 시민들의 후원 의지가 제한되어 있는 현실에서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며 또한 시민들의 후원에 의존하는 것이 운동의 개혁성을 약화시킬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공공 지원의 확립을 강조했다. 그에 반해 협치와 공공지원, 용역사업의 경험이 많은 초점집단B와 초점집단C의 구성원들은 현실에서 시민사회와 공공의 접촉면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비판에 집중했다.

초점집단면접에서 참여자들에게 질문한 6개의 주제 영역에 관해서 3개 초점집단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표로 요약하면 아래 <표 18>과 같다.

〈표 18〉 초점집단면접 분석결과 요약

	초점집단 A	초점집단 B	초점집단 C
① 시민사회 의미와 자기정체성	직업으로서의 활동, 노동자로서의 활동가	시민사회의 참여자 외연 확대, 내적으로 다양성과 이질성 증가	
	시민들과 괴리된 시민단체라는 이미지		
② 시민사회 현황과 추이 평가	참여방식의 변화, 비조직적 이슈캠페인	참여자 확대와 다양화, 지속성과 결집력은 약화	시민사회의 외연 확대, 사회구조적 비판과 개혁의 역량은 약화
	페미니즘, 기후, 차별, 평화 등 시민참여 활발		
③ 시민사회 문제와 혁신 과제	노동강도, 정파주의, 생계 불안, 세대 갈등	단체 정기후원 줄고 이슈 중심 참여 증가	지역 시민단체의 운동성 약화, 행정기관에 무력
	조직문화와 위계에 의한 인권 침해의 문제		
④ 시민사회의 정치적 영향력	정치적 영향력 약화, 또는 정당과 결탁 통한 영향력 행사는 위험	시민의 지지 여론, 또는 협치 참여 통해 정치적 영향력 확대	시민단체와 정치권의 협력과 긴장 관계가 공존
⑤ 민관협치와 공공 지원	재정 자립이라는 당위론보다 공공 지원의 확립 필요	다수 단체는 공공 지원 의존 않거나, 소액 지원금에 과중한 업무	현실에서 협치는 의회와 행정기관의 성과압력 장치가 되고 있는 문제점 심각
⑥ 시민활동가의 정치 진출	활동가의 정당 취업과 정치인 지망 증가, 시민사회 전망 부재	활동가들 개인화된 정치 진출의 문제점, 집단적 결실의 개인화	운동 지속 어려워 정치 진출 하지만 기성 정치에 편입되고 있는 현실

한국 시민사회의 새로운 흐름에
대한 질적 면접 연구

아름다운재단 기획연구

VI. 결론과 제언

VI. 결론과 제언

이 연구는 시민활동의 다양한 의제와 제도 부문에서 새로운 지평을 개척해온 전국 여러 지역의 활동가들과의 질적 면접조사를 통해서, 한국 시민사회의 현황과 문제, 미래의 과제와 혁신의 잠재력에 관한 이야기를 청취했다. 마지막 VII장에서는 결론적으로 이 연구의 심층면접 및 초점집단면접의 분석결과를 관통하는 열 가지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향후 한국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실천 과제 또는 토론 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는 시민사회의 확장과 다양화가 갖는 함의다. 이 연구의 면접참여자들은 시민사회의 새로운 흐름의 특징을 기술하거나 지난 십여 년 간의 변화의 핵심을 정의할 때 ‘다양성’을 반복해서 강조했다. 활동의 목표, 의제, 조직형태, 방식, 인적 구성의 다양성은 21세기 한국 시민사회의 확장과 다양화라는 구조적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자, 또한 그러한 변화를 만들어온 요인이기도 하다. 그 같은 구조적 분화는 시민사회가 더 풍부해지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시민사회의 내적 이질성과 이견, 갈등, 분산과 고립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뜻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여러 면에서 이질적인 참여자들의 연대가 어떻게 가능한가, 어떻게 공동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이 점점 중요해진다.

둘째는 ‘시민운동’ 이후의 정체성 문제다. 심층면접과 FGI에서 거듭 확인된 사실은 ‘시민사회’, ‘시민운동’, ‘시민단체’ 등의 용어가 오늘날 젊은 세대 활동가들에게 생소할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는 종종 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각인되어 있다는 것이다. 독재 시기에는 ‘민주화운동’ 또는 ‘민족·민중·민중운동’, 그리고 민주화 후에는 ‘시민운동’ 같은 정체성 개념들이 다양한 참여자 집단을 ‘우리’로 묶어주는 중심 상징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시민운동’은 확장된 시민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을 아우를 수 있는 개념이 되기 어려울 뿐더러 심지어 일반 시민들에게 시민운동의 목표와 활동을 올바르게 전달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언어가 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된 현실에서 오늘날 고도로 분화된 시민사회의 다양한 부문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집합정체성 개념과 담론을 창출하는 과제가 이번 연구에서 부각되었다.

셋째는 개인성, 자발성, 주체성이라는 가치의 중요성이다. 이 연구의 면접참여자들은 젊은 세대의 시민활동 참여자들에게 공통된 문화적 특성으로 이러한 가치들을 언급했다. 개개인들의 의사와 욕구를 존중하는 조직문화, 조직을 위한 헌신을 요구하기보다 자발적 동기를 총화하는 단체, 참여자들의 주체성을 실현할 수 있는 운동이 점점 중요시된다. 젊은 세대가 시민사회 활동에 지속적이고 열성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려면, 시민사회 단체들이 이러한 가치들을 존중하고 독려하는 공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와 더불어 개인들의 다양한 욕구와 의사를 중시하면서도 강한 유대와 공동의 비전을 만들어내는 것이 향후 해결해야 할 어려운 과제로 등장했다.

여덟째는 민관협력 거버넌스와 사회적 경제의 미래에 관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 민관협치와 사회적 경제는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언급이 팽팽하게 맞선 주제였다. 면접참여자들은 한편으로 정부·지자체의 협치 기구가 시민참여의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활동가가 탄생하고, 활동가들의 정책 역량이 신장되며, 활동가들 사이에 유대와 연결망이 형성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진술했다. 또한 사회적 경제 역시 시민들이 사회적 가치에 다가가고, 본격적인 공익활동의 삶으로 나아가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그와 더불어 행정 부문의 성과주의와 관료주의, 정부·지자체의 필요에 따른 사업 시행, 사회적 경제 부문에서 사회적 가치가 실종되는 현실, 공공재정을 부당하게 취하는 사이비 시민 단체의 존재 등 여러 문제가 심각하게 거론되었다. 이러한 현실은 민관협력 거버넌스와 사회적 경제의 존재이유를 의문시하게 하고 그것의 긍정적 잠재성까지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일면적인 옹호나 거부가 아니라 능동적인 대안 수립이 긴급하다.

아홉째는 시민사회와 정치의 관계 설정 문제다. 심층면접과 FGI의 참여자들 중에 시민사회와 정치의 관계에 관해 발언한 모든 사람은 시민사회 리더와 활동가들이 시민사회 단체를 떠나서 정치인이 되거나, 정당의 당직자로 취직하거나, 정부·지자체의 공무원이 되거나, 고위공직자로 봉사하는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했을 뿐 아니라 그것의 긍정적 역할을 기대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들 중 다수는 오늘날 현실에서 시민사회 구성원들이 개인적 차원에서 정치에 진출하여 긍정적 사례를 남긴 적이 많지 않을 뿐더러, 오랜 집단적 노력에 의해 달성한 성과가 특정 개인에게 돌아가고 단체는 약화되는 경향에 강한 불만과 우려를 표했다. 대부분 청장년층 연령대인 이 연구의 면접참여자들은 앞세대 시민사회 리더들이 정치권과 비판적 거리를 갖지 못한 사례들을 비판하면서, 마찬가지로 문제가 지금 청년 정치에서 반복되고 있음을 안타까워했다. 기성정치권이 시민들의 신뢰를 잃은 현 상황에서, 청년 정치인과 활동가들이 이 같은 현실을 적극적으로 성찰하고 대응하여 정치-운동 선순환 경로를 개척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끝으로 열 번째는 지속가능한 시민사회 활동을 위한 실천 과제다. 조직문화는 관료적이고 권위주의적이며, 노동강도와 스트레스는 엄청나게 높고, 기본적 수준의 소득보장도 되지 않는 곳이 시민사회 단체들이라면, 활동가들은 여기서 계속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 이 연구에서는 실제로 오늘날 많은 젊은 활동가들이 청년기의 일정 시기 동안 시민사회 단체에서 일을 한 뒤에는 이 부문을 떠나 정부·지자체, 기업, 정당 등으로 가고 있다는 진술을 여러 차례 접했다. 이러한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시민사회 단체들, 특히 상대적으로 많은 자원을 갖고 있는 대형 단체들이 이상의 여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으며, 공공과 민간의 지원기관들 역시 사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데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이 연구에서 거듭 확인된 요청이었다. 궁극적으로 시민사회라는 제도적 장이 시민들에게 매력적이게끔 만드는 것은, 현재 시민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들이 이 면접 연구에서 거론된 여러 문제와 과제들을 진지하게 성찰하고 변화를 위한 행동에 나선 때일 것이다.

한국 시민사회의 새로운 흐름에
대한 질적 면접 연구

아름다운재단 기획연구

참고문헌

참고문헌

- 건강세상네트워크. 2020. 『서울시 시민사회 코로나 대응사례 기록을 위한 수집 및 분석: 지역사·시민사회 활동을 중심으로』. 서울시.
- 공석기·유지연. 2017. 「한국비영리섹터 지형분석」. 제17회 기부문화심포지엄 발표 논문.
- 공석기·임현진. 2016. 『한국 시민사회를 그리다: 시민사회 단체 기초통계 조사』. 진인진.
- 국토교통부. 2021. 『2020년도주거실태조사 - 일반가구 연구보고서』. 국토교통부.
- 김기태. 2013. 「시민운동의 확장과 변모 - 사회적 경제활동의 모색」. 『황해문화』 78.
- 김동택. 2017. 「풀뿌리 민주주의의 제도적 기반: 사회적 경제를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NGO』 15(2).
- 김동택·공석기외. 2020. 「민주적 거버넌스 관점에서 본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체계의 특징」 한국국제협력단 연구보고서.
- 김성주. 2020. 「코로나 19가 미친 비영리단체 영향에 관한 인식조사」. 아름다운재단.
- 김소연·오현순·조철민 외. 2019. 『서울시 시민사회 활성화 조례와 기본계획 수립 연구』. 서울시NPO지원센터.
- 김소연·신권화정·류홍번 외. 2020. 『한국 시민사회 관련 법제도 현황, 쟁점과 과제』. 사단법인 시민.
- 노대명. 2009. 「사회적 경제를 강화해야 할 세 가지 이유 - '생활세계의 위기'를 넘어」. 『창작과 비평』 145. pp. 73~93.
- 동행. 2019. 「공익활동가의 지속가능한 삶과 활동을 위한 지원방안 수요조사」. 서울시 NPO 지원센터,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 동행.
- 박병춘. 2015. 「시민사회 단체의 법적 조직 형태」. 『지역사회연구』 23(4).
- 박상필. 2013. 「한국 시민사회의 현황과약을 위한 연구모델의 개발」. 『기억과 전망』 29.
- 박영선·정병순. 2019. 「시민사회 생태계 진단과 활성화 정책 방향: 새로운 공익활동 주체 중심으로」. 서울연구원.
- 박준·김성근. 2019. 「시민주도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사회역량 강화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2019-09.
- 보울즈, 새뮤얼. 2020. 「도덕경제학: 왜 경제적 인센티브는 선한 시민을 대체할 수 없는가」. 박용진 외 옮김. 흐름 출판.
- 신진욱. 2008. 「구조해석학과 의미구조의 재구성」. 『한국사회학』 42(2): 191-230.
- 신진욱. 2019. 「1987년 이후 30년, 한국 민주주의의 궤적과 시민정치 변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획. 『한국 민주주의, 100년의 혁명, 1919-2019』. 한울.
- 신진욱·정보영. 2022. 「한국 시민사회의 성장, 위기, 혁신의 삼중과정: 전략적 행위장 이론을 통한 구조변동 분석」. 『시민과 세계』 40: 97-140.
- 이은선·석호원. 2017. 「국내 사회적 경제조직의 유형에 관한 연구: 퍼지셋 이념형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7(4).
- 이형진·김승균·권기정·정이채. 2021. 「활동가의 지속가능한 공익활동 지수 연구」. 서울시NPO지원센터·녹두씨알.
- 임지은·김석호. 2018. 「한국인의 상향적 관계 형성 전략이 자발적 결사체 참여에 미치는 영향」. 『조사연구』 19(1): 129-162.
- 조아신. 2021.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의 과제: 낯선 지역들과의 느슨한 연대」. 『월간 복지동향』 267: 19-25.
- 조희연. 2001. 「종합적 시민운동의 구조적 성격과 변화전망에 대한 연구」. 유팔무·김정훈 편,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2』. 한울, 232-258쪽.
- 정상호. 2020. 「불평등 시대의 한국 시민사회 연구: 조직과 가치, 그리고 공론장을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NGO』 18(1): 3-47.
- 정용찬·하윤상. 2019. 「시민주도적 협력적 거버넌스 운영에 관한 연구: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

행정학보』 53(1).

주성수. 2017. 『한국 시민사회사: 민주화기 1987~2017』. 학민사.

주성수. 2020. 『시민사회, 제3섹터, 비영리섹터, 사회적 경제』. 한양대학교출판부.

하승우. 2020. 「지원이 시민사회 활성화의 실마리일까?」. 서울시민연대. 『2020 서울지역 풀뿌리 단체들의 생태지도: 2020년 서울지역 풀뿌리 단체 현황 조사 보고서』. pp. 52~61.

코로나19 타파연대. 2020. 시민사회 영역별 코로나19 대응활동 연구조사 보고서.

2020 NPO 트렌드 리포트. 2020. 『뉴노멀을 준비하는 방법』.

Alexander, Jeffrey C. 1998. “After Neofunctionalism: Action, Culture, and Civil Society.” in: Jeffrey C. Alexander. Neofunctionalism and After. Oxford: Basil Blackwell, pp. 210-233.

Bennett, W. Lance, and Alexandra Segerberg. 2012. “The Logic of Connective Action.” in: Information, Communication & Society 15(5): 739-768.

Bolten, Jürgen. 1985. “Die hermeneutische Spirale. Überlegungen zu einer integrativen Literaturtheorie.” in: Poetica 17(3/4): 355-371.

Choi, Jang-Jip. 2020. “The Democratic State Engulfing Civil Society: The Ironies of Korean Democracy.” in: Korean Studies 34: 1-24.

Collier, David, and John Gerring. 2009. Concepts and Method in Social Science.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Edwards, Michael. 2011. “Introduction: Civil Society and the Geometry of Human Relations.” in: Michael Edwards (ed.). The Oxford Handbook of Civil Society. 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pp. 3-14.

Fielding, Nigel G. and Jane L. Fielding, 1986. Linking Data. London: Sage.

Flick, Uwe. 2004. Triangulation. Eine Einführung. Wiesbaden: Springer Verlag.

Flick, Uwe. 2010. An Introduction to Qualitative Research. 4/e. London: Sage.

Goertz, Gary. 2006. Social Science Concepts: A User’s Guide. Princeton and Oxford: Princeton University Press.

Guba, Egon G., and Yvonna S. Lincoln. 1989. Fourth Generation Evaluation. Newbury Park, CA: Sage.

Jensen, Mark N. 2006. “Concepts and conceptions of civil society.” in: Journal of Civil Society 2(1): 39-56.

Krueger, Richard A. 1989. Analyzing & Reporting Focus Group Results. Thousand Oaks, CA: Sage.

Krueger, Richard A., and Mary Anne Casey. 2009. Focus Groups: A Practical Guide for Applied Research. Thousand Oaks, CA: Sage.

Maier, Florentine, Michael Meyer, and Martin Steinbereithner. 2014. “Nonprofit Organizations Becoming Business-like: A Systematic Review.” in: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45: 64-86.

McAdam, Doug. 1995. “‘Initiator’ and ‘Spin-off’ Movements: Diffusion Processes in Protest Cycles.” in: Mark Traugott (ed.). Repertoires and Cycles of Collective Action. Durham and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pp. 217-239.

Morgan, David L. 1998. The Focus Group Guidebook. Thousand Oaks, CA: Sage.

Noakes, John A., and Hank Johnston. 2005. “Frames of Protest: A Road Map to a Perspective.” in: H. Johnston and J. A. Noakes (ed.). Frames of Protest: Social Movements and the Framing Perspective. London et al.: Rowman & Littlefield, pp. 1-29.

Patton, Michael Quinn. 2014. Qualitative Research and Evaluation Methods. 4/e. Thousand Oaks, CA: Sage.

Powell, Walter W. and Richard Anheier. 2006. The Nonprofit Sector: A Research Handbook. New Haven, CT: Yale

- University Press.
- Ragin, Charles. 1987. *The Comparative Method*.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Salamon, Lester M., and Helmut K. Anheier. 1992. "In search of the non-profit sector. I: The question of definition." in: *Voluntas: International Journal of Voluntary and Nonprofit Organizations* 3(2): 125-151.
- Salamon, Lester M. and Helmut K. Anheier. 1997. "The Civil Society Sector." in: *Society* 34: 60-65.
- Shin, Jin-Wook. 2021. "Changing Patterns of South Korean Social Movements, 1960s-2010s: Testimony, Firebombs, Lawsuit, and Candlelight." In David Chiavacci, Simona Grano, and Julia Obinger (ed.), *Civil Society and the State in Democratic East Asia*. Amsterdam: Amsterdam University Press, pp. 239-368.
- Shin, Jin-Wook. 2022. "Social Movements: Developments and Structural Changes after Democratisation." In Youngho, Cho, Han JeongHun and Ramon Pacheco Pardo (ed.). *The Oxford Handbook of South Korean Politic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Stewart, David W., and Prem N. Shandasani. 2015. *Focus Groups: Theory and Practice*. 3/e. Thousand Oaks: Sage.
- Taylor, Charles. 1990. "Modes of Civil Society." in: *Public Culture* 3(1): 95-118.
- Walzer, Michael. 1991. "The Idea of Civil Society: A Path to Social Reconstruction." in: *Dissent* 39: 293-304.
- Wernet, Andreas. 2006. *Einführung in die Interpretationstechnik der objektiven Hermeneutik*. Wiesbaden: VS Verlag für Sozialwissenschaften.

한국 시민사회의 새로운 흐름에 대한 질적 면접 연구

아름다운재단 기획연구 2022